

■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류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데이터센터장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22. 5. 12.)한 「코로나 19 발생 이후 사회보장 제도 변화 및 정책 과제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요 약	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노동 및 고용 영역 제도 변화	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내용	27
제2절 코로나 19 이후 노동 및 고용 영역의 대응과 평가	32
제3절 합의 및 정책 제언	62
제3장 소득보장 영역 제도 변화	65
제1절 연구 배경 및 내용	67
제2절 코로나 19 이후 소득보장 영역의 대응과 평가	71
제3절 합의 및 정책 제언	110
제4장 사회서비스 영역 제도 변화	1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내용	115
제2절 코로나 19 이후 사회서비스 영역의 대응과 평가	126
제3절 합의 및 정책 제언	167
제5장 보건 영역 제도 변화: 상병수당 제도를 중심으로	175
제1절 연구 배경 및 내용	177
제2절 코로나 19 이후 보건 영역의 대응과 평가	180
제3절 합의 및 정책 제언	206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13
제1절 결론	215
제2절 정책 제언	224
참고문헌	231
부록	237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1〉 고용보험 사업체계	33
〈표 2-2〉 고용보험(실업급여) 개요	36
〈표 2-3〉 근로자 유형별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현황	40
〈표 2-4〉 2020년 이후 고용안전망 관련 주요 진행 상황	41
〈표 2-5〉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추진일정(관계부처합동, 2020, p. 26)	42
〈표 2-6〉 고용보험 제도 변화 분석	45
〈표 2-7〉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지원내용	46
〈표 2-8〉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47
〈표 2-9〉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49
〈표 2-10〉 제도 변화 분석: 국민취업지원제도	54
〈표 2-11〉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유형별 지원 요건	56
〈표 2-1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내용 및 지원 인원	57
〈표 2-13〉 제도 변화 분석: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1
〈표 3-1〉 소득인정액 기준 비수급빈곤층 변화	72
〈표 3-2〉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	73
〈표 3-3〉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규모 변화	74
〈표 3-4〉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변화	74
〈표 3-5〉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 환산율	76
〈표 3-6〉 '20~'21년 추경에 의한 재정지원 내용 및 규모	80
〈표 3-7〉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수준	81
〈표 3-8〉 코로나 19 긴급지원 지원규모	82
〈표 3-9〉 근로장려금 주요 변화(2017년 이전)	87
〈표 3-10〉 근로장려금 주요 변화(2018년 이후)	88
〈표 3-11〉 2022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89
〈표 3-12〉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과 지급현황	90
〈표 3-13〉 보건복지부 통장 개요	101
〈표 3-14〉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안)	103
〈표 3-15〉 자산형성사업 개편 내용	105
〈표 4-1〉 주요 사회서비스 예산 규모 (2022년 기준)	116
〈표 4-2〉 코로나 19 이전 사회서비스 주요 제도개선 추진 과제	119
〈표 4-3〉 코로나 19 전후 자녀 돌봄시간 변화	123

〈표 4-4〉 사회서비스원 현황 (2021년 10월 기준)	129
〈표 4-5〉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현황 (2021년 12월 기준)	134
〈표 4-6〉 아동 돌봄 주요 사업	142
〈표 4-7〉 지역아동센터 현황	144
〈표 4-8〉 다함께돌봄센터 추진 경과	145
〈표 4-9〉 코로나 19 이후 아동 돌봄 관련 법제의 변화	149
〈표 4-10〉 다함께돌봄센터 추진 경과 및 현황	150
〈표 4-11〉 코로나 19 이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	157
〈표 4-12〉 코로나 19 이후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법제의 변화	158
〈표 4-13〉 코로나 19 이후 장애인활동지원 대응 지침	160
〈표 4-14〉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의 주요 급여 내용	162
〈표 4-15〉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시간 변화	162
〈표 4-16〉 코로나 19 이후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제도 개선안	164
〈표 5-1〉 임금근로자의 휴가 제공 현황	184
〈표 5-2〉 취업자 중 지난 1년간 상병 경험자 중 아파서 일하지 못한 날과 일한 날 평균	186
〈표 5-3〉 임금근로자가 아팠는데 출근한 이유 (중복응답 중 1순위 %)	187
〈표 5-4〉 결핵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치료 명령과 생활보호조치	189
〈표 5-5〉 감염병예방법의 유급 휴가 관련 사업주 협조 의무 규정	190
〈표 5-6〉 감염병예방법의 생활 지원 관련 규정	190
〈표 5-7〉 상병과 인구집단 특성에 따른 보상 제도 현황	199
〈표 5-8〉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203
〈표 5-9〉 근로기준법 상 해고 제한 규정	206
〈부표 1〉 소득 영역 법 개정(2020년 1월~2022년 8월)	237
〈부표 2〉 소득 영역 시행령 개정 (2020년 1월~2022년 8월)	243
〈부표 3〉 고용 영역 법 개정(2020년 1월~2022년 8월)	248
〈부표 4〉 고용 영역 시행령 개정(2020년 1월~2022년 8월)	261
〈부표 5〉 사회서비스 영역 법 개정(2020년 1월~2022년 8월)	277
〈부표 6〉 사회서비스 영역 시행령 개정(2020년 1월~2022년 8월)	278
〈부표 7〉 보건 영역 법 개정(2020년 1월~2022년 8월)	279
〈부표 8〉 보건 영역 시행령 개정(2020년 1월~2022년 8월)	288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1-1] 2020년 이후 코로나 19 감염병 발생 상황	15
[그림 1-2] 2020년 상반기 이후 세계 각국의 제도 변화 내용	16
[그림 1-3] 한국판 뉴딜 1.0 및 2.0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	18
[그림 2-1]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변화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소득 변화	27
[그림 2-2] 코로나 19 전후 실업급여 지급 현황 및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28
[그림 2-3] 노동시장 현황	33
[그림 2-4]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향	35
[그림 2-5] 코로나 19 전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및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39
[그림 2-6] 국민취업지원제도 전과 후	48
[그림 3-1] 소득5분위배율 및 상대적 빈곤율 변화	68
[그림 3-2] 상대적 빈곤율 : 전체 및 노인(만 65세 이상)	69
[그림 3-3]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규모	102
[그림 4-1] 장기요양, 가족돌봄 사회서비스 공공지출 비중(GDP 비중)	119
[그림 4-2] 사회서비스 생활시설 입소자 규모	121
[그림 4-3] 여성 퇴직자 중 코로나 19 돌봄 사유 비율	124
[그림 4-4] 코로나 19 초기(20. 3~8월)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수	147
[그림 4-5] 장애인 일상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비중	156
[그림 4-6] 코로나 19 초기 사회서비스 혁신 방향	168
[그림 5-1] 고용형태별 직장 내 병가 휴가 도입률 (%)	183
[그림 5-2] 사업장 규모별 직장 내 병가 휴가 도입률 (%)	183
[그림 5-3] 취업 인구의 성·연령별 프리젠티즘(%) 변동, 2011~2020년	185
[그림 5-4] 취업 인구의 고용형태별 프리젠티즘(%) 변동, 2011~2020년	185
[그림 5-5] OECD 회원국의 자가평가 건강수준(양호함 %)과 임금근로자 평균 결근일 수 (일) 비교	192
[그림 5-6] 복지국가 유형별 노동시장 현황 비교	200
[그림 5-7] 노동자 건강불평등의 설명 모형	207
[그림 6-1]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 19 발생 현황	222



요약

- 2020년 중국에서 비롯된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복지국가들은 위기 상황에서의 가버넌스에서도 한계를 보였고, 오랫동안 구축한 사회보장 시스템의 약한 고리를 노출.
- 감염병의 여파는 전통적인 취약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줬음. Cook & Ulriksen (2021)은 감염병은 기존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새로운 취약성이 부각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로나 발생 이후 전 세계 209개국에서 1700개가 넘는 제도 조정 및 도입이 이뤄졌음(ILO, 2022).
- 한국 정부에서도 2020년 7월과 2021년에 연이어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1.0과 2.0을 발표했다.
- 여기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달성, 산재보험 가입대상 특고 직종 확대,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긴급복지 지원 규모 확대,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최대지급액 지원 대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 등이 제시됨.
- 또, 2020년에만 네 차례, 2021년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실시했으나 대상자 선정 기준, 급여 충분성 등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음.
- 이번 연구에서는 1) 코로나 19 범유행 상황 이후 확인된 한국의 고용 및 보건, 복지제도의 분야별 한계를 점검하고, 2) 그에 따라 이뤄진 분야별 질적·양적인 변화를 확인한 뒤, 3) 이에 근거해서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한가지 확인할 점은 이번 연구의 정책적인 방향은 이전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에 근거해서 제시됐다는 것임.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수립에 있어

참고가 되는 데 목적이 있음.

□ (2장 고용 및 노동) 코로나 19 위기에서 드러난 노동 분야 문제점 및 취약성이 확인됨.

- 특고·프리랜서 등 산재·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 소득 감소에 대응한 현금지원 정책 미흡
- 임시·일용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정책 미흡/부재
 - 취업성공패키지는 소득지원 성격이 미흡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외에 현금 지원 없음.

□ 코로나 19 이후 제도 변화와 성과

-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당연가입), 자영자(임의가입)→예술인(20.12.10), 노무제공자(21.7.1~)로 단계별 확대,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확대(20.7월 이후 9→14→15개 직종, 20.7월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22.7월 현재 전체 1,486만 명) 및 예술인, 노무제공자 가입자 수 증가(21.12월말 기준, 예술인 10.7만 명, 특고 57.7만 명),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22.6월말 기준 1,987만 명으로 확대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취업자의 실업 충격을 완화하는 1차 고용안전망의 역할을 강화,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지속 추진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성공패키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 제도 밖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하는 2차 고용안전망
 - 15~69세(청년은 18~34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2유형은 취업 지원서비스와 취업활용비용을 지원

- 21년 43.2만 명(1유형 34.9만 명) 지원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의 약 2배 수준(취성패 20년 22.7만 명 지원)으로 확대되었으나, 당초의 계획보다 구직활동 요건 및 재산기준이 엄격하여 지원 인원 제한적, 즉 2차 고용안 전망 역할 제한적.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대응 가능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음. 하지만 실질적인 실업부조 역할 위해 구직촉진수당 현실화 및 요건 완화로 포괄성 확대, 고용위기 대응력 제고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임시적인 조치
 -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25% 소득·매출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대상으로 50만~200만원 지원
- 1차 149.7만명, 2차 61.3만명, 3차 68.2만명, 4차 71.5만명, 5차 52.7만명, 6차 75.4만명 지원, 1차 수급자 대상 분석 결과 월 소득 평균 69.1% 감소한 지원 대상에게 생계비 지원 역할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최초의 소득 지원이라는 정책적 의의, 위기 시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공백은 이와 같은 임시적인 조치로 보완

□ 합의 및 평가

-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위기 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정책은 1, 2차 고용안전망, 위기 시 고용보험 사각지대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대상 및 시점에 있어 상호보완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 긴급복지제도의 경우 현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보호하는 대상과 일부 겹치는 점을 고려, 이들 집단의 위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

□ **(3장 소득보장)** 빈곤층과 위기계층 등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해체 등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이며, 이중 소득보장 정책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

□ 공공부조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

- 2019년 1월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정되기 시작하여, 이후 2021년 1월 생계급여에 한해 만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구(30세 초과)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 2021년 10월에는 그동안 제외되어 있던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단, 부양의무자 소득이 1억 이상, 재산 9억 이상은 적용)
- 향후 과제 : 재산기준의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혹은 폐지, 노인빈곤 및 근로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역할 분담

○ 긴급복지지원제도

-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 조건(재산, 금융 조건 등)을 완화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
 - 추가적으로 일시지원제도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한시생계지원 등을 위해 위기가구 지원 확대
- 향후 과제
 - 단기 대응보다 중장기 대응 기조 유지를 통해 위기 가구 위기 극복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을 위한 인프라 부족
 - 긴급복지지원제도 위상 제고
 -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정립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일을 해도 가난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근로유인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으로 여겨지면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 현 정부 국정과제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중 하나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적정수준 상향 및 재산요건 합리화”가 포함
- 향후 과제
 - 근로장려금 역할 명확히 설정 필요. 평시지원 대책 아니면 평시와 위기 상황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확대할 것인지 등 검토
- 외부 사회보장제도 혹은 사회안전망 제도 변화에 따른 향후 방향 모색

□ 사회수당제도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 급여수준 조정
 - 기초연금 급여액 단계적 조정 : 월 30만원(노인소득수준별 조정)
 - 장애인연금 단계별 조정 : 월 30만원(기초보장수급자에서 기초급여로)
- 기초연금 향후 방향으로는 기초연금에 대한 성격에 대한 명확한 설정 : 연금 혹은 공공부조
- 장애인연금의 경우 기초연금과 연동되어 변동하는 것에 대한 위상 정립과 향후 장애인연금 대상을 어디까지 조정할 것인지 검토 필요

○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 양육수당 : 코로나 19를 전후로 양육수당 개편을 추진하여 2022년 만 0~1세 이하 영아수당 월 30만원(2025년 월 50만원), 만2~7세 이하 양육수당 월 10만원 개편.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대체
-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아동이 있는 가구 90%(만 0~6세 미만), 월 10만원으로 되어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 만 8세 미만까지 조정
- 저출산 대응과 자녀 양육부담 해소라는 점에서 현재의 영아수당(향후 부모급여)과 아동수당에 대한 지원대상 및 급여수준에 대한 조정 필요

□ 자산형성지원제도

- 보건복지부는 빈곤층의 탈수급을 촉진하고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
 - 희망키움통장 I (2010년), 내일키움통장(2013년), 희망키움통장Ⅱ(2014), 청년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2020년)가 도입
 - 코로나 발생 이후 한국판 뉴딜 발표를 통해 청년대상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도입
- 정부는 2022년부터 자산형성사업 개편을 추진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 I,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조정
- 자산형성사업 향후 방향
 - 실질적 자산 축적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으로의 발전
 - 자산형성 사업 참여자 대상 재무(혹은 금융) 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 소득 보장 제도의 함의 및 평가
 - 코로나 19 위기 속 위기가구 생활안정에 기여
 -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논쟁이었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 소득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여전한 논쟁
- (4장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돌봄의 사회화 진전에 따라 관련 제도 신설과 인프라 확충이 지속되어 왔으나, 코로나 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광범위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사회보장급여로서의 취약성을 보여주었음
 -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급여로서 노인, 아동, 장애인 돌봄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대인 서비스를 지칭하며, 오늘날 복지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함

-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은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인 노인요양원 및 장애인생활 시설 등 집단생활시설 거주자들의 사망 위험을 높였고, 보편적 서비스인 보육, 방과 후 돌봄,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 돌봄서비스 중단으로 돌봄의 재가족화라는 문제를 야기했음
- 현 사회서비스 제도는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시설격리 보호 그리고 사적 돌봄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하였으며, 돌봄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전달체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음

□ 코로나 19 이후 제도 변화와 성과

○ 사회서비스원

- 사회서비스원의 근거법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21.9.24.)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의 사업으로 재난으로 돌봄 공백 발생 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명시함
- 긴급틈새돌봄의 양호한 실적은 지역사회 돌봄 공백에 따른 관련 수요가 많음을 보여줌. 반면 당초 사회서비스원의 표준 모델인 종합재가센터와 어린이집 직접 운영 사업은 지체 또는 퇴보로 평가됨
-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 공공돌봄의 거점센터로서 주민의 보편적 돌봄권을 보장하고 공공(지자체)의 책무성을 실현하는 사업범위 재설정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변화에 미칠 만큼의 규모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제도 도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코로나 19는 공공 돌봄의 거점기관으로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켰으나, 정책 방향의 혼선으로 표준 모델의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임

○ 온종일 돌봄

- 온종일 돌봄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제도임. 이에 보건복지

부는 아동복지법 개정(2019. 4. 16. 시행)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도 확대하고자 함

- 코로나 19에 따라 초등 방과후 돌봄은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긴급돌봄과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아동양육한시지원)으로 대응되었고, 마을돌봄 확충은 당초 계획에 비해 미진한 실적을 보임
 - 다함께돌봄센터는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518개소가 설치되었고(2021년 6월 말 기준), 지역아동센터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집단시설 운영 대응 지침 이외에 별다른 제도적 보완이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
- 초등돌봄 확충을 위해서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이원화된 운영주체의 다른 이해에 따른 갈등을 해결할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돌봄센터의 관리 주체, 재정 분담, 부처별 사업 분절성, 시설이용 아동의 계층화,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등 제도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함. 온종일 돌봄 체계구축과 비용부담의 지원근거가 명확하도록 법제화가 수반되어야 함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등급제 폐지 이후 이용자 확대('11년 3만 명 → '20년 약 9.1만 명)와 예산 확대('11년 1,928억 원 → '20년 약 1.3조 원)가 이루어짐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음. 노인장애인의 경우 2021년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되었고, 긴급활동지원의 요건에 감염병을 추가하는 등 보장성 강화가 반영됨
- 코로나 19에 따른 조치는 지속적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을 제시하여 긴급활동지원, 특별급여, 가족급여 한시지원 등이 이루어짐
- 장애인활동지원은 여전히 제도 개선사항이 충분치 않고, 발의된 다수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못함

- 서비스종합조사 이후 산정특례 보전, 발달장애인에게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가족돌봄허용, 지역별 격차에 따른 급여 차이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의 대상과 급여가 한정되어 발생하는 문제들은 제도 개선보다는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보완하는 경향으로 고착화되고 있음

□ 합의 및 평가

- 코로나 19 이후 사회서비스 제도 변화는 돌봄의 보장성 강화 방향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보임
 - 방문형 돌봄 구입 그리고 개인이 선택한 시설에 각자 입소하는 사회서비스 체계에서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
 - 사회서비스원, 온종일 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안전망 강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계 제도 개선에 있음을 보여 줌
- 그러나 돌봄 공백의 규모에 비해 공공의 돌봄과 사례관리 체계는 미흡하여, 사회서비스의 분권 주체인 지자체의 정책 계획과 집행 수립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됨
 - 사회서비스 사업별 분절성과 민간 의존성 해소 그리고 효율적 전달체계 개편 노력이 필요함
 -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해야 할 돌봄 사무를 마련하고, 급여의 확대 및 통합성 증진, 지역사회돌봄 시설 확충, 공공돌봄 종사자 확보 과제가 사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사회서비스원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자체 직영시설로서 공공돌봄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이를 위해 민간 지원과 다른 공적 투자가 가능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온종일 돌봄은 지역아동센터 공공형 전환 모델 지원을 확대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운영주체 및 대상의 적절성을 높여, 신뢰할 수 있는 마을 돌

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함

- 장애인활동지원의 보편적 수급권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이 요구됨과 함께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 (5장 보전: 상병수당) 국가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맥락 안에서, 코로나 19 유행이라는 특별한 도전이 가져온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 전개 과정과 그 함의를 살펴봄

○ 상병수당 제도는 취업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공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노동자가 충분한 치료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건강충격으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 또한 기업과 사회 수준에서 프리젠티즘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함.

○ 이런 목적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공적 상병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은 예외적으로 법적 유급병가와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다 존재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에는 1999년 제정 당시부터 임의급여 형태로 상병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었지만,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집행에까지 이르지 못했음. 코로나 19 이전에도 시민사회의 상병수당 도입 요구가 있었고 선거 공약으로 제안되기도 함.

○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2019년부터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을 시작함. 이전에는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상병수당 정책검토를 수행했고, 최근에는 건강보험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상병수당에 대한 정책 연구를 주도해왔음.

□ 이러한 흐름 속에 2020년 코로나 19 대유행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의 창이 열림.

○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취약 노동 계층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됨. 비정규직의 경우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18.7%로, 정규직(59.5%)보다 크게 낮았음(이재훈, 2020).

-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급속하게 확산됨. 시민사회 요구가 커지고, 국회에서도 상병 급여 도입을 위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음.
-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에 발표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준비 및 시범사업 추진’이 포함됨. 그에 따라 제도 설계를 위한 용역 연구 등 후속 조치가 마련되었고, 2022년 7월부터 6개 지자체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음
 -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앞두고 시범사업은 3단계에 걸쳐 시행 예정이며 현재 1단계 사업이 약 11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임.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업자,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 사업장의 근로자가 그 대상이며, 요양형태와 급여기간, 대기기간과 최대 보장일수에 차이를 둔 세 가지 모형으로 구성됨. 급여액은 최저임금의 60%인 일정액 43,960원으로 동일함.
 - 현재 시범사업의 설계가 임금근로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불안정 노동자를 모두 포괄한다는 점에서 건강형평성 증진과 사회 불평등 완화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 수용성, 비용-편익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뒤따르겠지만, 제도 도입 시 반드시 고려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이 존재함
 - 첫째, 법정 유급병가 도입, 산재보험, 장애연금, 긴급복지지원 제도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제도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상병수당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 제도 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함
 - 둘째, 사회연대성 원칙을 준수하고 취업인구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편성을 확보하고 소득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최소한 ILO 협약(C130) 하위 기준을 충족하는 정도가 되어야 함
 - 셋째,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사람 중심성(people centeredness)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수록 정보접근성이나 문해력이 낮은 계

층은 접근하기 어려움

- 넷째, 재원조달의 형평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재원분담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사이의 사회적 대화가 매우 중요함. 또한 국가의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국고지원과 취약집단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다섯째, 제도 설계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이는 효과적 제도 설계만이 아니라 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필수적 요소임

□ (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한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유럽과 같은 극단적인 봉쇄조치 없이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고, 민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완화하면서 소득분배지표를 개선하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고 볼 수 있음.

- 동시에 노동 및 고용, 소득 보장, 사회서비스, 보건 분야의 취약성이 크게 부각되는 계기가 됐고, 관련한 제도들이 변경, 도입되는 과정을 거쳤음.
- 6장에서는 2~5장의 정책 제언들을 정리함. 동시에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제도 변화의 변동 폭을 상대적으로 적게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사회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한 북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사회보장 제도의 제도적·실질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함.

키워드 : 코로나 19, 감염병,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유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원, 온종일 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상병수당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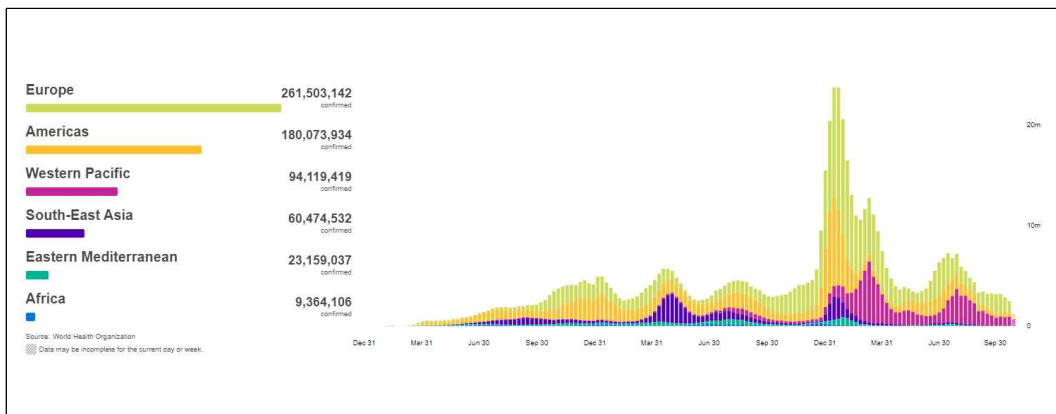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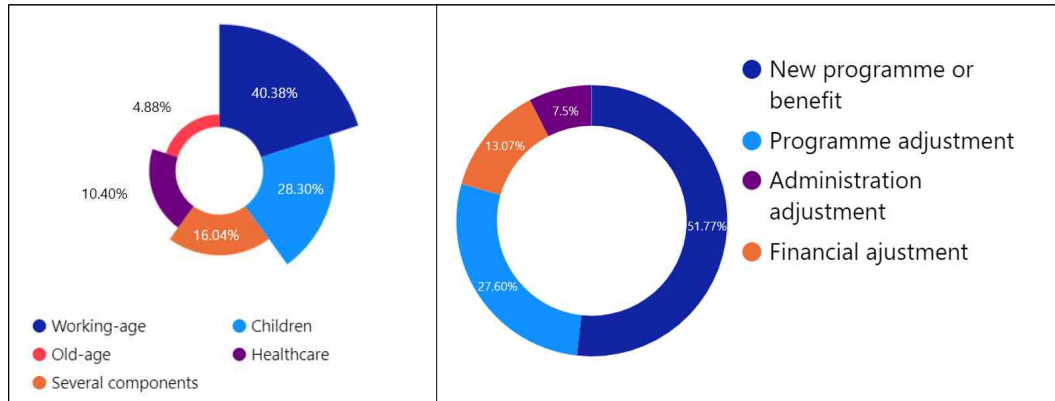
- 2020년 2월 중국에서 코로나 19 감염병이 발발한 이래 그 파장은 전세계를 강타했음. 2022년 11월 현재 확진자는 6.2억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 수는 657만명을 넘어섰음(WHO, 2022).
- 한국도 2022년 11월 4일 현재 확진자 수는 2576만명을 넘어섰음. 11월에도 매일 4만여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 (질병관리청, 2022). 다만, 예방접종률, 중증화율 및 치명률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은 전면적인 봉쇄(lockdown) 없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을 효율적으로 막음. ‘K 방역’ 모델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나, 한국 역시 전염병 범유행 위기에 나타나는 사회경제인 여파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음.

[그림 1-1] 2020년 이후 코로나 19 감염병 발생 상황



자료: WHO (2020) WHO Coronavirus (COVID-19) Dashboard

[그림 1-2] 2020년 상반기 이후 세계 각국의 제도 변화 내용



자료: ILO (2022) Social Protection Monitor

□ 코로나 19 범유행은 지구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포괄적 위기였음. 2020년 상반기에 전 세계 국가의 95%에서 1인당 GDP가 동시에 감소한 사건은 현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초유의 사건 (Tooze, 2021).

○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대공황보다 심각한 경기 침체를 예상하며 ‘Greater Depression’을 예견함 (Roubini, 2020)

○ 2020년 전세계적으로 GDP는 3.4% 감소하고, G20 국가들 역시 GDP가 3.1% 감소. 한국은 2020년 GDP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했으나, 0.9% 감소 (기획재정부, 2021). 2021년 대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는 그나마 빠른 회복세를 보였음. 세계 경제는 6.1%, 선진국 경제는 5.2%, 한국 경제는 4.1% 성장. (기획재정부, 2022).

○ 그러나, 경제적 지표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저임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 여건 상승으로 이어졌는지는 살펴볼 문제임.

□ 전세계적으로 복지국가들은 위기 상황에서의 가버넌스에서도 한계를 보였고, 오랫동안 구축한 사회보장 시스템의 약한 고리를 노출. Tooze(2021)은 이를 울리히 벡의 입을 빌려 ‘조직화된 무책임’ (organized irresponsibility)라고 칭함.

○ Pereirinha and Pereira (2021)은 복지국가들 모두 동일한 감염병 위기 상

황에 처했지만,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기존의 실업자 및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소득 보장 정책을 조정하면서 위기 상황에 그나마 효과적으로 대응한 반면, 남유럽 복지국가들은 위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평가.

- 코로나 19 감염병의 여파는 전통적인 취약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줬음. Cook & Ulriksen (2021)은 감염병은 기존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새로운 취약성이 부각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
- 한국에서도 감염병 확산이 여파는 초기에 콜센터 노동자, 배달 노동자 등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음. 이들의 노동 여건 및 사회보장 사각지대 문제가 드러나는 계기가 됐음.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적 돌봄 공백을 낳음. 10~17세 아동 가운데 코로나 19 감염병 발생 이후 방과 후 혼자 있거나 아동끼리만 있는 비율이 70%를 넘는 등 돌봄 공백의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됨.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는 일자리 충격 및 소득 감소 → 수요 위축 → 대량실업의 우려를 낳음.
- 전 세계 국가들에서 범유행 상황은 사회보장의 약한 고리를 노출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의 계기가 되기도 했음. 2020년 초 코로나 19 범유행 상황 이후 전 세계 209개국에서 1700개가 넘는 제도 조정 및 도입이 이뤄졌음(ILO, 2022).
- 그 가운데 약 52%는 범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 조치들이었고, 나머지는 기존의 제도들을 변용해서 적용한 것. 절반에 가까운 조치들은 근로 연령대를 대상으로 했음.
- 한국도 2020년에만 네 차례, 2021년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실시했으나 대상자 선정 기준, 급여 충분성 등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음

[그림 1-3] 한국판 뉴딜 1.0 및 2.0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



자료: 한국판 뉴딜 누리집 (www.knewdeal.go.kr)

□ 전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위기는 취약계층이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데, 이는 다시 역설적으로 복지국가를 강화하거나 개혁하는 계기가 되었음(Farnsworth and Irving, 2011). 1930년대 대공황,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지난 2007~2008년 금융위기는 기존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노출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의 계기가 됐음.

○ 특히 감염병 위기는 사회정책의 진전을 이뤄내는 성과로 이어졌음. 19세기 콜레라는 미국에서 녹지 공간을 넓히고, 런던에는 하수도를, 파리에겐 쾌적한 도시 공간을 만드는 계기가 됐음.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은 미국 공공주택 건립의 계기가 됐음.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서도 2020년 7월과 2021년에 연이어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1.0과 2.0을 발표했다.

○ 뉴딜 1.0에서는 고용·사회 안전망에 22.6조원을 투입하고, 1) 전국민 대상 고용 안전망을 구축(전국민 고용보험 달성, 산재보험 가입대상 특고 직종 확대),

2)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긴급복지 지원 규모 확대,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최대지급액 지원 대상 확대 등), 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 안정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 등)을 제시함.

- 2021년 7월 발표된 뉴딜 2.0에서는 고용 사회안전망에 더해서 청년 정책과 격차 해소 정책을 추가함. 1) 청년 정책에서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 저축 계좌,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 주거비 지원제도 연장 및 2)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한부모, 노인을 위한 돌봄 제도 확충안을 제시.

2. 연구의 목적

- 이번 연구에서는 1) 코로나 19 범유행 상황 이후 확인된 한국의 보건·복지제도의 분야별 한계를 점검하고, 2) 그에 따른 이뤄진 분야별 질적·양적인 변화를 확인한 뒤, 3) 이에 근거해서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대상 범주는 고용, 소득, 서비스, 보건으로 한정. 범주별 정책의 진전 혹은 정책이 코로나 19 감염병 변수로만 파악하기는 힘든 한계는 존재함. 정부에서 감염병 발생 이전 상황에서 이미 추진 중이던 제도들이 계획대로 집행된 사례들도 존재. 보건의 경우, 제도적인 변화가 가장 컸던 상병수당으로 초점을 좁힘.
- 이에 따라 이번 연구의 평가는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사회정책의 발전 혹은 정책의 양상에 대한 평가와 일부 중복될 수 있다는 점도 밝혀두는 바임. 따라서, 이번 연구는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의’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제도 변화 및 성과 연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함.
- 이번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회성 지원도 일부는 위기 상황에서 상당한 기능을 했고, 일부는 제도로 정착했음을 고려해서, 분석 대상에 포함.
- 한가지 확인할 점은 이번 연구의 정책적인 방향은 이전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에 근거해서 제시됐다는 것임.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이번 보고서는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수립에 있어 참고가 되는 데 목적이 있음.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 코로나 19 범유행 상황에서 드러난 분야별 문제점, 취약성을 점검. 대상 범주는 고용, 소득, 서비스 및 보건 정책(상병수당) 분야.
 - Cook & Ulriksen (2021)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취약계층의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난 부분과 취약계층에서 목격되는 새로운 문제 혹은 새로운 취약 계층이 포착된 부분이 있는 점을 함께 고려.
- 코로나 19 범유행 상황 이후 한국의 보건·복지제도의 질적, 양적인 변화를 분야별로 확인.
 - 분야별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제도가 보완 및 확장된 부분을 점검. 아울러, 있다면, 제도의 도입 및 확장이 지체된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
 -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변화의 내용을 짚고, 여전히 남는 정책적인 과제를 제시.
- 분야별로 고용 분야를 살펴보면, 제도 변화는 크게 1)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12)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단계적 확대와 2)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취업과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 및 시행임.
 -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2016년 1,266만명 → 2021년 1,456만명). 그러나, 실업부조의 성격에 미달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영업자가 빠진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한계도 있음.

- 소득 보장 분야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 개편(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변경 등), 근로빈곤층 대상 근로장려세제 확대,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아동수당 도입 및 확대의 변화가 관찰됨.
 - 이를테면, 2022년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을 2021년 기준 487만 6290원에서 512만1080원으로 5.02% 인상하고,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대상자 확대 및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은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한 긴급돌봄 새돌봄 등이 있음. 그러나, 서비스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코호트 격리와 이용 시설 휴관 이외에 특별한 지원조치가 병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은 여전히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단계. 사회서비스원은 여전히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이 미진하다는 평가.
- 보건 정책 분야에서는 상병수당의 도입이 가장 큰 제도적 변화. 한국 복지국가는 제도적 외형을 갖추었으나, 상병수당이 유일한 ‘missing puzzle’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보건 분야는 상병수당에 한정해서 연구를 진행.
 - 상병수당 제도 도입 결정은 위기가 제도 개혁 및 변화를 이끈 사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음. 한국의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제도 도입은 오랜 시간 지연됐음. 2022년 7월 시작된 3개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제도 도입 기반 마련됨.
- 각 장을 동일하게 구성함. 1절 연구의 배경 및 내용을 짚으면서, 코로나 19 위기에서 드러난 해당 분야의 문제점 및 취약성을 확인하고, 2절에서는 범유행 상황에서 해당 영역 정책 대응의 내용과 (자료가 가용한 선에서) 성과를 제시하고, 3절에서 합의 및 정책 제언을 시도함.

2. 연구의 방법

□ 코로나 19 감염병 유행 시기 소득, 서비스, 고용 등의 분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자료 분석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통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통계, 국세통계자료 등 활용해서 소득과 고용 등에 영향 분석

□ 코로나 19 감염병 발발 이후 위기 상황에 대한 내용, 제도 변화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 정부 발표 자료, 국내·외 보고서, 언론 보도, 논문 등 자료에 대한 포괄적 분석

○ 코로나 19 감염병 기간 동안 제도의 변화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서,

- 1. 보건복지부의 소관 법률 101개와 대통령령 108개, 고용노동부의 법률 49개와 대통령령 48개의 2020년 1월 이후 개정 내용을 국가법령센터(www.easylaw.go.kr)에서 검토하고,
- 2. 이 가운데 ① 감염병과 연관성이 있거나, ② 보편적 적용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리스트로 정리하고,
- 3. 법 개정 내용 및 취지를 관보(<https://gwanbo.go.kr/main.do>), 두 부처의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국정 백서, 두 부처의 2020, 2021년 백서 등을 참고해서 정리한 뒤 각 챕터에서 참고. 해당 자료 리스트는 <부표 1~8>로 정리함.

○ 보고서가 다루는 영역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서 각 영역별로 핵심이 되는 일부 제도에 초점을 맞춤. ① 노동 및 고용 영역은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② 소득보장 영역은 공공부조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등, ③ 사회서비스 영역은 사회서비스원, 온종일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④ 보건 영역에서는 소득보장의 성격을 가진 상병수당에 주로 초점을 둬.

□ 분야별 자문 회의

- 소득, 고용, 서비스, 보건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 회의 개최

3.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 기대 효과

-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취약집단에 노출된 위험의 내용을 복기하고, 그에 대응하는 제도 변화 분석
- 제도의 변화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의 정책 과제 발굴

□ 활용 방안

- 보건복지부의 제도 변화·변경·도입 등의 점검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 코로나 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확정적이지 않으며, 유사한 질병 확산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제2장

노동 및 고용 영역 제도 변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내용

제2절 코로나 19 이후 노동 및 고용 영역의 대응과 평가

제3절 함의 및 정책 제언

제2장 노동 및 고용 영역 제도 변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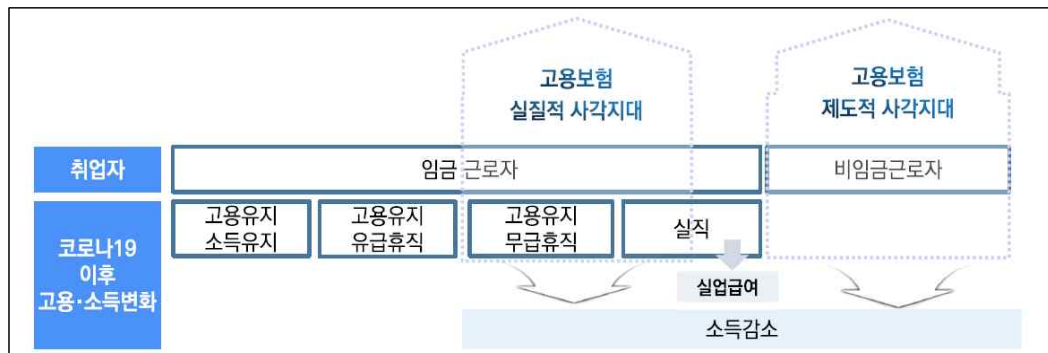
1. 코로나 19 위기에서 드러난 노동 분야 문제점 및 취약성

□ 문제점 개요

- ① 특고·프리랜서 등 산재·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 소득 감소에 대응한 현금지원 정책 미흡(실업부조 부재, 상병수당 부재, 즉각 대응이 어려운 근로장려금 외에 현금지원정책 미흡/부재),
- ②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정책 미흡/부재(실업, 불완전취업 시 근로장려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외에 현금지원 없음).

□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노동시장 충격 발생.
[그림 2-1]과 같이 업종 및 직업, 고용형태,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따라 취약성 수준과 결과에 차이 생김.

[그림 2-1]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변화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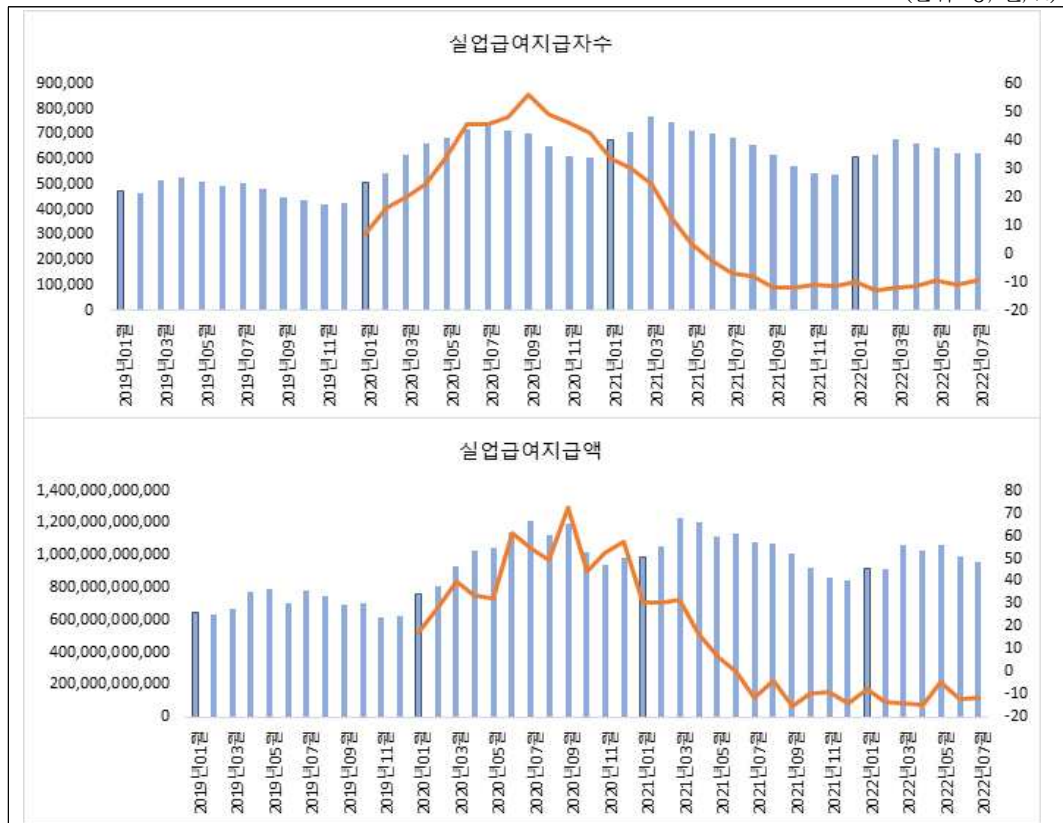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첫 번째 집단은 임금근로자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용 충격이 거의 없는 집단
- 두 번째 집단은 고용계약은 유지하되 근로시간 전체 또는 일부를 감소시키고 임금의 일부를 보전받는 유급휴직자
- 세 번째 집단은 고용계약은 유지하되 일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자
- 네 번째 집단은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자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된 경우

[그림 2-2] 코로나 19 전후 실업급여 지급 현황 및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단위: 명, 원, %)



주: 주황색이 비율이고, 푸른색이 인원 혹은 액수임
 자료: 고용행정통계

- 마지막은 비임금근로자로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득 감소를 경험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감소 충격이 더욱 컸음.
- 코로나 19 위기로 인해 [그림 2-2]와 같이 다양한 수준의 고용 및 소득감소 위험을 경험하는 집단이 생겨났음. 이는 위기 시 사전적인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고용유지정책으로서의 고용보험의 취약성, 그리고 사후적으로 실업 또는 고용감소 위험이 발생했을 때 소득상실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신속하게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돕는 고용보험(1차 고용안전망)과 실업부조(2차 고용안전망) 제도의 취약성을 드러냄.
- 고용보험 제도상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없는 자영업자(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는 고용은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내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소득을 보전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폭 소득감소를 경험함.
 - 코로나 19 위기 이전부터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해 고용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었음.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의 임금근로자에게 가입자격을 주는 고용보험제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자신의 경제활동을 온전히 결정할 수 없는 의존적 계약자와 같은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했음.
 - 이는 고용보험이 제도적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대상으로 코로나 19 위기 이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고용보험 포괄하는 제도적 논의가 시작되었음.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비임금근로자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경험하는 위험이 더 높았음을 확인했고, 제도적 기반과 합의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제도 변화의 필요성 부각되었음.
 - 고용보험의 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고용감소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를 시급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소득파

악 인프라 부족 문제가 드러남.

- 취업상태를 유지하지만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소득파악 및 증명의 어려움.

○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인해 1)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차 고용안전망에 해당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지원 기능이 약해서 이를 시급히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음.

-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는 한국 고용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임. 코로나 19 위기 시 고용보험사업장이 아니거나 고용보험 가입자 아닌 경우, 실직과 소득감소를 경험하게 됨. 코로나 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적 방편으로 ‘무급휴직’을 허용하되 정부가 임금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실업으로부터 방어, 고용유지는 하였으나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취약성을 보임.

○ 기타

-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유지정책(Job retention scheme) 미흡. 위기 시 고용유지정책의 발빠른 대응 체계 부족.

□ 정책 대응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20년 7월과 2021년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1.0과 2.0을 각각 발표했으며, 노동분야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 안전망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투입.

- 뉴딜 1.0과 2.0에서 고용·사회안전망에 각각 22.6조원, 27조원 투입.
-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예술인(2020.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2021.7.12. 5개 직종)를 시작으로 플랫폼 노동,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로 이어지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직종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 지원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0.6.) 및 시행(2021.1.1.),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완화(2021.3.29.~) 등. 2021년 64만명, 9,372억 목표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연구내용: 주요 제도 변화 및 성과

- 1.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12)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단계적 확대
 - 법제도 변경 내용
 - (성과)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위한 조세인프라 및 법·제도 (소득 정보 파악 위한 TF 활동),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 확인
- 2.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취업과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 및 시행
 - 법제도 마련 및 변경 내용
 - (성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수 및 만족도 등
- 3.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확대 대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의 파일럿이라고도 볼 수 있고 위기 대응을 위한 단기적 정책이기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검토함.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성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수·특성, 제도의 잠재적 수혜자 소득 변화 등
- 4. 기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등

□ 연구방법

- 문헌검토: 정부 발표 자료, 보도자료, 국내외 보고서 등
- 기초통계분석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음. 2~6차는 전체 수급자 수만 확인할 수 있음.
 - 고용행정통계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 근로자 유형별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통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통계를 분석한 2차 자료
- 전문가 자문회의

제2절 코로나 19 이후 노동 및 고용 영역의 대응과 평가

1. 전국민 고용보험(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1) 코로나 19 이전 제도 현황

□ 고용보험제도 목적과 사업체계

- (사업목적) 근로자(보수의 0.90%)와 사업주(보수총액의 1.15~1.75%)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 사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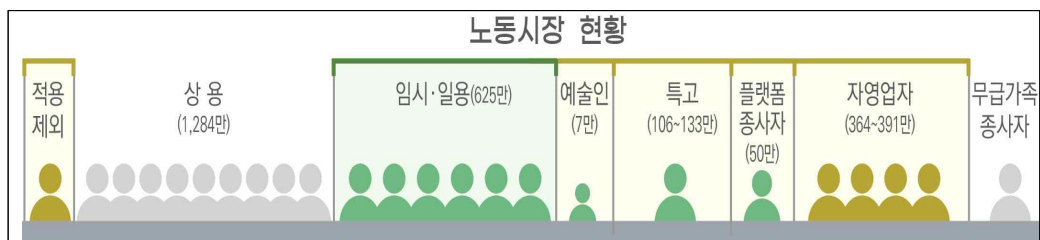
〈표 2-1〉 고용보험 사업체계

구분	내용	보험료율(%)	부담
실업급여	근로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유형: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	1.8	사업주 0.90 근로자 0.90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150인 미만: 0.25	사업주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150인 이상~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 0.85	

□ 고용보험제도의 한계와 변화 방향

- 불안정 노동 증가, 종속노동과 자영업 간 경계가 흐려지는 노동의 자영업화 (self-employmentization) 진행 중이므로 근로자와 자영자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관계부처 합동, 2020. p.1)

〔그림 2-3〕 노동시장 현황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0).

- 산업구조 변화로 생애 중 이직·전직 빈번히 경험: 산업구조 재편되면서 노동력 이동 증가(서비스업은 플랫폼 노동으로 뒷받침되는 ick 이코노미로의 전환이 급진전),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일자리를 병행하는 것이 보편화, 미래 취업자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깃 워커, 프리랜서 등 직업이동이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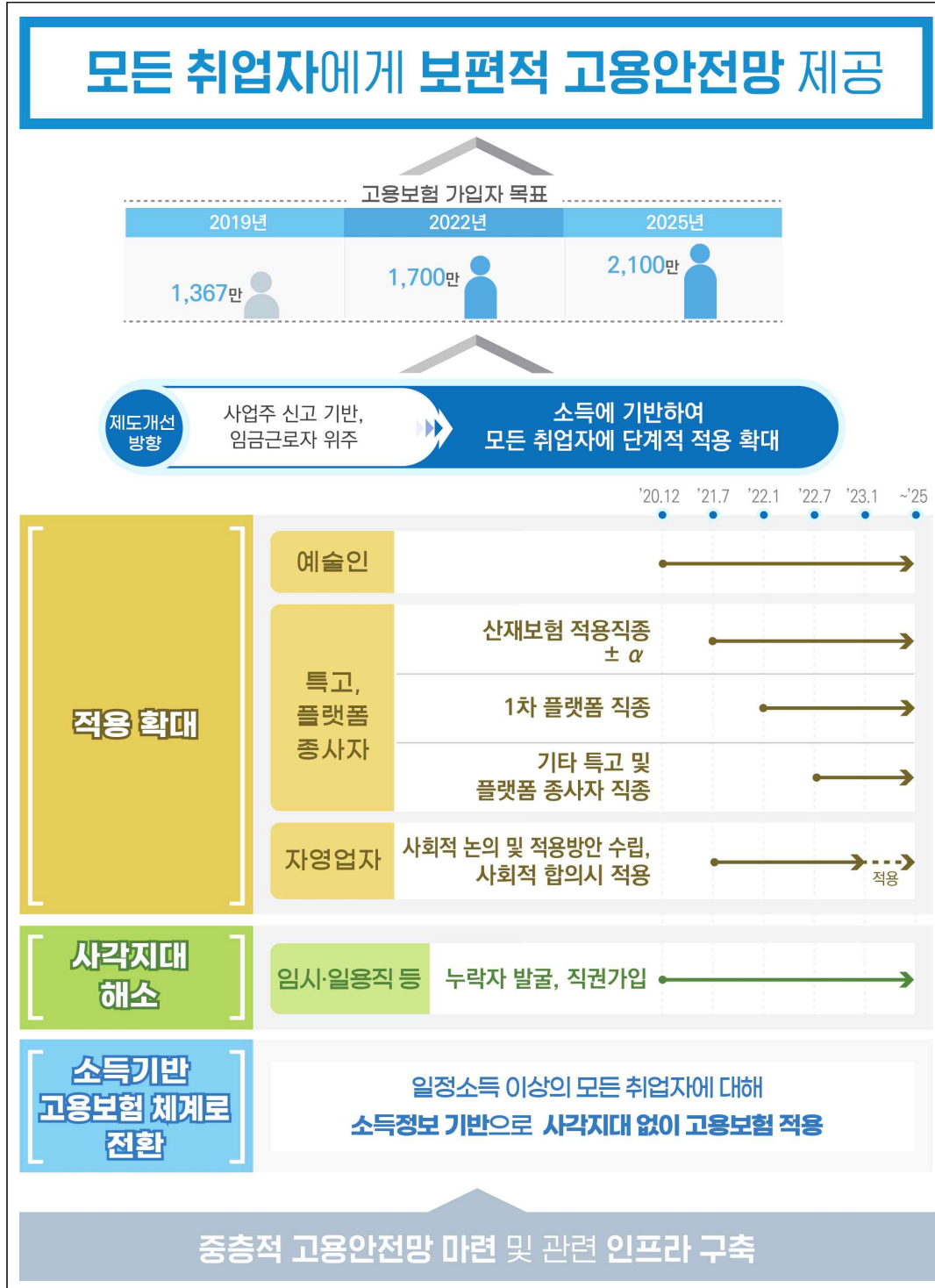
발해지고 N잡 시대를 살아갈 확률이 더욱 커질 전망-고정된 사업장(사업주)을 넘어,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되는(portable) 사회보험체계 구축 필요

○ 코로나 19 등으로 전 세계적 일자리 위기 상시화. 특히 위기 상황에서 고용충격은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에 집중

- (20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전년동월 대비 종사자 수 변화 상용 -0.9%, 임시일용 -7.9%, 기타 -7.5%
- 정부는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러한 일회적 지원으로는 근본적 대응에 한계
- 따라서 예기치 못한 경제사회 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된 안전망 마련 필요

○ 보건 위기가 일자리 위기로: 일자리 위기에 취약한 취업자들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부상(OECD, 2020) - 사회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사회정책의 자동안정화 기능 강화가 요구됨.

[그림 2-4]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향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12.23.).

2) 코로나 19 감염병 발생 이후 제도 변화 내용 및 평가

□ (제도 변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당연가입), 자영자(임의가입)→예술인, 노무제공자로 단계별 확대

○ 예술인: 2020년 12월 10일부터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 노무제공자: 2021년 7월 1일부터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최소소득 80만원

- 고용보험 가입 대상 노무제공자에 산재 특고 직종 15개 포함

- (1단계, 21.7) 산재보험 적용직종 특고 12개 직종
- (2단계, 22.1) 노무제공 플랫폼 기반 3개 직종(배달라이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도 적용
- (3단계, 22.7)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에도 적용

〈표 2-2〉 고용보험(실업급여) 개요

적용 대상	상시 1인이상사업장 근로자	예술인 (2020.12.10.부터)	노무제공자 (2021.7.1.부터)	자영자
비고	〈적용제외〉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 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최소소득〉 50만원	〈최소소득〉 80만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주(임의가입)
보험료	보수의 1.8% (사업주, 피용자 0.9%씩)	1.6% (사업주, 예술인 0.8%씩)	1.6% (사업주, 노무제공자 0.8%씩)	총 7등급의 선택한 기준보수(1등급 182만원~7등급 338만원)*2.25%
수급 자격	실직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지급액	퇴직전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 -상한액: 66,000원/일-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시급 8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2022년 58,624원/일 (하지만 2019년 이전 하한액60,120원/일보다 낮아서 2022년 하한액은 60,120원/일)			
소정급 여일수	120~270일			

○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20.7월) 9→14개 (고용노동부, 2020.6.29.)
 - 9개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쉼터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해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특고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평가(전체 특고 166~221만명이지만 산재보험 적용 특고 49만명)
 - 5개 직종: 방문서비스 종사자(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19.9만명) 및 화물차주(7.5만명)
- ('21.7월) 14개 직종에서 소프트웨어기술자를 포함한 15개 직종(관계부처 합동, 2021.7.14., p.37)
- ('22.7월)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4개 분야 특고 종사자를 적용 범위에 추가¹⁾
 -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법 공포 이후부터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

□ 관계 법령 변화

○ 「고용보험법」 개정

- 예술인 포함(2020.12.10. 시행, 2020.6.9. 공포): 제 77조의 2 (신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章)을 적용한다.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77조의4(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

- 노무제공자 포함(2021.7.1 시행, 2021.1.5. 공포): 제 77조의 2 (신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1)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GODEPRT&difGovDepart1=DIFGODR011&difSer=ae0c1536-4bec-40cd-a24a-463113a9b55a&temp=2022&temp2=HALF002>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장을 적용한다.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고용보험법」이 개정(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의 범위, 예술인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및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2020.12.10. 시행, 2020.12.8. 발표)

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의 범위(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있거나 하려는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으로 정함.
 2)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소득 기준을 사업주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함.**

나.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제104조의6제7항 신설)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요건(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 신설)
 1) 소득감소를 이유로 이직한 예술인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이직 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함.
 2)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6만6천원으로 정함.

-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2022.7.1.시행, 2022.6.28. 공포)

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제104조의11제1항 및 제2항 신설)

-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를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집화(集貨)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학교 강사 등 12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로 정함.
- 2)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 기준을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라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거나,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함.

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제104조의14제1항 및 제4항 신설)

- 1) 소득감소를 이유로 이직한 노무제공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이직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함.
- 2)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6만6천원으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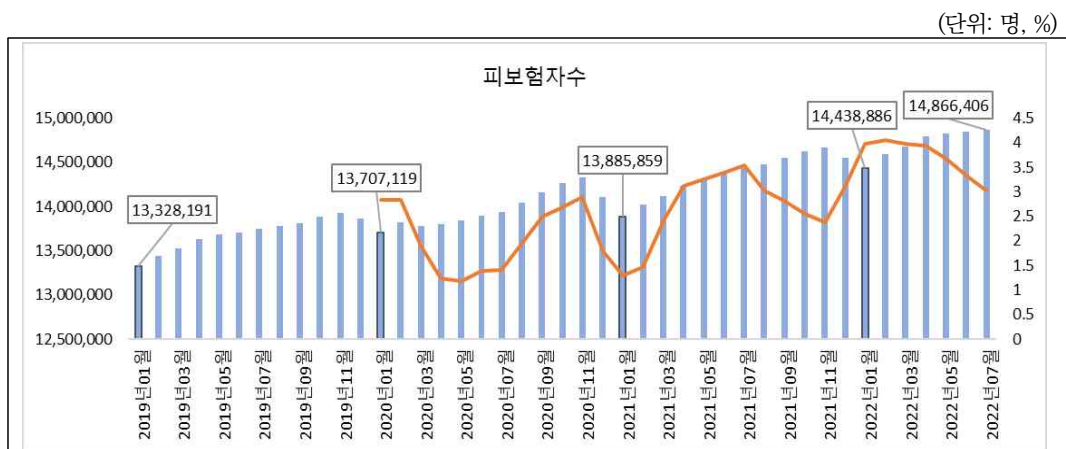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개정
(2022.7.1.시행)²⁾

□ 평가

○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피보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음.

- 2019년 1월 13,328천명에서 2021년 1월 13,886천명, 22년 1월 14,439천명, 22년 7월 14,866천명으로 동절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 추세
- 2021.12월말 기준, 예술인 10.7만명, 특고 57.7만명이 고용보험 가입

[그림 2-5] 코로나 19 전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및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주: 주황색이 비율이고, 푸른색이 인원 혹은 액수임

자료: 고용행정통계(2022.9.10. 인출)

2)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75331&chrClsCd=010202>

- 근로자 유형별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보면 가입대상 확대로 2021년 이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제도 적용대상으로 포함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음.

〈표 2-3〉 근로자 유형별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현황

(단위: 명, 건, 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수급자격 신청자수(월)				
2019년	1,147,900	960	0	0
2020년	1,371,733	1,285	0	0
2021년	1,288,492	1,663	211	6
2022년 7월까지	775,648	988	1,137	97
수급자격 인정자수(월)				
2019년	1,143,165	925	0	0
2020년	1,364,296	1,251	0	0
2021년	1,281,458	1,631	209	5
2022년 7월까지	772,046	962	1,128	85
실업급여 지급자수(월)				
2019년	5,704,391	4,103	0	0
2020년	7,750,273	5,845	0	0
2021년	7,927,037	7,555	286	2
2022년 7월까지	4,456,270	4,720	3,881	181
실업급여 지급건수(월)				
2019년	6,274,586	4,547	0	0
2020년	8,576,567	6,468	0	0
2021년	8,731,026	8,265	312	3
2022년 7월까지	4,866,978	5,147	4,229	211
실업급여 지급액(월)				
2019년	8,382,025,830,420	3,867,672,230	0	0
2020년	12,176,940,771,120	7,212,196,280	0	0
2021년	12,504,967,785,400	9,932,432,260	243,521,430	2,306,400
2022년 7월까지	6,923,253,046,520	6,236,369,690	4,362,758,730	232,427,050

자료: 고용행정통계(2022.9.10. 인출)

-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22.6월말 기준 1,987만명으로 확대(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7.25.)
- 근로자 1,892만명, 특고종사자 78만명, 학생연구원 8만명, 중소기업주 등 9만명

-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 948만명의 2.1배, 적용사업장 수도 70만 개소에서 290만 개소로 증가

3)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

□ 진행 상황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추진 일정에 따라 주요하게 고용보험(실업급여)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가 일정에 따라 시행되었음.

〈표 2-4〉 2020년 이후 고용안전망 관련 주요 진행 상황

일자	내용
2020.7월	산재보험 특고 지원 직종 확대(9→14개):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추가
2020.12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예술인
2021.7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산재 특고 12개 직종 산재보험 특고 지원 직종 확대(14→15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추가
2022.1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3개 직종(배달라이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도 적용
2022.7월	산재보험 특고 적용 범위 추가: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4개 분야 특고 종사자

주: 2020.12.23.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관계부처 합동)

□ 향후 일정

- 23.7월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고용노동부 업무보고, 2022.7.15.)
 -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7월 시행을 앞둠. 이에 따라 방과후 강사,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전속성 문제로 적용이 어려웠던 직종에 적용할 수 있을 예정(고용노동부, 2022.7.25.).
 - 향후 약 166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무제공자가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고용노동부, 2022.7.25.)

○ 향후 플랫폼 관리체계 마련 및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가 남아있음.

〈표 2-5〉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추진일정(관계부처합동, 2020, p. 26)

[illegible]

4) 제도 변화의 함의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취업자의 실업 충격을 완화하는 1차 고용안전망의 역할을 강화

○ 현재 근로시간 확인, 적시의 소득정보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임금근로자 보호의 한계를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사각지대 축소하고, 이직이 더욱 활발해지는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비하여 고용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함.

- 임시·일용직은 입·이직이 잦아 소득파악 시차가 긴 소득정산 자료는 가입 누락자 확인에 한계
- 따라서 소득지급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고 공단과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 구축
-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자료 활용하여 월 단위로 적용이 누락된 근로자를 확인하고, 고용보험 직권가입

○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향후 자영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취업자를 고용안전망에 포함시킴.

- 1인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문직, 소상공인, 농림어업 경영주” 등 약 231~258만명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중 업무보조자를 채용한 경우 및 근로자를 채용한 소상공인 등 포함, 규모는 133만명

○ 사회적 비용부담 불균형을 해소하여 노동시장 구조 왜곡 방지: 고용형태 간 사업주의 사회보험 비용부담 격차를 해소하여 고용주가 안전망 외부의 취업자에게 일을 전가할 동기를 약화시킴(고용노동부, 2020.12.23.)

□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의 기반 마련

○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자격 요건을 기존의 노동시장 지위(고용형태,

근로시간(상용), 근로일(일용))에서 소득기준으로 전환(이병희 외, 2021)하여 일정 소득 이상의 취업자를 모두 보호한다는 의미를 지님.

- 임금근로자 가입대상 확대에 대비하고 향후 가입자가 고용형태 간 이직점
직 시 원활히 고용보험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거나
복수의 초단시간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 등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가능

○ 그리고 적기에 정확한 소득정보 기반으로 운영, 보험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의의를 지님(고용노동부, 2020.12.23.)

5) 평가 및 제언

□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완료

- 22년 1월부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에 따라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공제·납부하게 하는 등
소득파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향후 국세청-근로복지공단 소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소득기반 고
용보험이 실행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하는 과제가 남아있음.

□ 자영업자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계획 구체화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까지 자영업자를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함.
- 1인 자영자,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다양한 자영업자의 특성 파악 및 자영업자
의 휴폐업, 소득감소 등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위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입 대상 확대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해야 함.

□ 위기 시 적시 대응을 위한 고용유지정책의 지원요건 완화 및 확대, 고용보험 재정 운용의 유연성,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일시적인 특별조치 등 필요

- 고용유지정책: 신속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요건 완화를 통한 제도 활용 확대,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안정 제고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의 실효성

제고, 고용유지 연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고용유지조치 부과 검토,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근간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노력이 필요(윤자영, 김현경, 2021)

〈표 2-6〉 고용보험 제도 변화 분석

코로나 이전 제도 내용 혹은 상황	1인 이상 사업장 임금근로자를 당연가입대상으로 하는 제도 다수의 임시·일용직과 같은 실질적 사각지대, 자영업자, 노무제공자와 같은 제도 적 사각지대로 1차 고용안전망의 역할에 한계
코로나 상황에서의 변화 내용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당연가입), 자영업자(임의가 입)→예술인, 노무제공자로 단계별 확대
제도 변화의 내용 및 시기	(2020.7) 산재보험 특고 지원 직종 확대(9→14개) (2020.12)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예술인 (2021.7)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산재 특고 12개 직종; 산재보험 특고 지원 직종 확대(14→15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추가 (2022.1)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3개 직종(배달라이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도 적용 (2022.7) 산재보험 특고 적용 범위 추가: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4개 분야 특고 종사자
제도의 변화 내용	진척으로 평가할 수 있음.
제도 변화의 함의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통해 고용보험 사각 지대 축소, 1차 고용안전망 역할 강화
진척 상황 및 향후 일정	23.7월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향후 플랫폼 관리체계 마련 및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 자 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등
평가 및 제언	(평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취업자의 실업충격을 완화하는 1차 고용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 (제언)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지속 전환 및 완료, 자영업자 당연가입 대상으 로 포함하는 계획 수립 및 실행 (위기 시 제언) 적시 대응을 위한 고용유지정책의 지원요건 완화 및 확대, 고용보 험 재정 운용의 유연성,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일시적인 특별조치 등 필요

2. 국민취업지원제도

1) 코로나 19 이전 제도 현황

□ 취업성공패키지 개요³⁾

- (사업목적)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도모
- (지원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노숙인, 결혼이민자 등 취업취약계층, 미취업 청년(18~34세) 및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35~69세) 등
- (지원내용) 참여자의 특성 진단(프로파일링) 토대로 최장 1년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
 - 프로세스: (1단계) 진단, 의욕 제고 및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2단계) 직업능력과 직장 적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 (3단계)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및 취업성공

〈표 2-7〉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지원내용

구분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I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자, 기타 취업취약계층	참여수당 25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500만원(자부담 최대 20%) 훈련수당: 월 40만원(6개월)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 50만원 12개월 근속 100만원
II 유형	청년(18~34세) 및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35~69세)	참여수당 2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300만원(자부담 최대 15~50%) 훈련수당: 월 40만원(6개월)	-

자료: 고용노동부(2020). 2020년 예산 및 기금 사업설명자료.

□ 성과와 한계

- (의의) 2009년 구직 빈곤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정책 (이병희, 2021)

3)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 저소득 실업자는 구직능력이 낮기 때문에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알선, 고용보조금 등을 스스로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전담 상담사의 사례 관리에 기초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지향.
-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을 통한 서비스 제공,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서비스의 결합, 취업의욕을 높이고 근속을 높이는 유인으로서 취업성공수당 제공, 성과 중심의 민간위탁 관리와 육성 등 취업성공패키지는 통합형 취업지원서비스의 대표적인 모델로 발전(이병희 외, 2014; 이병희, 2021에서 재인용)

○ (지원인원) 2009년 저소득층 1만명, 2016년 참여자 규모 36.5만명, 2018년 30.8만명, 2020년 22.7만명

〈표 2-8〉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단위: 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계	294117	364720	350710	308228	223056	227327
증장년층	24469	27909	23440	16992	15794	13231
청년층	132856	191769	197576	187030	104497	104275
저소득층	136792	145042	129694	104206	102765	109821

자료: 고용행정통계 (2022.9.10. 인출)

○ (한계)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가 없음.

2) 코로나 19 감염병 발생 이후 제도 변화 내용 및 평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별첨, 2022.6.26.)

○ 2009년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취약하여 안정적·일관된 지원이 어렵고 구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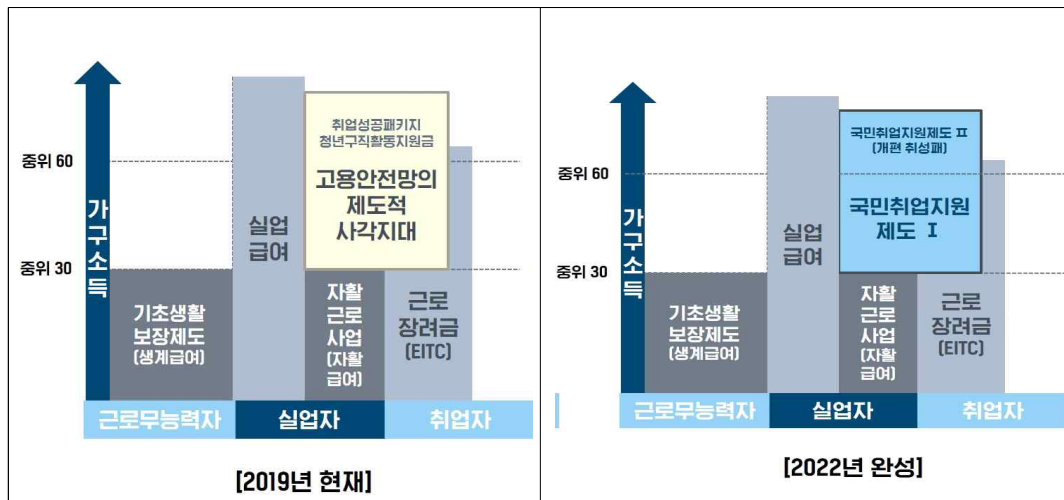
간 중 소득지원도 미흡했던 한계

- 취업지원 업무 담당 조직과 인력 부족으로 취업 성과 정체(이병희, 2021)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논의, 코로나 19로 인해 도입 속도 빨라짐.
- 실업부조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2018.8, 2019.3)→「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발표(2019.6월, 일자리위)→2020.6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목적 및 기대효과

-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의사가 있으나 주로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 구직자 등에 취업·소득지원을 제공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
- '22년까지 지원규모를 확대(60만명)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완성 → 연간 2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그림 2-6] 국민취업지원제도 전과 후



자료: '19.6.4 일자리위 발표 시 포함된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 제도 밖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2차 고용안전망(2021.1.1. 시행)(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6.26.)

- 한국형 실업부조를 포함하여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제도(이병희, 2021)
- 1) 저소득 구직자 대상의 권리형 고용안전망(1유형 요건심사형), 2) 청년과 취업경험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 대상의 선발형 고용안전망(1유형 선발형), 3) 취업취약성이 높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모델(2유형)(이병희, 2021)

○ 지원 내용(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6.26.)

-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 신청-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www.kua.go.kr)

〈표 2-9〉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I 유형	요건 심사형	15~69세 (청년은 18~34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특례 120%)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은 취업경험 무관)
II 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제한 없음)	무관	무관

□ 관계 법령 내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 (연혁) '19.9월 법률안 국회 제출 → '20.5.20 본회의 의결 → '20.6.9 제정

→ '21.1.1 시행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 법률로서, 지원 대상 및 수급요건·지원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5.20.).

- 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명문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함.

* 취업취약계층: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

- ②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규정: 구직촉진수당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 청년층 중 가구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함.
- ③ 구직활동의무 부과 등: 구직활동 이행 의무 부여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 개정

- (21.7.27)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최근 일정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는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업한 사실과 무관하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구직활동 기간 중 소득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한 것(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8.14.).

- 하위법령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
 - ① (지원대상)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소득요건(중위 소득 50%), 재산요건(3억원), 취업경험요건(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 시간 이상 취업경험)
 - ② (지원내용)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구체화
 - ③ (수급자 의무 등)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성실 이행 의무 규정
- 주요 개정
 - (21.9.27)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기준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 평가

- (당초 계획 대비 변화 내용 평가) 논의 당시 보다 구직활동 요건 엄격, 재산기준 낮아졌음.
 - 2020.5.20.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산 6억원 이하 등 완화된 요건을 논의하였으나 첫 시행령에 재산기준 3억원으로 엄격하게 적용.
- (수요 대비 평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포괄하는 2차 고용안전망 역할 및 제도 수요에 미흡(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별첨, 2022.6.26.)
 - 2021년 제도 시행 첫해 43.2만명(1유형 34.9만명) 지원
 - 50.9만 명 참여 신청(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1.5.)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의 약 2배 수준: 취성패 최근 실적 (2018) 30.8만명, (2019년) 22.3만명, (2020년) 22.7만명
 - 당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잠재적 대상자를 158만명으로 추정하였으나 (노동연구원) 이보다 훨씬 낮은 신청 및 지원인원
 - 국민취업지원 참여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으나 중장년 남성

집단에서 구직촉진수당 수준에 대해 만족도 낮은 경향을 보였음. 부양가족 있는 가구주로서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생활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가구 특성에 맞는 현금지원 차별화를 계획하고 있음.

- 구직촉진수당 급여 만족도(5점 만점): 청년 남성 3.36, 청년 여성 3.50, 중년 남성 2.90, 중년 여성 3.20.

3)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

□ 진행상황

○ 주요 제도개선 경과(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1.5.)

- (2021.7.27.) 1유형 선발형 청년특례(중위소득 120%, 재산 4억원) 취업경험요건 폐지(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 (2021.9.7.) 소득 중위 50%→60%, 재산 3억→4억으로 요건 확대
- 자립준비청년·구직단념청년(2021.3), 영세자영업자(2021.7, 매출액 1.5→3억원 이하), 전역예정장병(2021.9) 취업지원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 및 향후 일정(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6.26.)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향후 5개년의 운영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 청년 재산요건 확대-7월1일부터 1유형 수급요건 재산합계액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 영세자영업자 취업 지원 강화: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2유형) 참여 위한 연 매출액 요건을 종전 1.5억원 이하에서 한시적으로 3억원 이하로 확대(~22.6.30)했으나 7월 1일부터 이를 영구 확대.
- (선발형 청년특례 연령 확대 추진) 청소년 부모, 위기청소년 등 15~17세 구

직까지 포함

- (수급 중 소득 활동 제한 개선할 계획) 그간 구직촉진수당을 수급 중인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월 54.9만원(2022년 기준) 초과하는 소득 발생하면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 정지되었으나, 생계유지 또는 일 경험을 위한 수급자의 소득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소득활동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진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및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의 문제 개선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강화하는 방안 검토

4) 제도 변화의 함의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대응 가능(이병희, 2021)
 - 고용보험 사각지대, 즉 1차 고용안전망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차 고용안전망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및 소득지원이 가능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지원 및 현금 지원을 강화하여 고용효과 및 소득보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노동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용서비스 참여자 취업률 16.6%p 상승, 빈곤갭 2.4%p 감소(23.2% → 20.8%) 등 고용개선 및 빈곤 완화 효과 기대
 - 빈곤갭: (중위소득 60% 소득 - 하위계층 평균소득) / 중위소득 60% 소득
-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임시적인 조치의 한계를 극복하여 제도적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의의가 있고, 체계적 판정도 제도적 발전의 성과임(이병희, 2021)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하여 법적 근거가 취약하여 안정적·일관된 지원이 어려웠던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극복하였음.

5) 평가 및 제언

□ (단기) 구직촉진수당 현실화로 실질적인 실업부조 역할 할 수 있도록

- 자활급여(65만6천~137만7천원), 1인 가구 생계급여(2021년 55만 원, 22년 58만원)보다 낮은 수준-1인 가구 생계급여와 연동할 필요.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부양가족(특히 자녀)에 따라 정액의 추가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가족부양의 책임을 진 일차 소득자의 참여를 높일 필요(이병희, 2021)

□ (장기) 2차 고용안전망의 위기 대응력 제고 필요

- 코로나 고용 위기의 충격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제도적인 대응력이 아쉬움. 고용 위기 동안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완화하거나 수급기간을 연장하고 회복기에 조정하는 방식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이병희, 2021).

〈표 2-10〉 제도 변화 분석: 국민취업지원제도

코로나 이전 제도 내용 혹은 상황	이전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대체 및 확대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도입 시기 및 내용을 논의 중이었음.
코로나 상황에서의 변화 내용	코로나 19 발생으로 취업취약계층 규모 확대되자 도입에 속도를 높여 2021년 1월 시행
제도 변화의 내용 및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변화 내용: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참여요건) 15~69세(청년은 18~34세)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상이함),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22.7.1), 취업경험 요건 - 제도 변화 시기 (도입 시→2021.9.7.) 소득 중위 50%→60%, 재산 3억→4억으로 요건 확대, (2022.6.22.)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 고용정책심의회 의결
제도의 변화 내용	1. 도입 시, 기존 논의되던 내용보다 엄격한 참여요건 설정 후, (21.9.7) 참여요건 확대 2. 2021년 제도 시행 첫 해 43.2만명(1유형 34.9만명) 지원-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의 약 2배 수준이지만, 당초 잠재적 대상자 추정치(158만명)보다 훨씬 낮아 수요 대비 지원 규모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함.
제도 변화의 함의	2차 고용안전망 개선-현금지원 강화, 법적 토대 마련,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지향
진척 상황 및 향후 일정	(진척 상황) 실업부조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2018.8, 2019.3)→「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발표(2019.6월, 일자리위)→2020.6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향후 일정) (2022.7.1.)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
평가 및 제언	(단기 제언) - 구직촉진수당 현실화 (장기 제언) - 고용위기 대응력 제고

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 코로나 19 이전 제도 현황

해당 없음

2) 코로나 19 감염병 발생 이후 제도 변화 내용 및 평가 (당초 계획 대비 변화 내용 평가, 수요 대비 평가), 관계 법령 변화 적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목적

- (목적)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내용(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11.2.)

- (지원대상) (1차)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무급휴직자 → (2차부터)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함.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2차 사업부터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무급휴직자는 완화된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 무급휴직자 제외된 이유: 무급휴직자의 경우 사업주들이 무급휴직 외에 유급휴업·휴직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을 추진,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활용할 수 없는 무급휴직자의 경우 개편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원이 가능
- 긴급복지지원제도 고시 신설 조항(코로나 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1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2.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표 2-11〉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유형별 지원 요건

(단위: 명, 건, 원)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지원자격		‘19.12~’20.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50인 미만 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소득기준		① 가구소득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기준)의 150% 또는 ②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① 가구소득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기준)의 150% 또는 ②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③ 신청인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① 가구소득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기준)의 150% 또는 ②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감소 요건	구간1	소득 25% 이상 감소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무급휴직일이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매출액)이 5천만원(1.5억원) 이하인 경우		
	구간2	소득 50% 이상 감소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무급휴직일이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매출액)이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1.5억원 초과~2억원 이하)인 경우		

자료: 이병희 외(2021), p. 7 〈표 2-1〉 재구성

○ 지원요건

- 1)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개월 간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2) 소득요건: (1차) 연소득 중위 150% 또는 7천만원 이하 → (2차부터) 5천만원 이하
- 3) 소득감소요건: 25% 이상
 - 1차만 연소득 5~7천 구간2에 대해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요건 적용
 - 1차만 무급휴직자의 무급휴직일이 총 30~45일 이상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

○ (지원금액) (1차) 150만원 → (2차) 기수급자 50만원, 신규 150만원 → (3~5차) 기수급자 50만원, 신규 100만원 → (6차) 200만원

〈표 2-1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내용 및 지원 인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 인원
1차 (2020.6.~9.)	특고·프리랜서, 영세자 영업자, 무 급휴직자	1) (자격요건) ①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 동안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¹⁾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중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 로 7천만원 이하인 자 2) (소득감소요건) 소득 25% 이상 감소	150만원	149.7만명
2차 (2020.9.~12.)	특고·프리랜 서	1) (자격요건) 고용보험 미가입 ①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2개월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 2차: '19.12~'20.1월 - 4차: '20.10~11월 - 5차: '21.10~11월 ② '19년 또는 '20년 연소득(연수입) 5천 만원 이하인 자 - 1~4차: '19년 연소득 - 5~6차: '20년 연소득	기수급자: 50만원 신규: 150만원	61.3만명 (기수급자 47.2만명, 신규 14.1만명)
3차 (2021.1.~3.)	특고·프리랜 서	2) (소득감소요건) 25% 이상 감소 - 2차: '20.8월 또는 '20.9월 소득 - 3차: '20.12월 또는 '21.1월 소득 - 4차: '21.2월 또는 3월 - 5차: '21.12월 또는 '22.1월 소득 - 6차: '22.3월 또는 4월 소득	기수급자: 50만원 신규: 100만원	68.2만명 (기수급자 57.1만명, 신규 11.1만명)
4차 (2021.3.~5.)	특고·프리랜 서		기수급자: 50만원 신규: 100만원	71.5만명 (기수급자 67.2만명, 신규 4.3만명)
5차 (2022.3.~5.)	특고 ²⁾ ·프리 랜서		기수급자: 50만원 신규: 100만원	52.7만명 (기수급자 49.4만명, 신규 3.3만명)
6차 (2022.6.~8.)	특고·프리랜 서		200만원	75.4만명 (기수급자 64만명, 신규 11.4만명)

주: 1)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2) 지원 제외 직종(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 설치기사, ④대출모집인, ⑤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골프장캐디, ⑦건설기계종사자, ⑧화물자동차운전사, ⑨퀵서비스기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 이전과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기로 결정.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 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 제외((기존 지원 대상의 15%)(『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9.1.). 1~6차 시행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388호,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2020.9.23.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8호,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2021.1.15.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150호,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2021.3.26.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110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2022.3.4.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261호,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2022.6.7. 고용노동부 장관

□ 평가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지원
- 1~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인원은 <표 2-12>와 같음.
- 1차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20.6.1.~7.20) 신청한 175.6만명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수급자 특성 및 분포를 파악하였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11.2.).
 - 영세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순으로 신청하였고, 여성·중장년(40·50대) 비중이 높았음.
 - 영세자영업자 109.8만명(62.5%), 특고·프리랜서 58.7만명(33.4%), 무급휴직자 7.1만명(4.0%) 수급
 - 특고·프리랜서의 경우(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제외),
 - 1)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최다 신청,
 - 2) 월 소득 69.1% 감소,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가 절반 이상(59%)
 - 3) 수급자의 46.0%가 소득하위 20%에 해당(2분위가 35.1%로 가장 큰 비중,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가 무급휴직자보다 소득하위 20%에 더 많이 분포), 수급자의 82.9%는 소득하위 40%에 속함.
 - 4)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더 크게 감소(이병희 외, 2021). 1분위 75.6%, 6분위 55.7% 감소.
-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고 고용형태 다변화로 고용 및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관련 제도 도입 및 개선방안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3)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

□ 진행상황, 향후 일정

- 2020.5월 신설, 2022.8월부로 종료(〈표 2-12〉와 같은 제도 내용 경과를 보였음.)

4) 제도 변화의 함의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최초의 소득 지원이라는 정책적 의의(이병희 외, 2021)

□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자 특성 및 제도 관련성을 이해함으로써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근거를 삼을 수 있음.

○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의 중요성 파악

-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전환할 때 적용 제외 소득 기준으로 월 70만원(최저 임금을 받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최소 소정 근로시간인 주 15시간 근무하였을 때 월 소득)을 가정하면, 수급자의 80%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병희 외, 2021)
- 1차 수급자의 지난 3년('17-'19년) 내 고용보험 상용 가입 경험을 보면 특고·프리랜서 수급자 중 지난 3년간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이력이 1번이라도 존재하는 사람은 22.0%로(이병희 외, 2021), 특고와 임금근로자 간 빈번한 이동을 경험하였음.

○ 소득 파악체계에 대한 보완 필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11.2.)

- 코로나 19 위기 이전에도 수급자의 1/3은 월 평균소득의 40% 이상 변동하는 월을 경험. 적시의 소득 파악이 관건(이병희 외, 2021).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조세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
-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들은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소득자료가 없거나, 공적 소득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음. 국세청에 소득·매

출을 연 1회(종합소득세) 또는 반기별로 신고(부가가치세)하므로 납세자의 신고 내용 확정까지 2~4개월 소요됨.

- 영세자영업자 신청자 중 소득자료 제출자는 34만명, 매출자료제출자는 75만명으로, 소득자료 비율은 낮은 편.
-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는 업체에서 발급한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방과후교사·강사는 통장사본 및 노무미제공 확인서, 택시기사는 택시회사에서 제출한 전체 매출내역,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는 앱 및 프로그램 화면 캡처를 제출하도록 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소득 파악하였음.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고용보험 확대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음.
 - 직종만으로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과 문화공연관련종사원을 고용보험의 우선적인 확충 대상이라고 가정하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의 38.4%가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과 예술인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신청자의 35.1%, 문화공연관련종사원(예술인) 3.3%)(이병희 외, 2021)

5) 평가 및 제언

-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제도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각 제도가 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적시에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제도를 활용
-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이 자영업자를 포괄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 구직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이 일시적 경영위험 등으로 고용위기에 처한 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상황이 바람직함. 또한 위기 시에는 각 제도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필요(이병희 외, 2021).
- 이러한 전제 하에 발생하는 제도 공백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제도로 보완.

〈표 2-13〉 제도 변화 분석: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 이전 제도 내용 혹은 상황	-			
코로나 상황에서의 변화 내용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일시적 제도			
제도 변화의 내용 및 시기	사업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1차 (2020.6. ~9.)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1) (자격요건) ①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 동안 총 10일 이상 노무제공 또는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¹⁾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중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인 자 2) (소득감소요건) 소득 25% 이상 감소	150만원
	2차 (2020.9. ~12.)	특고·프리랜서	1) (자격요건) 고용보험 미가입 ①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2개월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기수급자: 50만원 신규: 150만원
	3차 (2021.1. ~3.)	특고·프리랜서	- 2차: '19.12~'20.1월 - 4차: '20.10~11월 - 5차: '21.10~11월 ② '19년 또는 '20년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인 자	기수급자: 50만원 신규: 100만원
	4차 (2021.3. ~5.)	특고·프리랜서	- 1~4차: '19년 연소득 - 5~6차: '20년 연소득 2) (소득감소요건) 25% 이상 감소	기수급자: 50만원 신규: 100만원
	5차 (2022.3. ~5.)	특고 ²⁾ ·프리랜서	- 2차: '20.8월 또는 '20.9월 소득 - 3차: '20.12월 또는 '21.1월 소득 - 4차: '21.2월 또는 3월 - 5차: '21.12월 또는 '22.1월 소득	기수급자: 50만원 신규: 100만원
	6차 (2022.6. ~8.)	특고·프리랜서	- 6차: '22.3월 또는 4월 소득	200만원
제도의 변화 내용	1. 한시적 도입			
제도 변화의 함의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최초의 소득 지원이라는 정책적 의의 -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자 특성 및 제도 관련성을 이해함으로써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근거 확보			
진척 상황 및 향후 일정	종료			
평가 및 제언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지원 -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제도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각 제도가 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적시에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			

4. 기타

□ 고용유지정책(윤자영·김현경, 2021)

○ (변화) 코로나 19 확산되자 정부는 이미 시행 중이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고(2020.2.),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2020.4.), 고용안정협약지원금(2020.7.), 고용유지비용 대부(2020.7.),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원, 무급휴직 지원 요건 완화 등 보완책을 신설하여 대응(고용노동부, 2020).

- 2021년 들어서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집합제한·금지 업종 지원, 고용안정협약지원 기간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휴업수당지원 연장 등을 추진

○ (평가) 제도 요건을 완화했음에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임금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비중(임금근로자의 3.8% 정도)이 극히 낮았음.

- 전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피보험자 대비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비중을 보면, 소규모 사업체의 수혜 비중은 낮은 편임.

○ (제안) 향후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화될 수 있는 고용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속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요건 완화를 통한 제도 활용 확대,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안정 제고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의 실효성 제고, 고용유지 연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고용유지조치 부과 검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근간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노력이 필요함.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만 휴업상태를 증명하기 쉽지 않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한국의 고용유지정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제3절 합의 및 정책 제언

□ 2절에서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위기 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정

책을 검토하였음. 각 제도는 1차 고용안전망, 2차 고용안전망, 위기 시 고용보험 사각지대 및 유급휴직자를 위한 정책으로 대상 및 시점에 있어 상호보완적임.

○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행하고, 이후에도 여전히 1차 안전망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포괄성 및 구직촉진수당의 급여액을 인상할 필요

○ 1,2차 고용안전망이 작동하면 현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를 최대한 포괄하지만 ‘소득감소’와 같은 위험에 대해서는 1,2차 고용안전망이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위기 시 임시적인 조치는 여전히 필요함.

- 고용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를 ‘소득감소’까지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음.

○ 경제위기 시 일자리 유지에 중점을 둔 고용유지정책은 실업이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중요성을 가짐. 위기 시 유연성 있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취업취약계층과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복지제도와 연계성이 큼.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기준과 내용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일관성 및 상호보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이 실업 또는 불완전취업으로 소득이 낮을 때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할 수 있음.

-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은 22년 1인 생계급여 지원액 58만원보다 낮고 가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실업부조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

○ 긴급복지제도의 경우 현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보호하는 대상과 같이 소득과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의 실태와 특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 있음.

- 코로나 19 이후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제도 개선되었음.



제3장

소득보장 영역 제도 변화

제1절 연구 배경 및 내용

제2절 코로나 19 이후 소득보장 영역의 대응과 평가

제3절 합의 및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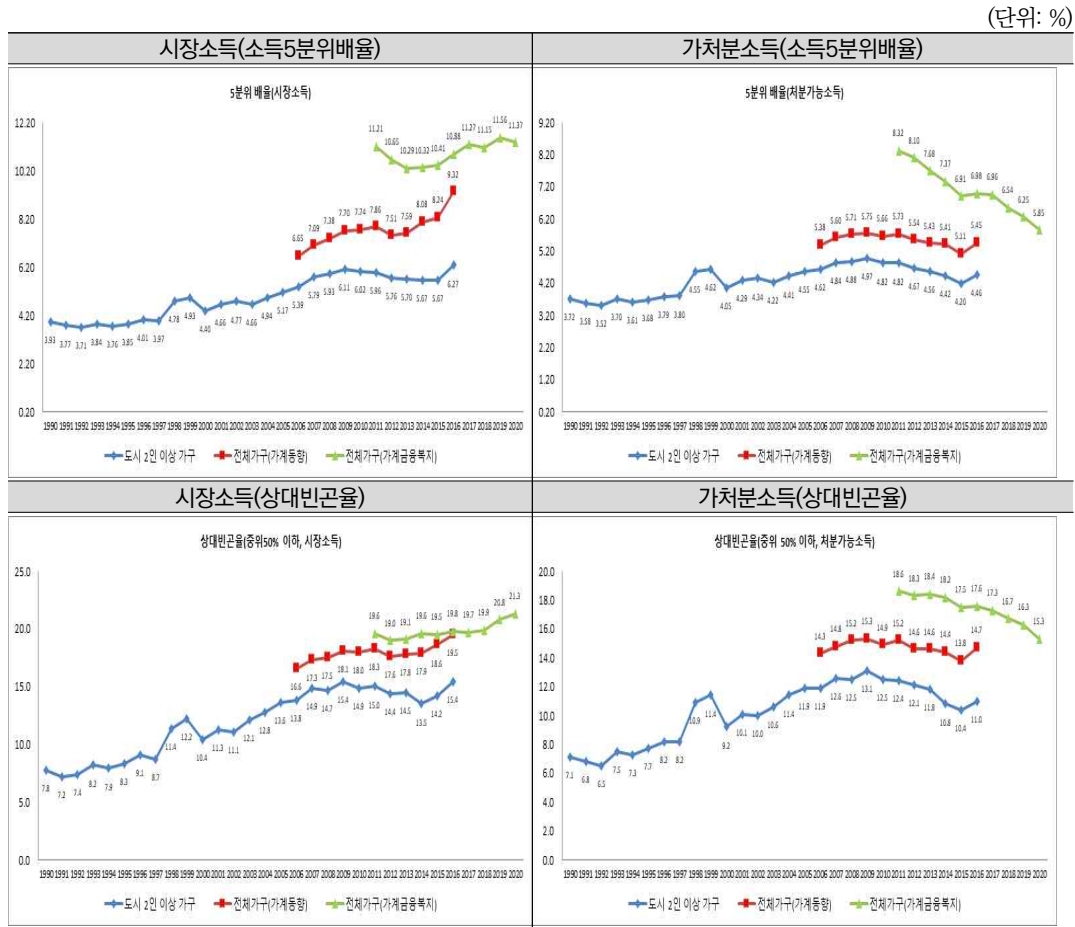
제3장 소득보장 영역 제도 변화

제1절 연구 배경 및 내용

1. 코로나 19 위기에서 드러난 소득 분야 문제점 및 취약성

- 2000년대 들어 밀레니엄을 맞이하며, 한국은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주기적 위기 상황을 경험
 -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등과 같은 큰 위기 상황은 물론 지난 20여년 간 국내적으로 2003년 신용위기, 2018년 소득분배 위기 등과 같은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는 시기를 경험
 -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기속에서 빈곤층, 취약계층은 물론 노동시장 불안정 계층 등은 상시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스스로 위기 극복이 어려울 때 국가의 개입 필요성이 제기
 - 빈곤층과 위기계층 등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해체 등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이며, 이중 소득보장 정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아래 그림은 통계청 소득조사를 기반으로 한국의 상대빈곤율과 소득5분위 배율을 보여주고 있음
 -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반면에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된 이후의 가처분소득 소득 5분위배율과 상대적 빈곤율은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보임
 -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득분배 문제를 정부의 소득보장정책이 최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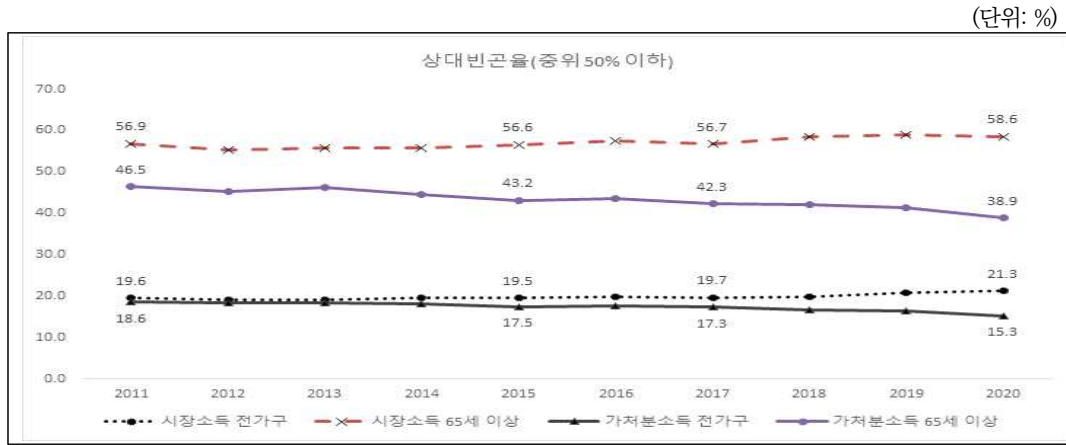
[그림 3-1] 소득5분위배율 및 상대적 빈곤율 변화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 한국 소득보장 정책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심각해지는 빈곤 문제임
- 대표적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비교 대상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노인빈곤문제와 더불어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은퇴연령 하락에 따른 중고령층 빈곤문제, 저성장 지속으로 인한 청년 취약계층, 전통적으로 소득활동이 취약한 장애인과 여성 등 여전히 사회 내 소득보장 정책을 통한 지원필요성이 높은 계층은 상존

[그림 3-2] 상대적 빈곤율 : 전체 및 노인(만 65세 이상)



□ 특히 최근 들어 사회보장정책 중 소득보장정책 강화가 절실히 필요했던 이유는 코로나 19라는 감염병 위기 상황이었음

○ 지난 시기 발생한 경제적 위기는 주로 빈곤층,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 등이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따라서 정부는 일시적 지원정책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음

○ 하지만 코로나 19 위기는 특정 계층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고 전계층,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았으며, 이중에서도 오랜 기간 소득보장제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근로빈곤, 영세 소상공인 등이 위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됨

○ 이 글에서는 코로나 19 전후로 한국의 소득보장정책이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대응이 위기 계층의 위기 극복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는지 살펴보려고 함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연구내용: 주요 제도 변화 및 성과

○ 1. 공공부조 영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복지 한

시적 기준 완화, 긴급 생계지원, 한시 생계지원), 근로장려금

- 법 제도 마련 및 변경 내용, 일시적인 제도 적용 등
- (성과) 선정 기준 변경에 따른 수급자 변동

○ 2. 사회수당 영역에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살펴봄.

- 법 제도 마련 및 변경 내용
- (성과) 급여 수준 및 급여 대상자 규모

○ 3. 기타 제도로써 자산형성지원제도, 일시지원제도로써 긴급재난지원금, 국민상생지원금 등

- 법 제도 마련 및 변경 내용
- (성과) 급여 수준 및 재정 투입 규모

□ 연구방법

○ 문헌검토: 정부 발표 자료, 보도자료, 국내외 보고서 등

○ 기초통계 활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통계, 국세통계자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전문가 자문회의

제2절 코로나 19 이후 소득보장 영역의 대응과 평가

1. 공공부조제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코로나 19 이전 제도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제도로 빈곤에 처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수행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에 기존 생활보호제도를 완전히 대체한 제도로 당시 한국이 직면한 IMF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소득보장정책으로 도입
 - 도입 취지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기존 생활보호제도가 만 18세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현금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 발생의 책임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가진다는 가치 하에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도 현금급여를 지급
 - 최저생활보장과 보충성의 원칙 하에 빈곤 및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
-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제도가 운영되는 속에서 제도가 가진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빈곤과 위기 상황에 처한 빈곤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기준 등으로 인한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욕구별·단계별 급여체제로 전환되면서 2015년 7월에는 교육급여에서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속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포함하면서 오랜 기간 사각지대 문제로 지적되어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차 완화하는 조치를 취함

〈표 3-1〉 소득인정액 기준 비수급빈곤층 변화

구분	'03년 기준 1차조사	'06년 기준 2차조사	'10년 기준 3차조사	'14년 기준 4차조사	'15년 기준 5차조사	'18년 기준 6차조사
비수급 빈곤층	177만명	103만명	117만명	118만명 (중위소득 40%이하)	93만명 (기준중위 소득40%이하)	73만명 (기준중위 소득40%이하)
차상위 계층 기준 비수급 빈곤층	86만명	67만명	68만명	85만명	51만명	59만명
	(최저생계비(100%)~120% 이하)			(중위 40~50% 이하)		
차상위 포함 비수급 빈곤층	263만명	170만명	185만명	203만명	144만명	132만명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안) (p12 재인용)

2) 감염병 발생 이후 제도 변화 내용 및 평가

- 코로나 19 발생 이후 2020년 7월 정부는 한국판 종합뉴딜 계획을 발표하며, 기존 국정과제보다 목표를 더 상향조정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발표
- 2017년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며, 이후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
- 이후 2019년 1월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정되기 시작하여, 이후 2021년 1월 생계급여에 한해 만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구(30세 초과)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 2021년 10월에는 그동안 제외되어 있던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단, 부양의무자 소득이 1억 이상, 재산이 9억 이상인 경우는 적용)
 - 생활보호 도입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편되기 까지 장기간 유지되어

오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코로나 19를 거치며 폐지되기에 이름

〈표 3-2〉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

구분	2015년 7월	2017년 11월	2018년 10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1년 10월
생계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노인·중증장애인 포함된 가구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구(만 30세 초과)	그 외 가구대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소득 하위 70%)	부양의무자 가구 노인이 포함된 가구 (소득 하위 70%)		
주거급여			폐지	유지			
교육급여	폐지	유지					

자료: 김태완, 김기태, 이주미, 강예은.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접근성 제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8 재인용)

3)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

-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전 정부에서 목표로 그리고 달성하고자 했던 것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무엇보다 2018년 소득분배 위기와 202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크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긍정적 평가는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수급자의 증가와 또 하나는 최저생활보장 수준의 확대임
- 먼저 2019년에 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수급가구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표 3-3〉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규모 변화

(단위: 명, 가구)

구분	2016.12	2017.12	2018.12	2019.12	2020.12	2021.12
수급자	1,630,614	1,581,646	1,743,690	1,881,357	2,134,186	2,359,672
수급가구	1,126,510	1,122,992	1,255,084	1,371,104	1,547,032	1,728,389

자료: 보건복지부. (2022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통계.

-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의 개편과 이를 통한 수급자 및 수급가구에 대한 최저생활보장 강화임

〈표 3-4〉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변화

(단위: %)

구분	2015.7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
생계급여	28%	29%	기준중위소득 30%							35%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				44%	45%		46%	47%	50%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각년도.

- 코로나 19를 경험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 개편은 본래 목적을 넘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향후에는 변화된 기준을 통해 신규 유입된 수급자 및 수급가구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빈곤의 대물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
- 가능한 개인 및 가구 역량 강화를 통해 조속히 탈수급, 탈빈곤을 지원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재산기준에 대한 조정 방안과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해 유지하고 있는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

지에 대한 논의 진전이 필요

- 의료급여의 경우 다른 급여에 비해 재정적 부담이 크고,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에 따른 재정수반이 함께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마련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제도 변화 혹은 대응의 함의

- 코로나 19를 지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에 없는 변화가 이루어짐. 이러한 변화는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과 보장성 강화라는 목적에 충분히 조응
 - 감염병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불안정 소득 계층의 지원을 통해 이들 가구의 생계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기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빈곤층 보호와 지원에 큰 역할을 해 왔으며, 이번의 제도 개선도 이를 충실히 반영한 바가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주변에서는 소외되거나 지원 필요성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생활고로 인한 가족의 불행한 상황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진 한계로서 지적되고 있기도 함
 - 코로나 19를 넘어 향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해 빈곤층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5) 평가 및 제언

□ 단기 제언

○ 재산기준의 완화 검토

-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산기준의 경우 기본재산액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 제도 개선이 크게 진행되지 못함
- 단장기적으로 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함. 재산기준에 적용되는 급지구분, 재산의 소득환산율, 자동차 기준 완화 등 여러 제도적 제약조건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 있음

〈표 3-5〉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 환산율

(단위: 만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주거용 자산	생계·주거·교육급여	12,000	9,000	5,200
	의료급여	10,000	6,800	3,800
기본재산액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	4,200	3,500
	의료급여	5,400	3,400	2,900
구분	주거용자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자료: 보건복지부. (2022b).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 장기 제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혹은 폐지

-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생계, 주거 및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상황. 하지만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되고 있음
- 의료급여 역시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부담 증가라는 서로 상반된 지향점이 있으므로 서로 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빈곤층의 의료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

○ 노인빈곤 및 근로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역할 분담

- 기초생활보장제도 외부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논의 중.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이 개혁돼도 현세대 노인 빈곤문제는 해소되지 못함
 - 연금개혁 속에서 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 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인빈곤 축소에 어디까지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간 논의가 필요함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성숙해지면서 빈곤 대물림 현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 특히 근로빈곤층의 빈곤 대물림과 근로유인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음. 장

기적으로 근로연령층의 근로빈곤 문제에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나. 긴급복지지원제도

1) 코로나 19 이전 제도 현황

-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당시 새로운 급여로 긴급생계급여가 함께 시작되었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 긴급생계급여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에서 한 아동이 아사문제가 크게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긴급하고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가구를 보호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06년 3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
 - 초기 제도 도입 당시에서 한시적 제도로 도입되었지만,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도의 지속적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9년 5월에 영구법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짐
 - 2014년 2월 송파구 세 모녀사건이 발생하면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량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 수급조건을 완화하면서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
 - 긴급복지지원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기조건과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정부는 점진적으로 위기조건을 확대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면서 위기가구를 지원
 - 위기조건 완화
 - 2006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법 2조에서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구 분리,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 곤란 등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함

- 이후 위기조건에 대한 완화를 통해 현재는 아래와 같이 규정중
 -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 2014년 12월 최저생계비 185%, 2015년 7월 기준중위소득 75%로 선정기준을 확대

2) 감염병 발생 이후 제도 변화 내용 및 평가

□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 19 감염병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취약계층, 불안정소득계층, 영세소상공인 등은 생계에 대한 위협에 직면

○ 정부는 위기 가구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 조건을 완화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

□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제도개선(2020.03~2021.03)

○ 지원 기준 완화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현행 유지)

- (재산) 대도시 1.88→3.5억원, 중소도시 1.18→2억원, 농어촌 1.01→1.7억원
 - (금융재산) 500만원 → 1,212만원(4인 가구)
 - (기타) 법령상 위기 사유 세부요건 미충족시에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2020년 23만 가구 지원. 지원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0년 총예산 4,183억원 대비 3,962억원 집행(실집행률 94.7%)
- 본예산 1,656억원 + 1차 추경 2,000억원 + 2차 추경 527억원
 - 긴급복지제도는 연중 사업이며, 2020년 3월 기준 요건 완화
- 한계 : 긴급복지지원사업 사업량 증가로 일선 인력 부족 및 자동화 시스템 필요성이 증대

〈표 3-6〉 '20~'21년 추경에 의한 재정지원 내용 및 규모

구분	긴급복지 (3차 개선, ~21.3.3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020.10.~12.)	한시생계지원 (2021.5.~6.)																
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등의 소득 상실,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이혼, 단전, 출소 등 * 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코로나 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개별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인정(3.23. 1차 개선)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① 금융재산 초과 등으로 긴급복지 기준 탈락자 ② '20.2월 이후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지원받다가 중단된 저소득층 등 ③ 기타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소득감소 증빙 <div><div>최근 소득 (21. 1~3)</div><div>비교 소득 (과거 비교 기간)</div><div>vs (예외)</div><div>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div><div>② '19년 상·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20년 상·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div><div>③ '19년, '20년 동월 소득</div><div>① - ③ 유리한 기준 선택가능</div></div>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천원) <table><tr><th>가구원 수</th><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r><tr><td>100%</td><td>1,757</td><td>2,992</td><td>3,871</td><td>4,749</td></tr><tr><td>75%</td><td>1,318</td><td>2,244</td><td>2,903</td><td>3,562</td></tr></table>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100%	1,757	2,992	3,871	4,749	75%	1,318	2,244	2,903	3,562	좌동	좌동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100%	1,757	2,992	3,871	4,749															
75%	1,318	2,244	2,903	3,562															
재산 기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재산 차감 기준 도입(3.23. 2차 개선) 후 확대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대도시 1억6200만원, 중소도시 8,200만원, 농어촌 6,900만원 차감 ⇒ 재산기준 상향효과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원 이하	○대도시 공시가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긴급복지 재산기준의 3배	좌동																
금융 재산 기준	○5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100%→150%로 확대 ⇒ 금융재산기준 상향효과 1인가구 763만 원, 4인가구 1,212만 원 이하	해당없음	좌동																
지원 내용	○(4인가구/월): 생계비 지원(126.7만원/6회) <table><tr><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r><tr><td>474.6</td><td>802.0</td><td>1,035.0</td><td>1,266.9</td></tr></table> *가구원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증가 의료비(300만원 한도, 2회), 주거(64.3만원 한도, 12회), 복지시설이용(145만원 한도, 6회)	1인	2인	3인	4인	474.6	802.0	1,035.0	1,266.9	○1인 40만원, 4인 100만원 1회 지급 -타 사업(생계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중복 제외 <table><tr><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 이상</th></tr><tr><td>400</td><td>600</td><td>800</td><td>1,000</td></tr></table>	1인	2인	3인	4인 이상	400	600	800	1,000	○1가구 50만원 1회 지급 -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 중복지원제외
1인	2인	3인	4인																
474.6	802.0	1,035.0	1,266.9																
1인	2인	3인	4인 이상																
400	600	800	1,000																

자료: 김성아, 여유진, 이다미 외. (2021). 긴급복지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p219)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제도

○ 코로나 19로 인해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

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기준 완화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를 지원

-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지원제도로 55만가구 예산을 편성하여 이 중 359,864건 지원

〈표 3-7〉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수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지원금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 예산 3,509억원 대비 2,237억원 집행(실집행률 63.8%)

- 2020. 10~11월 신청, 2020. 12월 지급

□ 한시생계지원

○ 2020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후 2021년에도 코로나 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추가적으로 2021년 상반기 한시생계지원제도 도입 후 위기가구에 지원

○ 지원내용

-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 긴급생계지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 급여는 가구규모와 상관없이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긴급생계지원과 한시생계지원의 지원가구를 보면,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에 비해서는 긴급생계지원과 한시생계지원의 규모가 좀 더 많았음

○ 가구원수 기준으로는 1인 및 2인 가구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코로나 19 당시 가구원수가 적은 저소득 가구가 코로나 19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예측됨

〈표 3-8〉 코로나 19 긴급지원 지원규모

구분	규모(가구, 명)			비율(%)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긴급 생계지원	한시 생계지원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긴급 생계지원	한시 생계지원
1명	156,556	143,943	281,023	57.0	40.1	43.3
2명	55,284	101,066	192,322	20.1	28.2	29.6
3명	31,915	55,133	90,541	11.6	15.4	14.0
4명	21,547	42,012	61,383	7.8	11.7	9.5
5명	7,438	13,333	18,799	2.7	3.7	2.9
6명 이상	2,157	3,434	4,679	0.8	1.0	0.7
전체	274,897	358,921	648,747	100.0	100.0	100.0
평균	1.82	2.14	2.02	-	-	-

주: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를 정리한 자료임.

자료: 김성아, 여유진, 이다미 외. (2021). 긴급복지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p222)

3)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

□ 코로나 19를 지나며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운영되어 온 재산기준에 대한 완화조치는 현재도 진행중

○ 2022년 해외 불안 요인(전쟁, 금리인상 등)으로 국내도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빈곤층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 완화는 계속해서 유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06.22.)

□ 2022년 상황을 보면 코로나 19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위기를 조성하고 있음. 국내외적으로 경기불안 요인이 상존하며, 2023년 세계적 경기하락 국면이 예상되고 있음

○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치와 중요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요 선정기준에 대한 완화와 더불어 급여수준 조정에 대한 조치는 유지될 것으로 예측됨

4) 제도 변화 혹은 대응의 함의

□ 긴급복지지원제도

- 일시적이든 상시적이든 위기 국면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가구를 돕고, 다음의 안정적 생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가교역할을 해 줌
- 과거 유럽 금융위기는 물론 현재의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내부 제도 개선을 통해 빈곤가구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함
 - 이번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도 빈곤 및 위기가구 등에 대한 지원은 시의적절하게 시행된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여전히 위기로 인해 불행한 상황을 경험하는 개인이나 가구가 있다는 측면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이들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좀 더 적극 행정을 취할 필요가 있음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제도 평가

-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 전달체계, 지급시기 등에서 한계 지적
 - 고용부·중기부 사업 등에서 배제된 취약 저소득층 특성상 소득·매출 등이 감소된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제출이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집행 부진 발생
 - 취약계층이 주로 일용근로자, 노점상 등으로 소득 및 매출자료가 없는 경우 다수 발생
 - 집행을 위해 지자체별 임시 TF를 구성하였지만, 업무 과중, 한시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의 지속성 및 체계성 부족
- 소득감소 여부 심사, 타 사업 중복 제외 확인 등으로 2020년 8월 대비 3~4달 이후에 급여가 지체 지급(12월)

5) 평가 및 제언

□ 단기 제언

- 단기 대응보다 중장기 대응 기조 유지를 통해 위기 가구 위기 극복 지원 필요
 - 위기 속에서 위기조건, 선정기준(재산 기준 등) 완화와 급여 수급 조건 등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 있었음
 - 하지만 코로나 19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지속되는 속에서 긴급복지지원 완화조치도 단기에서 점차적으로 지원기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는 한계 속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함
 -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단기적 기준 완화보다는 좀 더 기준 완화 기간을 늘려 위기 가구가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을 위한 인프라 부족
 -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의 지원 예산이 확보되면서 동제도를 통한 보호가구가 증가
 - 지원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담당할 핵심 및 지원 인력이 부족하여 적시적기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
 - 단기 지원사업으로 필수인력에 대한 요구가 낮을 수 있지만, 위기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충분한 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많은 위기가구가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

□ 장기제언

- 긴급복지지원제도 위상 제고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위기가구를 보호하고 있지만 30%를 초과하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유일
 - 재산기준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기준중위소득

30%를 쉽게 초과한다는 점에서 이들 위기가구에게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최저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임

- 하지만 현재 긴급복지지원제도 급여조건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기를 쉽게 벗어나지 못한 가구의 경우 언제든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 급여조건이 조정이 필요
- 무엇보다 기준중위소득 30% 초과 75% 이하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한 사회안전망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와의 관계 정립

-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나가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이상에서 현금성 급여를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이 등장.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들 수 있음
- 각각의 제도가 가진 급여조건은 다르지만, 지원대상 범주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또한 이들 제도들이 장기간 지원보다는 단발성 지원에 그치고 있어 급여 이후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빈곤 및 위기가구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함
- 차상위 혹은 차차상위로 명명되는 기준중위소득 30% 초과 개인 및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들에 대한 특성과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 필요시 제도간 연계, 역할 조정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다. 근로장려금

1) 코로나 19 이전 제도 현황

□ 근로장려금제도는 근로빈곤층, 저소득임금근로자의 소득보장과 근로유인 촉진을 위해 2008년 도입

○ 미국에서 운영중에 Earned Income Tax Credit 등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에 부합되게 제도를 조정하며 도입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반으로 세금을 환급하는 형태의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제도임

□ 근로장려금 대상

- 근로장려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및 재산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 제도 도입 초기

- 2008년 초기 부부합산 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세대, 무주택세대, 재산이 1억원 미만으로 설정됨

○ 근로장려금 대상 확산

- 2009년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무주택 또는 5천만 이하 소규모 주택 세대로 주택 포함 1억원 미만으로 조정
- 이후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소득액, 기준금액 등이 조정되면서 근로장려금 대상이 크게 증가
- 201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2015년 부터는 자영업자까지로 대상이 증가
- 2019년에는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어,
 - 전년도 말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부부 연간 총소득이 가구구성 기준에 부합되고(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6백만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것으로 조정됨

○ 근로장려금 급여 변화

- 근로장려금 급여는 초기에는 부양자녀 규모에 따라 차이를 두었지만, 2014년 이후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
- 근로장려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가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 구간별로 급여에 있어 차등을 두어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아래 <표 3-9>참조)
- 2015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와 소

득 수준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원

〈표 3-9〉 근로장려금 주요 변화(2017년 이전)

개정	2008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6·2017년																																							
(적용)	(2009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7년~)																																							
적용 대상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모험모집인·방문판매원	(좌동) '15년부터 자영업자까지 확대적용(단, 고소득 전문직, 일정소득금액 이상 사업자 제외)	(좌동)	(좌동)																																							
신청 제외자	신청일 직전연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생계·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신청연도 3월 중 국 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주거·생계급여를 받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단, 자녀장려금 수급불가)	(좌동)																																							
부양 자녀	1인 (19세미만)	무자녀가구 추가 (단, 배우자 필요)	(좌동) (단, 60세이상 단독가구 가능)	(좌동) (단, '16년 50대이상, '17년 40대이상 가능)	(좌동) (단, '18년 30대 이상 가능)																																							
소득 요건 ·최대 지급액	부부합산 1,700만원 미만, 최대 120만원 지급	<table><tr><th>부양 자녀</th><th>소득 기준 (만원)</th><th>최대 지급액 (만원)</th></tr><tr><td>없음</td><td>1,300</td><td>70</td></tr><tr><td>1인</td><td>1,700</td><td>140</td></tr><tr><td>2인</td><td>2,100</td><td>170</td></tr><tr><td>3인~</td><td>2,500</td><td>200</td></tr></table>	부양 자녀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없음	1,300	70	1인	1,700	140	2인	2,100	170	3인~	2,500	200	(좌동)	<table><tr><th>부양 자녀</th><th>소득 기준 (만원)</th><th>최대 지급액 (만원)</th></tr><tr><td>단독 가구</td><td>1,300</td><td>70</td></tr><tr><td>홀별이</td><td>2,100</td><td>170</td></tr><tr><td>맞별이</td><td>2,500</td><td>210</td></tr></table>	부양 자녀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가구	1,300	70	홀별이	2,100	170	맞별이	2,500	210	<table><tr><th>부양 자녀</th><th>소득 기준 (만원)</th><th>최대 지급액 (만원)</th></tr><tr><td>단독 가구</td><td>1,300</td><td>77</td></tr><tr><td>홀별이</td><td>2,100</td><td>185</td></tr><tr><td>맞별이</td><td>2,500</td><td>230</td></tr></table>	부양 자녀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가구	1,300	77	홀별이	2,100	185	맞별이	2,500	230
부양 자녀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없음	1,300	70																																										
1인	1,700	140																																										
2인	2,100	170																																										
3인~	2,500	200																																										
부양 자녀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가구	1,300	70																																										
홀별이	2,100	170																																										
맞별이	2,500	210																																										
부양 자녀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가구	1,300	77																																										
홀별이	2,100	185																																										
맞별이	2,500	230																																										
자녀 장려 세제	-	-	-	'15년 지급분부터 적용 자녀1인당: 30~50만원(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좌동)																																							
재산 요건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등 합계 1억원 미만	(좌동)	(좌동)	1억 4천만원 미만 (1억원 초과시 장려금의 50%만 수급)	근로장려금 1억 4천만원 미만(좌동), 자녀장려금 2억원 미만																																							
주택 요건	무주택(5천만원 이하 1주택 포함)	무주택(6천만원이하 1주택 포함)	(좌동)	무주택 또는 1주택 (주택가격기준 삭제)	(폐지)																																							

자료: 이세진, 임언선. (2021). 근로소득장려세제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 1876호. 국회입법조사처

〈표 3-10〉 근로장려금 주요 변화(2018년 이후)

구분		2018	2019
연령조건		3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	30세 미만 단독가구 포함
소득조건	단독	1,3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홀벌이	2,1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재산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가구당 2억원 미만 (재산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최대지급액 (만원)	단독	85	150
	홀벌이	200	260
	맞벌이	250	300
최대지급액 구간 (만원)	단독	600~900	400~900
	홀벌이	900~1,200	700~1,400
	맞벌이	1,000~1,300	800~1,700
지급방식		당해 반기별 지급(근로자) 다음연 연1회(기타)	당해 반기별 지급(근로자) 다음연 연1회(기타)
지급규모		1.2조원 (166만가구)	3.8조원 (334만가구)

자료: 김재진(2019). 근로장려금제 현황과 과제. 소득보장제도 발전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감염병 발생이후 제도 변화 내용 및 평가

□ 2020년 코로나 발생이후 근로장려금제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같이 대폭적인 제도 개선보다는 급여지급일을 조정하거나 급여를 일부 상향하는 방식으로 대응

□ 급여지급일 조정

○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인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시점은 기존 9월에서 8월로 한달 정도 앞당겨 집행

- 2019년부터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2회 집행하도록 하여 2019년 하반기 신청자는 2019년 12월에, 2020년 상반기는 2020년 6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 2022년에는 정산시점과 급여시점을 동일하게 하도록 하여 기존 9월 지급을 6

월 지급으로 조정

□ 소득 요건 완화

- 2022년 가구소득 기준을 단독가구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홀별이가구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조정

〈표 3-11〉 2022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가구 유형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원구성, 소득유무에 따라 단독·홀별·맞벌이 가구로 구분(2021.12.31.기준)	2021년 총소득 및 2022년 연간 총급여(부부합산)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 전세금, 예금 등 (2021.6.1.기준)
단독가구	①배우자, ②18세 미만 부양자녀, ③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4만~2,200만원 미만	·재산합계액(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억원 미만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 50%만 지급
홀별이가구	신청인 또는 ①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원 미만이거나, ②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③70세 이상 직계존속(②, ③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 있음	4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①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연간 3백만원 이상	600만~3,800만원 미만	

자료: 국세청(2022).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보도자료(2022.09.01.) (재인용)

□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가구수는 계속해서 증가 중이며, 이에 따라 지급액 역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신청가구는 2016년 310만가구에서 2020년에는 573만가구로 81.5%로 증가하였으며, 지급가구 규모도 동 기간 약 89%가량 증가함
- 자녀장려금에 비해 근로장려금은 2016년 1조1400억원에서 2018년 제도 개편이후 크게 증가하여 2020년에는 약4조 4300억원으로 두배 이상 지급규모가 늘어남
- 대상과 재원규모 변화를 볼 때, 주요한 사회안전망제도로 점차 변화해 가고 있음을 확인

〈표 3-12〉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과 지급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신청가구 수 (가구수)	3,104,179	3,159,484	5,787,092	5,653,401	5,733,135
지급가구 수 (가구수)	2,597,071	2,598,550	4,733,437	4,946,410	4,906,016
근로장려금 지급액 (백만원)	1,141,606	1,280,821	4,300,342	4,391,528	4,428,643
자녀장려금 지급액 (백만원)	542,779	472,918	727,312	638,344	601,695

자료: 국세통계포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현황. 재인용

□ 위기 속에서 근로장려금 영향

-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근로빈곤층, 영세소상공인 등에게 근로장려금은 생활안정과 위기 탈출을 위해 큰 역할을 수행
- 하지만, 근로장려금 급여 특성상 최소 150~300만원은 단기간 일시적 위기 극복만을 가능하게 함. 코로나 19와 같이 장기간 위험이 지속될 경우 근로장려금을 통한 위기 극복은 매우 제한적 효과에 불과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에서 근로소득자는 반기별로 기타소득자는 연간 1회로 특정시점에 급여가 지급됨으로써 상시적으로 그리고 예측불가능한 위기 발생시 적기에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3)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

□ 현 정부 근로장려금 개편 방향

-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근로연령층과 근로빈곤층 소득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가 있으며, 근로장려금에 대한 개편논의도 함께 진행
- 현 정부 인수위원회 보고 내용 중 하나로 근로장려금 개편이 포함
 - 국정과제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중 하나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적정수준 상향 및 재산 요건 합리화”가 포함

- 2023년 정부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개편 논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제도 변화 혹은 대응의 함의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이 일을 해도 가난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근로유인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으로 여겨지면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 근로장려금 대상 및 급여 수준 등의 변화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긍정적 의미에서는 위기 발생 이전 사전 대응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 발생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기보다는 소극적 대응으로 볼 수 있음
 - 이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급여가 지급됨으로써 단기간이라도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은 일회성 급여이고 급여수준도 높지 않아 위기 대응에는 미흡
 - 현재의 제도 운영을 기반으로 볼 때 위기 대응 사회안전망 제도이기보다는 위기 발생 이전에 근로빈곤층의 생계유지, 근로유인을 돕는 사회안전망 제도로 평가될 수 있음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대상과 급여가 조정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정과제를 통해 확대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
 - 이와 같은 근로장려금 제도의 변화는 근로빈곤층, 영세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5) 평가 및 제언

- 근로장려금의 대상변화와 급여지급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장려금 제도는 한국의 근로빈곤층 대상 주요한 사회안전망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제도의 주요성과 변화에 비해 위기 대응 능력에 있어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근로장려금의 목적과 방향 설정을 명확히 하여 근로장려금이 평시에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같이 평시와 위기 상황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외부 사회보장제도 혹은 사회안전망 제도 변화에 따른 향후 방향 모색
 - 부족한 사회안전망 특히 소득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근로연령층과 근로빈곤층 대상 제도 등에 대한 평가와 재편 논의가 있음
 - 대표적으로 전국민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자활지원제도, 서울시 안심소득,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근로빈곤층 대상 지원제도로 평가되고 있음
 - 이외에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포함되면서 근로연령층과 근로빈곤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
 - 근로장려금이 근로빈곤층 및 영세소상공인 대상 주요한 사회안전망제도라는 점에서 이들 제도와와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수당제도

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1) 코로나 19 이전 제도 현황

□ 기초연금제도

- 기초연금 도입 이전에 운영된 제도로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음

- 경로연금제도는 1998년 7월 당시 도입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노령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
 - 수급대상은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거나 차상위 계층 노인만을 지원
 - 급여수준도 낮아서 2007년 기준으로 월 3만원에서 5만원에 불과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경로연금제도를 좀 더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돕기 위해 2007년 4월 도입
 - 도입 초기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전체 노인중 소득인정액 하위 60%에 해당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2008년 1월부터 시작, 이후 2009년 1월에는 전체 노인의 70%까지 확대
 - 급여액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기준으로 책정되며, 2028년까지 10%로 인상이 예정되어 있었음

○ 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을 급여수준을 확대하면서 2014년 1월 도입. 도입 당시 급여수준은 월 20만원으로 확대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해 2010년 입법을 통해 도입
 - 장애인연금 도입 당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제도가 운영 중에 있었지만, 급여가 낮아 실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에 한계. 주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
- 장애인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하게 제도가 구성되어 제도 도입 초기 중증장애인의 70%를 대상으로 제도가 설계
 - 대상은 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3급은 중복)으로 정부가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임
 - 급여수준도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도록 제도가 설계됨. 이후 제도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보장제

도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크게 개선되지 못함

-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
 -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보전하기 위한 소득보전 성격을 지님
 - 부가급여는 장애 발생으로 인해 추가적용 소요되는 추가비용(의료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특성을 지님

2) 감염병 발생이후 제도 변화 내용 및 평가

□ 기초연금제도

- 기초연금제도는 코로나 19 이전 지난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수급대상보다는 급여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
- 기초연금 급여액 단계적 조정
 - 노인대상 기초연금 급여액 조정이 코로나 19 시기와 겹치면서 빈곤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생계유지를 위한 주요한 소득보장 수단으로 활용
 - 2018년 9월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대상 월 25만원
 - 2019년 4월 노인 중 소득 하위 20% 대상 월 30만원
 - 2020년 4월 노인 중 소득 하위 40% 대상 월 30만원
 - 2021년 4월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대상 월 30만원

□ 장애인연금

- 기초연금 변화와 동일하게 장애인연금 급여도 코로나 19 시기 급여인상을 진행
 - 장애인연금의 급여는 2019년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월 30만원을 시작으로 2020년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로 2021년 1월에는 기초급여를 월 30만원으로 조정

3)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2022년 기준으로 월 30만원 이상(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조정)을 보장해주고 있음
-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초연금 월 40만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코로나 19의 진행과 노인빈곤, 국민연금 개혁 등과 연계되어 월 40만원으로의 급여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의 인상 기조와 동일하게 급여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
- 전체적 급여조정에 대한 사항은 향후 발표될 5차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따라 연동될 것으로 보임

4) 제도 변화 혹은 대응의 함의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제도 변화는 지난 정부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사항이었으며, 코로나 19 시기에도 예정에 맞추어 급여수준이 조정됨
- 노인과 장애인은 한국에서 대표적 취약계층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위기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급여를 통해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것은 취약계층 삶의 질 유지와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또한 향후 2차적으로 급여 조정에 대한 여지가 있다면 점에서 제도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의 보호 정도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임

5) 평가 및 제언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은 현재 사회적으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견 수렴의 과정이 있어 여기서는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기보다 제도별로 살펴보고자 함

□ 기초연금

- 향후 기초연금의 성격을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즉 기초연금을 연금 혹은 수당의 형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부조의 형태로 볼 것인지 분명한 성격 규정이 필요
- 연금 혹은 수당형태
 - 기초연금을 연금 혹은 수당의 형태로 규정할 경우 현재와 같이 노인 70%가 아닌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보편적 수당의 형태를 가지고, 이때 국민연금 노령연금과의 연계 방안을 고려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의 급여산식에서도 기초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급여산식을 가지고 있어 동 급여산식과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조 형태
 - 기초연금을 공공부조로 본다는 점은 노인빈곤에 대한 대응제도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즉 현재와 같이 노인의 70%라는 조건보다는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기준선을 조정하고 기준선별로 노인빈곤을 줄여나가도록 급여수준을 차등화 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 고령화와 높은 노인빈곤으로 인해 공공부조 형태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증가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급여수준 성숙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공공부조 형태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 역시 기초연금과 같이 장애인연금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연금을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전 성격으로 할 것인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비용 성격인지 분명하게 설정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기초연금과 연동되어 급여가 조정되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함

- 두 번째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의 설정임. 장애인연금에 대한 성격과 역할이 분명하게 설정되면 이에 맞추어 장애인연금의 대상을 현재와 같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 대상을 확대하여 (구)장애인등록법상 장애등급인 3급 전체로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시에는 근로능력평가 혹은 근로능력 판정체계 등에 대한 개편도 필요함

나.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1) 코로나 19 이전 제도 현황

- 한국의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음
 - 이와 같이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자녀 출산으로 인한 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임
 - 정부도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9년부터 양육수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를 전후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
- 양육 수당
 - 2009년 7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2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도입(기초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 아동 월 10만원)
 - 2013년 3월 무상보육 실시(만 0~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 원, 만 2~5세 10만 원)
 - 2022년 만0~1세 이하 영아수당 월 30만원(2025년 월 50만원), 만2~7세 이

하 양육수당 월 10만원

□ 아동수당

- 도입 : 2018년 9월 아동이 있는 가구 90%(만 0~6세 미만), 월 10만원
- 확대
 - 2019년 1월 아동이 있는 가구 전체(만 0~6세 미만)
 - 2019년 1월 아동이 있는 가구 전체(만 0~7세 미만)
 - 2022년 4월 아동이 있는 가구 전체(만 0~8세 미만)

2) 감염병 발생 이후 제도 변화 내용 및 평가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경우 코로나 19 발생 이전에 국정과제를 통해 확대와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음
- 하지만 제도 개선이 코로나 19 시기와 맞춰지면서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데 기여
- 특히 감염병으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를 보육하고 교육해주는 시설로의 접근이 제한된 속에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가정 내 아동 보육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이는 데 기여
- 하지만 현재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대상과 급여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 실질적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정부도 자녀양육 부담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과 시장가격 보전을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개편을 추진

3)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

-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아동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개편을 추진

- 현재의 양육수당은 개편하여 영아수당과 부모급여 형태로 개편 추진 예정
 -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이용시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시 받게되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것임
 - 영아수당은 2022년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원 지급. 2025년까지는 이를 월 50만원으로 확대 예정이었음
 -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영아수당을 대체하여 도입될 예정으로 역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월 35~50만원을 지원할 예정
 - 2024년에는 이를 월 50~100만원으로 상향 예정

4) 제도 변화 혹은 대응의 함의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아수당,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
 - 일정상 낮은 감도 있지만, 현재라도 저출산 극복과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동제도가 도입된 점은 의미가 있음
 - 코로나 19 속에서 직장맘을 중심으로 자녀 양육, 돌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현금성 급여 지원을 통해 일정 부문 양육부담을 줄여주었다는 점은 시의적절한 측면도 있음
 - 하지만 현재의 영아수당 향후 부모급여의 경우 아동 돌봄비용이 영아에만 해당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지원 대상이 적다는 점은 향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아동수당 역시 지원대상과 지원급여 수준이 적다는 점은 실질적 저출산대응과 양육부담 해소는 한계가 있음. 향후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5) 평가 및 제언

- 저출산 대응과 자녀 양육부담 해소라는 점에서 현재의 영아수당(향후 부모급여)과 아동수당에 대한 지원대상 및 급여수준에 대한 조정 필요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당의 조정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측면에서 재정여건 등을 함께 고려한 제도 확대에 논의 필요
- 아동수당 관련 검토
 - 아동수당은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음. 대상측면에서는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
 - 급여측면에서 가구당 아동수에 따른 급여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과 현재의 월 10만원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3. 기타제도

가. 자산형성지원제도

1) 코로나 19 이전 제도 현황

- 한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는 2007년 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을 시초로 시작(김태완 외, 2021)
 - 이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되어 운영중
- 보건복지부 운영 자산형성지원 사업(김태완 외, 2021)
 - 중앙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빈곤층의 탈수급을 촉진하고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
 - 희망키움통장 I (2010년),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내일키움통장 (2013년), 차상위층까지 확대된 희망키움통장II(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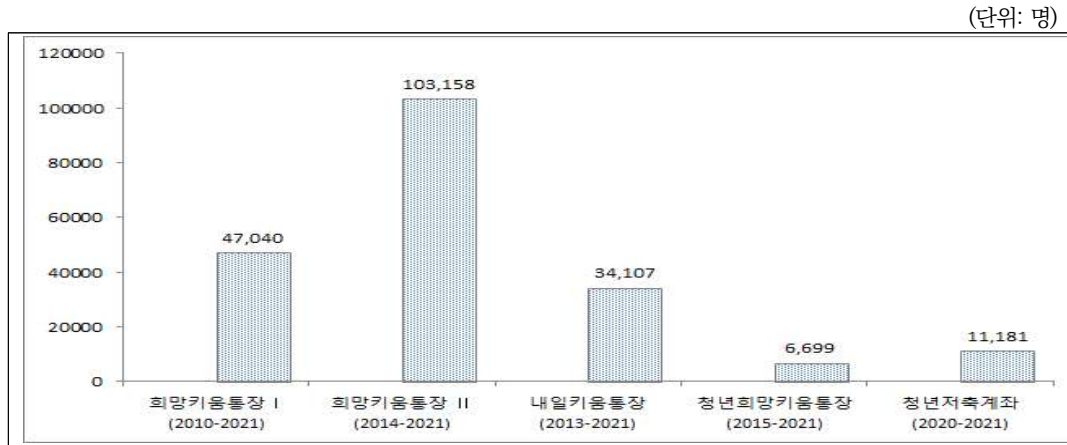
-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18년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2020년)가 도입
- 참여자 규모를 보면 희망키움통장Ⅱ가 가장 많은 10만3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약 67백 명으로 가장 작았음

〈표 3-13〉 보건복지부 통장 개요

구 분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 (15~39세)
'21년 대상자	5천 명	3천 명	10천 명	5천 명	13천 명
본인 저축	월 5/10만원	월 10만원	월 5/10/20만원	본인저축 없음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월 10만원
정부 지원	가구 소득비례 (평균 360,000원)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청년 소득비례 (평균 377,000원)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기타 지원	민간 매칭금 (월 최대 2만원)	-	자활사업단 매출액에서 추가지원 (월 평균 23만원)	민간 매칭금 (월 최대 2만원)	-
3년 평균 수급액 (10만원 저축시)	(평균) 1,728만원 (최대) 2,819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평균) 1,537만원 (최대) 1,6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평균) 1,789만원 (최대) 2,369만원 + 이자 * 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교육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자료 : 김태완, 류진아, 이주미, 박세경, 김문길, 정은희,...., 한창근. (2021). 사회안전망 강화정책과제 발굴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p45)

[그림 3-3]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규모



자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자산형성지원) (<https://www.kdissw.or.kr/menu.es?mid=a10208010000>)

2) 감염병 발생 이후 제도 변화 내용 및 평가

□ 코로나 발생이후 한국판 뉴딜 발표를 통해 격차해소 과제로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프로그램 도입을 발표

-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기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사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
-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백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이 납부하는 저축에 이자를 장려금의 형태로 연간 6백만원한도로 최대 4%까지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임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이 가능하도록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것임
- 이외에 군장병을 대상을 정부가 적립금을 매칭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함께 추진

〈표 3-14〉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안)

가입대상	지원혜택	납입한도	만기수령금
『청년내일 저축계좌』 연소득 2,2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가 1~3배 매칭	연 120만원 (3년 만기)	(3년후)720~1,440만원수령 (청년 360 + 정부 360~1,080)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저축장려금 최대 4%p 수준 (1년 2%→ 2년 4%) 지급	연 600만원 (2년 만기)	(2년후) 1,200만원+ 시중금리 + 저축장려금 36만원 수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600만원 (3 ~ 5년)	(3년후) 1,800만원+펀드수익*
군장병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3:정부1 비율로 매칭	월 40만원 (전역 시 만기)	(사회복귀시) 최대 1천만원 수령

주: 1) * 3년간 납입한도 전액 투자시, 최대 72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현세대 청년의 경우 일자리, 자산형성 등에서 기존 세대에 비해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와 2000년대 들어 급격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불안정 등으로 인해 현세대 청년은 미래에 대한 불안정에 노출
 - 코로나를 전후로 우리 사회에 부동산 매입 열풍 속에서 청장년을 대상으로 한 ‘영끌족’ 현상이 주요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기도 함
-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빈곤층을 넘어 중간계층에 속한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사업을 추진
 - 자산형성사업을 통해 청년의 자산형성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됨
 - 하지만 영끌족이라는 현상과 최근 미국 금리 인상 이후 과도한 부채 매입에 따른 위기에 직면한 것과 같이 단순히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관리, 금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또한 필요

3)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

- 정부는 자산형성사업이 세부화되고, 여러 제도가 다소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자산형성사업 개편을 추진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형성사업 5개와 코로나 19를 통해 추가된 청년대상 자산형성 사업을 조정, 통합하여 3개의 사업으로 조정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Ⅰ,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조정
 - 자산형성사업의 경우 현재 개편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추세가 당분간 유지되어 운영될 것으로 보임

〈표 3-15〉 자산형성사업 개편 내용

구 분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일하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19-34세)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	대상별 추가지원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대상별 추가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용도증빙)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자립지원: 자산형성지원)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204&PAGE=4&topTitle=)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 (<https://hope.welfareinfo.or.kr/bsns/bsnsIntrcnAcc.do#none>)

4) 제도 변화 혹은 대응의 함의

- 소득불평등을 넘어 자산불평등 혹은 자산 격차에 대한 문제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 장년층에서 자산취득에 대한 욕구 또한 높아진 상황
 - 현재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자산취득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어, 정부가 직접적으로 취약계층 청장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 사업으로 평가됨
- 자산취득에 취약한 취약계층, 청년의 경우 자산형성사업이 없을 경우 부채를 통해 자산을 취득하게 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역시 높아지므로 자산형성사업이 취약계층의 자산 취득을 도움으로써 탈빈곤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5) 평가 및 제언

□ 실질적 자산 축적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으로의 발전

- 자산형성을 통해 취약 청장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함. 하지만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자산형성사업의 만기후 받게 되는 자산 수준이 높지 않아 실질적 자산 축적에 한계
- 노동시장내에서 자산을 통해 창업 등을 통한 탈빈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자산축적이 요구됨
- 혹은 축적된 자산을 통해 부동산 등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기에도 현실적으로 높아진 부동산 가격을 고려하면 현재의 자산형성사업의 자산축적 규모로는 이를 담당하기 어려움
- 사회적으로 취약 청장년이 자산형성사업을 통해 주거안정 또는 취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산형성 사업 참여자 대상 재무(혹은 금융) 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 자산형성 참여자의 경우 일반국민과 같이 재무 혹은 금융관련 교육이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으므로 목돈 마련과 활용등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
-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재무 교육 혹은 재무관리 등에 대한 지원과 같은 사후관리 지원이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나. 단기, 일시적 지원제도

1) 코로나 19 이전 제도 현황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이전 여러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시 소득보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은 주로 한시적 지원제도에 의존하고 있었음
- 대표적으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실업자, 빈곤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시생계지원제도와 공공근로⁴⁾ 등의 지원제도가 도입

- 한시생계보호 선정은 소득기준은 생활보호제도와 동일(23만원), 재산기준은 가구당 4,400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2,800만원(거택보호기준)보다 높게 설정
 - 1998년 한시 생계보호대상자 수는 7만 7500명이었으며, 2000년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전까지 지속(김태완, 김미곤 외, 2020)
-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역시 한시 생계보호제도 재도입. 선정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재산기준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하였으며, 금융재산은 300만~500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하였음(글로벌 금융위기백서, 2011)
 - 당시 40만 8천 가구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였으며, 이외에 재산담보부 용자 지원제도를 통해 자가 가구 중에서 금융위기로 생활고에 놓인 빈곤가구를 지원
-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한시생계제도는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도입되어 운영된 바가 있음
- 한시적 소득보장제도 장점은 국회, 외부토론 등을 통한 입법과정 없이 직접적 재정투입을 통해 단기간 위기 가구를 보호하고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음
 - 단점은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일시적, 한시적 제도 등이 주요하게 활용되면서 일상적 위기 상황에서 위기가구, 빈곤층 등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 등에는 한계가 존재
 - 지난 위기 상황이 주로 불안정고용계층, 빈곤층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단기적 지원을 통해서도 일정수준에서 위기 극복이 가능했지만,
 - 코로나 19와 같이 장기간 위기가 지속되고 위기 대상도 확대될 경우 한시적

4) 공공근로사업에 정부는 1999년 2조6218억원(연간 1,525천명), 2000년 1조3207억원(연간 876천명)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였고, 2001년에도 6,500억원의 예산으로 375천명 규모의 사업을 실시(김태완, 김미곤 외, 2020. 재인용)

소득보장제도로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코로나 19 속에서 서유럽 복지국가들이 기존 소득보장제도를 확대,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위기가구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 유지에 힘쓴 것처럼 한국도 중장기적으로는 일시, 한시적 소득보장제도 대신 확장적이고 대상 포괄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함

2) 감염병 발생 이후 제도 변화 내용 및 평가

- 2020~2022년 6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민은 물론 위기가구에 대한 소득보장 지원방안을 마련
 - 일시적 지원제도로는 앞에서 설명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제도, 한시생계지원제도를 들 수 있음. 이외에 소득보장측면에서 많은 논쟁을 유발한 것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지원금제도로 2020년 이후 두 번에 걸쳐 시행
 - 첫 번째는 2020년 4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기획재정부, 2020)
 - 지원대상은 전 국민, 2,171만 가구로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 적용
 - 지원단가는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 재정은 총 14.3조원 지원(국비 12.2조원, 지방 2.1조원)
 - 두 번째는 코로나 19 추가경정예산 여섯 번째(2021년 7월)에서 지원한 국민생계지원금임(기획재정부, 2021)
 - 가구소득기준 전체 국민중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추가적으로 178만 가구지원
 -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기준소득 약 20% 상향 효과)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으로 가구 1인 추가시 25만원씩 추가 지원

- 재정은 총 11조원 지원(국비 8.6조원, 지방 2.4조원)

3)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

- 코로나 19 속에서 수행된 한시적, 일시적 사업은 단발성 사업으로 집행기간과 예산이 소진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제도임
- 즉, 일시적 단기적인 위기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 향후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19 등과 같은 위기가 재발할 경우 다시 한번 등장하여 단기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4) 제도 변화 혹은 대응의 함의

- 긴급한 위기 상황속에서 일시적, 단기적 소득보장 지원제도는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안정에 기여
 - 코로나 19의 지속되는 위기 속에서는 모든 국민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민 혹은 일부 대상을 제외하는 비록 선별적 지원제도이지만 긴급소득지원 정책을 시행한 점은 의미가 있음
- 일시, 단기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어려운 점은 단기 조치임에도 국민적 논쟁이 유발되었다는 점임
 - 저소득, 위기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한시생계지원제도는 너무 단기이고 지원 대상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코로나 19와 같은 장기 위기 상황에 적극적 대응이 어려움
 -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 역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쟁이 크게 유발되고 국민 갈등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역시 바람직한 소득보장제도로 보기가 어려움
 - 소모적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지원 수준과 지원시기가 늦어지면서 실제 필요

한 적기에 도입되어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

5) 평가 및 제언

□ 단기·일시 지원제도와 영속적 지원제도 간 효율성,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

-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주요 국가들의 위기 대응을 살펴보면, 유럽국가와 미국, 일본, 한국 등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가 차이가 있었음
- 유럽 국가의 경우 기존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선정, 급여 기준 등을 조정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주로 활용하였다면, 미국, 일본, 한국 등과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단기·일시적 처방을 사용(김태완 외, 2020)
- 어느 방안이 위기 극복에 더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음. 하지만 국내적으로도 항구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긴급복지지원제도 개편과 더불어 일시 사업이 동시에 지원된 바가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어느 제도가 좀 더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주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제3절 합의 및 정책 제언

□ 코로나 19 위기 속 위기가구 생활안정에 기여

-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다른 정책과 함께 소득보장제도는 취약계층은 물론 중간계층에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기 극복에 기여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물론 한시생계보호와 같은 일시적 제도를 통해 위기가구 보호에 주력
 - 중간계층 이상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고용안정자금

지원 등 여러 형태의 소득과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가구의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

□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논쟁이었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 조속한 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지속됨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완화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
 - 취약계층, 청장년층 자산 축적 지원을 통해 탈수급,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 개편과 확대 진행
- 저출산 극복과 노인빈곤 및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급여 수준 제고
 - 코로나 19 시기 속에서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빈곤 완화 및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급여수준 상향 조종
 - 저출산극복과 아동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수당을 개편하여 영아수당은 신설하고 아동수당 대상자를 전체 아동으로 확대

□ 소득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여전한 논쟁

- 위기 상황 속에서 소득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며, 이중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 개편은 진행
 - 하지만 코로나 19의 직접적 피해자인 불안정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근로연령층과 근로빈곤층을 위한 제도 개선은 미진
-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논쟁이 유발되고, 정치 상황에 따라 지원대상이 조정되는 소모적 사회논쟁이 지속
- 단기 및 일시 제도에 대한 의존과 미래지향적 소득보장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기본소득, 부의소득세, 최저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 및 근로장려금 개편 등 소득보장제도 주요 축 중의 하나인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 개편에 소극적 대응 중



제4장

사회서비스 영역 제도 변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내용

제2절 코로나 19 이후 사회서비스 영역의 대응과 평가

제3절 함의 및 정책 제언

제4장 사회서비스 영역 제도 변화⁵⁾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내용

1. 코로나 19 위기에서 드러난 사회서비스 분야 문제점 및 취약성

1) 사회서비스 제도 현황

□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로서 매우 광범위한 영역과 기능을 포괄하고 있지만, 정책 사업으로는 협의의 개념에 따른 노인, 아동, 장애인 돌봄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대인서비스를 지칭함

○ 2022년 예산기준 사회서비스 정책의 주요 세부사업은 노인, 아동, 장애인 돌봄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로 발전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돌봄의 사회화와 함께 보편적 제도로 발전하였음
- '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예산 규모는 97조4,767억 원이며, 이중 기금예산과 특별예산을 제외한 일반예산은 61조 7,592억 원임
- 일반예산 사회서비스 중 1천억 원 이상의 세부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총 규모는 12조 9,905억 원 규모임. 이는 보건복지부 총예산의 13%를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의 20%를 차지함. 특별회계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100억 원)의 대표사업인 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1,770억 원)이 있음
- 세부사업은 주로 돌봄에 해당됨. 노인돌봄은 노인장기요양과 노인맞춤돌봄이 대표적 사업이며, 아동돌봄은 영유아보육과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5) 이번 장의 내용은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기조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둬. 해당 장의 작성 시점이 이전 정부 집권기와 겹친 결과, 전반적인 내용이 이전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기조에 가깝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함.

장애인돌봄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발달장애인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아동가족지원 사업임

○ 사회서비스는 자산조사 또는 진단적 구분(장애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자격 기준이 부여되는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선별적 사업보다 장기요양과 영유아보육사업 등 보편적 사업의 규모가 큼

-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2013년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이라는 두 가지 제도로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며, 이 두 사업이 사회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임
- 2022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은 13조 3,467억 원 (보험료 수입 8조 8,010억 원, 정부지원금 4조 4,967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고(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영유아 무상보육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4조 8,908억 원(영유아보육료 지원 3조 2,028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 지원 1조 6,880억 원) 규모를 차지함(보건복지부, 2022)

〈표 4-1〉 주요 사회서비스 예산 규모 (2022년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2022년 예산
보건복지부 예산	총지출 규모 (A)	974,767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B)	622,729
사회서비스 세부사업 (1천억 원 이상)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32,028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정부부담금)	20,354
	장애인활동지원	17,405
	보육교직원인건비및운영지원	16,880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14,422
	자활사업	6,965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6,22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366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2,100
	발달장애인지원	2,080
	지역아동센터지원	1,968
	장애인일자리지원	1,85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균특회계)	1,770
	장애아동가족지원	1,491
	상위 14개 총계 (C)	129,905
사회서비스 예산 비중	C/A	13.33
	C/B	2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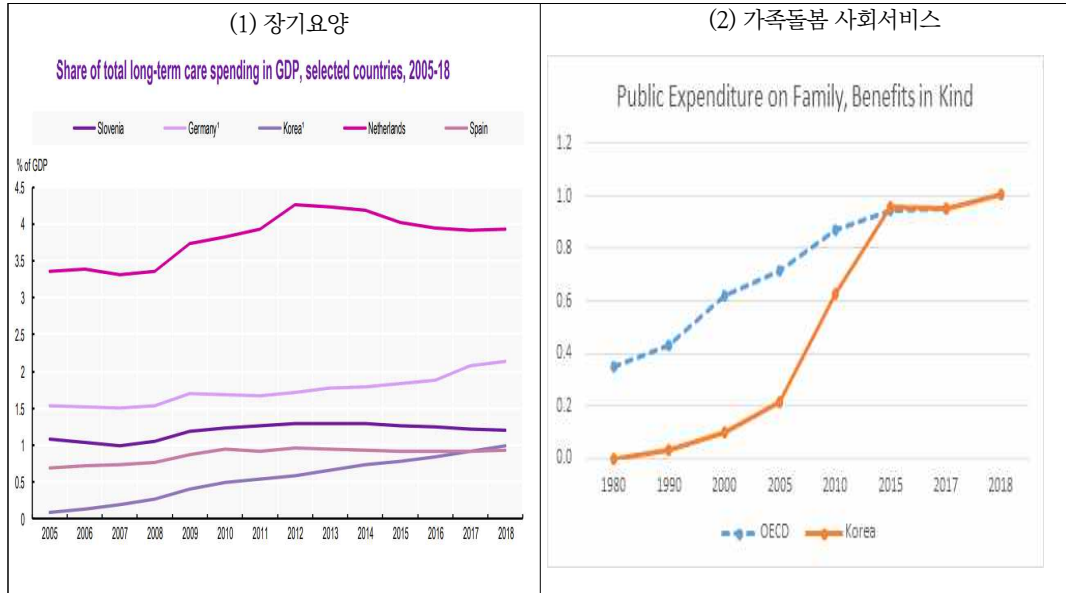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22),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 코로나 19 발생 이전 사회서비스 제도 변화의 환경

- 사회서비스는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전 국민적 요구에 따라 제도 신설, 수급권 및 이용대상자 확대, 인프라 확충이라는 방향성에 큰 변화 없이 지속 확대되어 왔음
- 사회서비스는 발전 과정에서 원조형, 위탁형, 시장형 제도가 각기 추가되고 누적되어 오면서 현재 다양한 전달체계가 혼재하는 특성을 보임(김영중, 2012)
 - 1세대 사회서비스 (1950~1970년대): 생활시설 원조 방식
 - 2세대 사회서비스 (1980~2000년대 중반): 이용서비스 원조 방식
 - 3세대 사회서비스 (2000년대 중반~ 현재): 수요자 지원방식(바우처, 사회보험)
- 사회서비스 확대의 추동 요인으로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생 문제 그리고 돌봄의 가족기능 약화라는 요인이 자리 잡고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 정책은 보편적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공기관 확충이 주요 과제였음
 - 최근 10년간 장기요양 수급자 연평균 증가율이 12%에 달하고 있음. OECD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장기요양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0.1%에서 2018년 1.0%로 증가함
 - OECD SOCX 자료의 아동보육을 중심으로 한 가족 지원 현물지원방식(benefit-in-kind) 지출통계를 보면 GDP 대비 비중이 2005년 0.22%에서 2019년 1.01%로 5배로 증가함
 - 이러한 빠른 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사회서비스 발전 전략은 산업화와 민간 공급자 진입 육성이었음
- 코로나 19 발생 전, 정부는 그 동안의 공급 확충 정책에서 벗어나 공적책임 강화를 시도함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포용국가 전략회의, 그리고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은 사회서비스의 제도 개선 방향을 공공성 및 신뢰성 강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밝힘(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관계부처합동, 2019)

- 사회서비스의 중점과제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걸맞은 사회보장 제도로 체계화하기 위한 공공성 강화라는 전달체계 과제였음
 -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민간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방향에서 전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서비스 공급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
 - 구체적으로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회서비스의 지자체 총괄 조정 기능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온종일돌봄 등 보육과 교육에 국가의 책무성 강화가 계획됨
-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는 새로운 욕구에 따른 급여 신설보다는 사각지대 해소 및 수급자 확대 수준에서 다루어짐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달리, 사회서비스는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문재인케어,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청년저축계좌 도입 등과 같은 분명한 제도 변화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없음
 - 노인돌봄의 경우,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가 신설되었고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신설 등 일부 확대가 추진됨
 - 노인맞춤돌봄은 기존 6종 노인돌봄을 통합하여 대상자를 확대한 제도로 신규 제도 도입으로 보기는 어려움
 - 아동돌봄의 경우, 아동보호체계의 국가의 공적책임 강화 그리고 온종일 돌봄으로 초등방과후 확대가 대표적 과제임
 - 장애인돌봄의 경우,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자립지원체계 구축이 추진됨
 -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직업재활시설과 지역사회재활 시설 확충, 자립주거지원이 구체화됨

[그림 4-1] 장기요양, 가족돌봄 사회서비스 공공지출 비중(GDP 비중)



〈표 4-2〉 코로나 19 이전 사회서비스 주요 제도개선 추진 과제

구분		코로나 19 발생 이전 제도 개혁의 환경
노인	노인장기요양	'18년 인지기원등급 신설,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 수 '17년 43.7만개에서 '22년 80만개 계획 (국정과제 43번)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사회서비스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일자리 34만개 창출 (국정과제 17번)
	노인맞춤돌봄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으로 '19년 35만명에서 '20년 45만명으로 확대
아동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으로 초등돌봄 '18년 33만명에서 '22년 53만명 확대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강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의무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16년 22.6%에서 '21년 35.3%로 확대
	보육지원체계 개편	기본 - 연장보육, 시간제 보육 도입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적 욕구조사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수급자 확대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서비스 도입, 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탈시설, 주거지원 강화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탈시설지원센터,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3)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 나타난 돌봄과 생활 지원의 공백

□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서비스 대상자 위험은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됨

- 첫 번째 집단은 취약계층 보호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요양원 및 장애인생활시설 등 집단생활시설 거주자들로서, 코로나 사망 위험이 급증한 집단임
- 두 번째 집단은 보편적 사회서비스로서 보육, 방과후 돌봄,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 재가서비스 이용자임. 재가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가족 부담이 크게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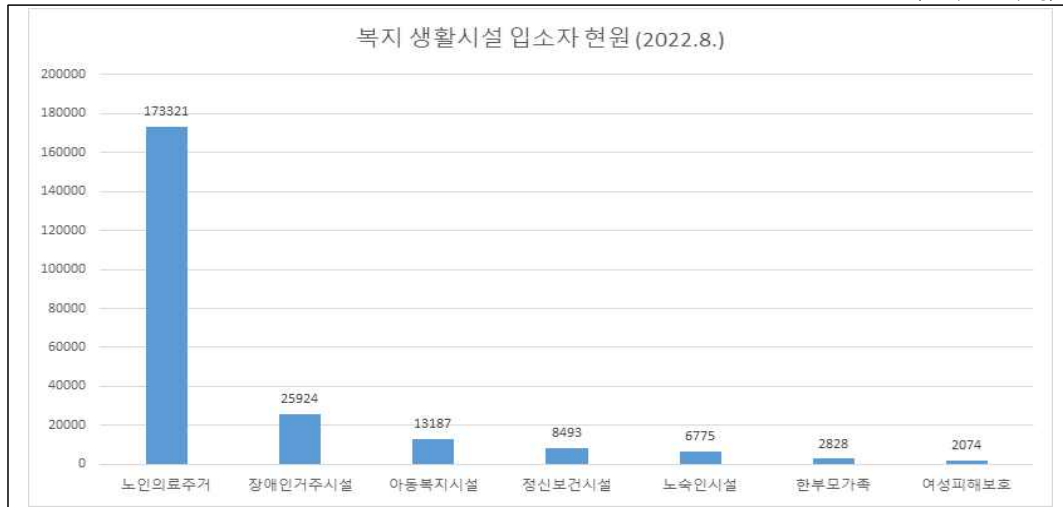
□ 코로나 19의 발생과 정부의 대응은 집단생활 거주자의 생명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음

- 사회서비스는 인구고령화 및 가족돌봄 기능 약화라는 신사회위험에 의해 보편적 서비스로 발전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한 이들에 대한 전통적 복지로서 생활시설 보호 기능을 수행함
 - 사회복지 생활시설 거주 인원은 2022년 8월 기준 약 24만 명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생활시설 입소자 현황은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166,552명,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6,769명, 장애인거주시설 25,924명, 아동복지시설 13,187명이며, 정신보건시설에 8,493명, 노숙인 시설 6,775명, 한부모가족시설 2,828명,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피해보호 시설 2,074명 등임(2022년 8월 7일자 기준 현황)
 - 의료기관 시설 거주 인원은 2020년 기준 약 47만 명임. 의료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의료기관 거주인원은 사회복지시설 거주인원 보다 많음. 요양병원에 약 40.7만 명, 정신의료기관에 62,702 명이 입원하고 있음(국가통계포털, 2020). 의료기관 장기 거주자는 의료적 이유보다는 사회적 입원의 성격이 강함. 즉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장기 입원하는 현상이 일반적임
 - 상기한 두 가지 대표적 유형만으로도, 자신의 집과 지역으로부터 격리되어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71만 명을 초과하는 것임. 이는

우리나라 인구 100명당 1.4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4-2] 사회서비스 생활시설 입소자 규모

(단위: 인원, 명)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2022년 8월 7일자 추출

○ 지난 2년간 코로나 19의 감염에 따른 사망은 집단거주 생활시설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 등 격리 시설에서의 코로나 사망이 집중되어 있음. 집단 생활시설의 강도 높은 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한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 및 사망자가 많이 발생함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코로나 대응 기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까지 코로나 19 사망자의 30% 이상이 집단 생활시설에서 발생하였으며, 복지시설인 요양원에서도 10%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사망자 중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비중이 2022년 3월 기준 32.7%에 달한다고 발표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3. 30.)
- 2021년 2월 1일 기준으로는 누적 사망자 1,425명 중 요양원 사망자가 185명 (13%)이었고, 요양병원이 357명(25%)였음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2021. 2.1.)

-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에서 발표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 사망자는 조사 기간(2022. 1. 2.~4. 30.) 총 1,983명이었고, 이 중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신고된 사망자는 606명으로 전체 사망자 대비 30.6% 차지함(황명재 외, 2022)

□ 한편 노인요양과 아동보육으로 대표되는 오늘날 보편적 사회서비스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일시 중단되는 상황에 처함

○ 돌봄의 사회화는 여성이 떠맡아 온 가족 구성원 부양책임을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한 사회정책으로 오늘날 복지국가 체제의 핵심 영역임

- 돌봄은 가족이 담당하기 어려운 사회가 도래했음. 돌봄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2050년에는 65세 이상이 39.8%를 그리고 80세 이상 고령인구가 14.3%를 차지하게 됨. 이는 세계에서 가장 노인인구가 많은 국가가 된다는 것임
- ‘돌봄의 사회화’ 진전은 돌봄이 사회보장 제도로써 복지국가의 주요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주요한 기제였음

○ 코로나 19는 가족의 돌봄 회귀, 가족 돌봄이 어려운 경우 발생하는 돌봄 공백, 그리고 돌봄 양극화라는 사회문제를 불러옴

- 학교, 보육시설, 방과후 교실 등 주요 교육 및 돌봄 기관에서 휴교·휴원 조치가 내려졌고, 갑작스러운 휴교·휴업으로 인하여 대규모 돌봄 공백이 발생함
-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결과, 낮 시간 자녀를 돌볼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가구는 2020년 3월 36.2%, 7월 37.5%로 나타남(최윤경, 2020)
- 한국갤럽의 ‘코로나 19와 한국의 아동 돌봄 설문조사’는 0~12세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 평균 1시간 40분 이상, 그리고 전업주부의 경우는 하루 3시간 이상 더 자녀 돌봄에 투자하게

되었음을 보고함(은기수, 2020)

-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이 실시한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실태는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시간 감소를 경험하는 한편 장시간 자녀돌봄에 더 많은 추가시간을 투입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함(장진희, 2021)

〈표 4-3〉 코로나 19 전후 자녀 돌봄시간 변화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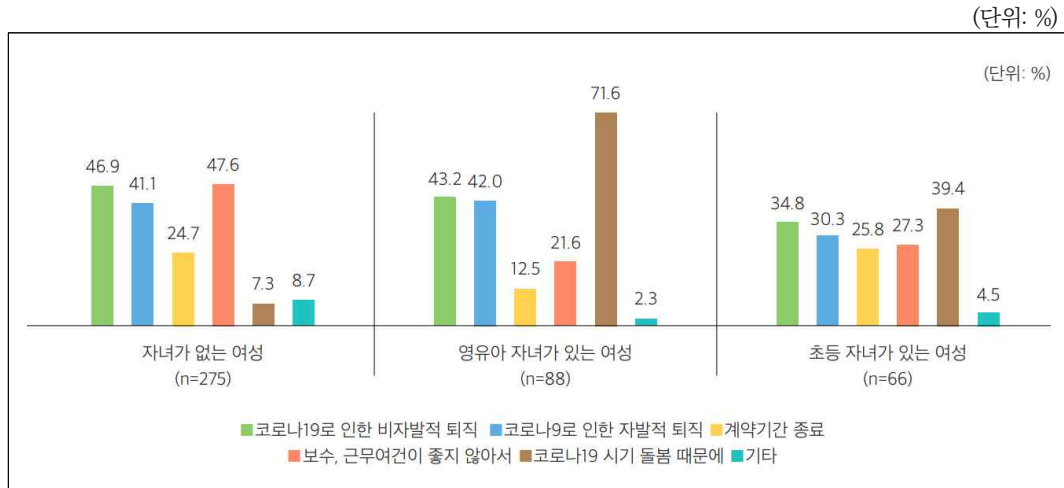
	자녀돌봄시간							
	코로나 19이전		전국적 휴원휴교		2021.6.~8.		증가폭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전체	4.7	9.3	6.7	12.9	6.7	12.7	1.0	3.6
남성	4.6	9.0	6.0	9.9	6.4	10.0	0.8	1.0
여성	4.9	9.6	6.4	15.5	6.0	15.2	1.1	5.6

자료: 장진희(2021)에서 재구성

○ 가정 내 돌봄부담의 증가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더욱 불안정해지는 결과로 이어짐

- 코로나 이후 여성근로자의 실업과 비경활인구 재진입 현상이 나타남.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여성 고용이 5.0% 감소하여 남성 감소율 3.9% 보다 높았음(ILO, 202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답변한 여성은 2020년 21.3%이며 이들 중 12월 초까지 실직상태를 유지한 비율이 76.0%에 달하였음. 퇴직 사유는 주로 돌봄 때문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경우에는 약 71%가 돌봄을 이유로, 그리고 초등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39.4%로 나타남(이동선, 2021)

[그림 4-3] 여성 퇴직자 중 코로나 19 돌봄 사유 비율



자료: 이동선 (2021).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현 사회서비스 제도는 감염병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시설보호와 사적돌봄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데 적절하지 않았음

○ 코로나 19 발생과 함께 보건복지부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을 수시로 발표하였고, 정부는 「코로나 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관계부처합동, 2020. 11.27.)을 발표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였음

- 지침과 방안은 단기적으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설 위주 돌봄을 지역사회 재가서비스 확대로 대처하겠다는 것임

○ 그러나 한시적 대응 이외에 안정적인 돌봄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기존 서비스 유지에 초점이 맞춰짐

○ 단기적, 장기적 돌봄안전망을 마련하는 법·제도적 논의가 병행되지 못함

-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온종일돌봄특별법」 등 주요 돌봄 법안들은 제정되지 못하였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당초 설립과 운영 취지에 무색한 법률이 제정됨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 코로나 19 이후 사회서비스 제도 변화의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며, 분석대상은 예산 규모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 아동, 장애인 돌봄 영역에 속하면서 코로나 19에 따른 변화 내용이 있었던 사업임
- 코로나 대응 긴급돌봄이 편성된 사회서비스원, 온종일 돌봄,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첫째,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 19 전후 사회서비스 대표적 신설 사업임
 - 사회서비스원은 요양과 보육의 공공운영 모델을 실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출범하였으나 현재 추진 실적은 저조함. 그러나 코로나 19 하에 긴급틈새돌봄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본 사업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의 성과를 보여주었음
- 둘째, 온종일 돌봄은 초등아동 방과후 돌봄 영역의 제도적 확충 사업임
 - 코로나 돌봄 공백 시기,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중심으로 아동돌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온종일 돌봄 체계의 학교돌봄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셋째, 장애인활동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서비스시간 확충 요구가 보다 절실해지고 있는 사업임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수급자 확대,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활동지원사 코로나 19 돌봄 한시 지원 등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활동지원 수요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음
- 연구 내용은 각 제도(사업)의 현황, 코로나 19 발생 이후의 대응, 법제도 및 지침의 변화,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 코로나 19 이후 제도 변화를 인과관계로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감염병

위기로 인한 제도 변화보다는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제도 개혁의 정책과정에서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제도 개선 과제들을 검토하고자 함
 - 사회서비스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는 사업별로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이용자 및 급여 확대, 지역사회 전달체계 통합, 지자체의 책임역할, 이용자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룸(이태수 외, 2018)
 - 본 연구에서도 상기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중심으로 민관협력, 종사자 처우 개선을 덧붙여 정책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함

2) 연구 방법

□ 사회서비스 분야 제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사용함

- 사회서비스 문헌연구
 - 코로나 19 감염병 발발 이후 위기 상황에 대한 내용, 제도 변화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 정부 발표 자료, 국내·외 보고서, 언론 보도, 논문 등 자료 분석
- 사회서비스 제도 운영 관련 행정통계 자료 분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공급 관련 현황 자료, 사회서비스원 서비스제공 행정통계, 사회서비스 운영 관련 실태조사 자료 등 이차 자료 분석

제2절 코로나 19 이후 사회서비스 영역의 대응과 평가

1. 사회서비스원과 긴급돌봄

1) 코로나 19 이전 제도 현황: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과 법제화

-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의해 추진됨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7번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은 정부의 사회서비스분야 양질의 일자리 34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보육과 요양 분야의 공공일 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임
 - 2019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추진됨
 - 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업예산 총 59.7억원 (중앙지원단 10.1억원 + 시·도 서비스원 49.6억원)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함. 17개 시·도 중 4개 지역 선정(서울, 대구, 경기, 경남)
 - 주요 사업으로 국공립 시설(어린이집, 요양시설 포함) 직접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각 시·도별 2개소 설치 및 재가서비스 직접제공, 민간기관 지원사업 (대체인력,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
 - 시·도지사는 서비스원의 사업범위·종류 및 위·수탁의 적정성 등에 대해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지만 복지부의 사업운영에 관한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게 함
 - 법제화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라는 당초 취지를 둘러싼 여야 합의의 난항이 지속됨. 이에 여야 각 입법의 대안으로서 2021년 관련 법안이 제정됨
 - 20대 국회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5.4, 남인순 의원)」안,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18.10.16., 윤소하 의원)」안 발의
 - 2018년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
 - 21대 국회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0. 6. 1.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이하 ‘남인순 의원안’),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안」(2020. 11. 4. 이종성 의원 대표 발의, 이하 ‘이종성 의원안’)이 발의됨

- 남인순 의원 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이종성 의원안은 반대입법으로 민간 제공기관 지원에 방점을 두고 사회서비스원의 정책지원 기능을 강조함
- 이에 보건복지위원장은 대안으로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 이 대안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여당의 방향과,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이라는 야당의 방향을 절충하는 법안이었음. 따라서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우선 위탁을 최소화하고 공개 경쟁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범위를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였음
-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은 민간 제공기관이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극히 일부의 사업에 대해서만 우선위탁이 가능하게 함
-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넘어 사회서비스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입법 목적으로 입법 취지가 변경되면서 여러 이해당사자의 자기 이해 추구가 가능하게 되었음.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뿐 아니라, 중앙 사회서비스원과 시도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이 각기 구분되고, 보건복지부 및 시도의 ‘사회서비스’ 지원 업무의 재량이 커지게 됨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법제화가 지체되고 사업의 목적이 포괄적으로 변경되면서, 구체적 사업내용은 본 목적과 다른 정체성의 혼란이 야기됨

○ 당초 시범사업은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및 민간시설에 대한 선도적 운영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

- 시범사업은 다음의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운영할 것을 제시함
 - 국공립 시설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면서 서비스 제공
 - 종합재가센터 설립 통해 재가서비스 직접 운영

-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및 수급계획 관련 등 지자체 지원

○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은 정부위탁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회서비스 요양과 보육을 중심으로 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사업성과가 미진하게 나타남

-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의 공공인프라 확충보다는 국공립 시설과 정부위탁사업 중심으로 운영함. 2021년 10월 기준 국공립시설 66개, 정부위탁사업 80개, 종합재가센터 29개 설치·운영 중이며,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은 3개에 불과
-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은 다함께 돌봄, 대체인력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 등의 사업 위탁기관에 가까움
- 사회서비스 종사자 일자리 질은 개선되지 못함. 총 3,792명 채용 목표 중 총 3,308명(87.2%) 채용 완료하였으나, 주로 기존 국공립시설 운영과 정부위탁사업 고용이 다수이고,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 종합재가센터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의 정규직만 고용함. 상당수는 여전히 소정 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임

〈표 4-4〉 사회서비스원 현황 (2021년 10월 기준)

(단위: %)

	총계			국공립시설			정부위탁사업			종합재가센터		
	목표	실적	추진율	목표	실적	추진율	목표	실적	추진율	목표	실적	추진율
계	210	175	83%	96	66	69%	82	80	98%	32	29	91%
서울	23	21	91%	11	9	82%	-	-	-	12	12	100%
대구	32	30	94%	7	6	86%	23	22	96%	2	2	100%
경기	37	33	89%	20	16	80%	15	15	100%	2	2	100%
경남	18	17	94%	8	7	88%	8	8	100%	2	2	100%
인천	15	15	100%	6	5	83%	7	8	114%	2	2	100%
광주	12	12	100%	5	5	100%	5	5	100%	2	2	100%
대전	22	14	64%	14	6	43%	6	6	100%	2	2	100%
세종	17	12	71%	10	6	60%	5	5	100%	2	1	50%
강원	10	7	70%	5	2	40%	3	3	100%	2	2	100%
충남	17	12	71%	8	4	50%	7	6	86%	2	2	100%
전남	7	2	29%	2	0	0%	3	2	67%	2	0	0%

자료: 중앙사회서비스원 (2021).

- 시범사업에 충실하게 운영되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이 유일하며, 기타 지역은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의 국공립시설(국공립어린이집과 종합재가센터) 보다는 기존 지자체 위탁사업이나 지자체 복지시설 운영이 일반적임
 - 서울은 2021년 10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 주야간재가서비스 2개소, 그리고 종합재가센터 12개소를 운영함
 - 타시도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사업 등 정부위탁사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학대피해아동센터 등 기존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형태임

2) 코로나 19 감염병 발생 이후 변화: 도입, 지체, 변경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이 돌봄의 공공 인프라 확충보다 재난상황에 놓은 돌봄공백 해결을 위한 긴급틈새돌봄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소규모 시설 안전점검 등 지원사무가 강조됨
- 대구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 발생 초기 2020년 3월 2일 긴급틈새돌봄서비스 체제로 전환됨
 -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자가격리 및 확진으로 인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한 이들을 대상(개인, 복지시설, 돌봄기관, 병원)으로 돌봄 인력을 파견함
 - 추가 예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로나 성금(24억 원) 그리고 대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 이루어짐
 - 대구시 긴급틈새돌봄서비스지원단은 2020년 초기에 서비스가 집중됨. 3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기간 동안에만 시설에 긴급지원단에 849명이 자원하였고, 의료기관지원 2,477명 개인지원으로 1,700명이 투입됨. 이후 2021년까지 돌봄인력 270명을 파견하여 재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615곳에서 2만 2761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함
- 서울사회서비스원의 경우 격리시설 동반입소와 같이 코로나 돌봄 지원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기획하였고, 1일 3교대 또는 6교대 24시간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함

-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말 기준 84명을 대상으로, 253명의 종사자가, 896일 동안 18,418시간의 돌봄을 제공하였음
 - 노인과 장애인 등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하거나, 코호트 격리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격리시설 내 돌봄서비스를 필요할 때 제공함
- 서울사회서비스원의 긴급틈새돌봄은 돌봄SOS센터와 연계하여 확장됨
 - 12개 종합재가센터의 코로나 19 외 긴급틈새돌봄(돌봄SOS)은 2021년 11월 말 기준 실인원 1,010명, 연인원 15,550명임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연계 적극개입사례 지원 사례로 2021년 11월 말 기준 실인원 163명, 연인원 10,657명에게 돌봄서비스 제공함

□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코로나 대응 선제적 활동 이후, 보건복지부는 긴급틈새돌봄 예산과 지침을 마련하여 서비스 내용을 추가함(2021.4월)

- 긴급틈새돌봄이란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종사자 또는 가족확진 등으로 가정·시설에 발생한 돌봄공백을 사회서비스원이 대응한다는 것임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 사유 이외 긴급돌봄을 추가하여 ① 갑작스럽게 발생한 돌봄 공백과 ②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③ 일시적으로 제공(긴급성)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이라는 사유를 추가하여 돌봄을 제공함
 - 복지시설의 코호트 격리조치와 재가 방문서비스 중단 등 지역사회 돌봄공백 문제
 - 집단감염 위험에 대비하고자 사회복지시설은 예방적 격리 조치 실시
 - 가족 또는 종사자가 확진되는 경우 동반입소 돌봄으로 대응
 - 코로나 치료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내 돌봄종사자 추가투입 필요
 - 공적 책임성을 갖고 인력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공공 돌봄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 활용

- 재원은 2021년 기준 총 20억 원 규모(국비 50%)에 불과하나, 시도와 민간 자원을 추가하여 활용할 것을 권고함
 - 사회서비스원은 자체 긴급틈새돌봄지원단을 구성하여 수행함
 - 재원은 보건복지부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지자체에 지급하면 지자체가 출연금 또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사업 추진
 - 재원의 규모는 크다고 보기 어려우나, 서울의 돌봄SOS와 같이 지방비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재원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함
 -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지자체-시도 사회서비스원으로 구성됨
 - 보건복지부는 긴급틈새돌봄 총괄기관으로 지침과 예산을 교부하고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최종책임 기관
 - 지자체는 기초단위에서 긴급틈새돌봄 대상자 발굴 및 연계함. 즉 긴급틈새돌봄 의뢰 및 서비스 연계는 읍면동 또는 보건소, 시군구 창구를 통한 발굴 및 접수임
 - 사회서비스원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긴급틈새돌봄 인력을 채용하며, 연계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
- 2021년 8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긴급돌봄서비스가 시도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첫 번째로 위치하게 됨
 -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① 시·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 긴급돌봄은 당초 국정과제나 사회서비스원 설립 논의에서 없었으나,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하여 돌봄의 국공립 기관 설립의 당위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업으로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음
 - 국공립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운영이라는 본 목적은 후순위가 됨

□ 긴급틈새돌봄은 재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으로서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나, 일상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긴급돌봄 대상자와 종사자는 일시적 성격임.

- 코로나 19 외 긴급틈새돌봄의 경우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서비스 제공 내용은 코로나 19 돌봄의 경우 최대 14일, 코로나 19 외의 경우 위기상황 1회당 총 100시간 지원임
- 주요 서비스는 재가, 이동지원, 주거, 식사 및 안부확인 등의 돌봄서비스
- 긴급돌봄 종사자도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투입이 가능하도록 인력 풀을 구성할 것을 권고하나 실질적으로는 대기인력임
-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 돌봄인력을 우선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는 이용자 매칭이 이루어져 있어, 긴급 투입이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틈새돌봄은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핵심사업의 지위를 차지할 만큼 이용자 수가 많았음. 지역사회 돌봄의 미충족 수요가 많다는 것을 보여줌

- 서울사회서비스원의 12개 종합재가센터는 돌봄 SOS 사업을 통해 긴급틈새돌봄을 수행하여,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음
- 서울시 긴급틈새돌봄 이용자 수는 연인원 기준 1,087명(노원)에서 2,075명(중랑)에 이르며, 월평균 이용인원도 13명(영등포)에서 24명(중랑)에 이룸(김형용 외, 2021)
- 다수의 종합재가센터에서 장기요양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 수보다 많았음

○ 긴급틈새돌봄은 공공이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성격이 가장 분명히 드러남

- 코로나 19 등 감염병에 대응이 국가적 사무인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긴급돌봄은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로 인식됨

〈표 4-5〉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현황 (2021년 1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긴급틈새돌봄 이용자 수		방문요양 대비 긴급틈새돌봄 이용자 비율			
		연인원 (A)	월평균 실인원(B)	방문요양 연인원(C)	비율 (A/C)	방문요양 실인원(D)	비율 (B/D)
서울	성동종합재가센터	2,056	21.17	5,747	35.8%	28.58	74.1%
	은평종합재가센터	1,340	21.58	4,396	30.5%	21.33	101.2%
	강서종합재가센터	1,293	18.50	5,176	25.0%	28.08	65.9%
	노원종합재가센터	1,087	14.75	5,631	19.3%	27.50	53.6%
	마포종합재가센터	1,118	14.33	3,814	29.3%	18.67	76.8%
	영등포종합재가센터	1,450	13.42	2,796	51.9%	13.50	99.4%
	송파종합재가센터	1,029	16.33	2,036	50.5%	10.42	156.7%
	양천종합재가센터	1,559	17.58	2,102	74.2%	9.83	178.9%
	도봉종합재가센터	1,680	20.67	1,648	101.9%	10.83	190.8%
	중랑종합재가센터	2,075	24.25	2,038	101.8%	11.67	207.8%
	강동종합재가센터	1,263	14.67	1,140	110.8%	8.08	181.5%
	서대문종합재가센터	1,634	21.50	2,408	67.9%	11.33	189.8%
대구	남구종합재가센터	117	2.20	3,677	3.2%	16.67	13.2%
	북구종합재가센터	305	1.67	1,458	20.9%	8.08	20.6%
경기	부천시종합재가센터	386	63.00	3,047	12.7%	18.33	343.7%
경남	김해시종합재가센터	20	1.00	3,515	0.6%	19.25	5.2%
	창원시종합재가센터	154	9.50	4,029	3.8%	21.75	43.7%
광주	북구종합재가센터	1,708	13.70	2,652	64.4%	12.50	109.6%
	서구종합재가센터	2,514	10.44	774	324.8%	4.25	245.8%
충남	예산종합재가센터	519	15.75	798	65.0%	4.17	377.7%
대전	유성사회서비스원	213	4.38	667	31.9%	4.58	95.5%
	서구사회서비스원	147	4.20	1,550	9.5%	6.58	63.8%
인천	부평종합재가센터	525	7.58	1,233	42.6%	6.67	113.7%
	강화종합재가센터	352	5.90	196	179.6%	1.45	406.9%
세종	남부종합재가센터	64	3.75	1,284	5.0%	7.45	50.3%
강원	춘천종합재가센터	295	8.00	865	34.1%	8.00	100.0%
	원주종합재가센터	215	5.33	669	32.1%	7.20	74.1%
총계		25,118	375.15	69,015	36.4%	364.44	102.9%

주: 월평균 실인원은 12개월 평균이며, 사업운영 1년 미만 종합재가센터는 서비스 제공 개월 수의 평균임
 자료: 김형용 외 (2021). 종합재가센터 운영 활성화방안 연구.

□ 사회서비스원의 긴급틈새돌봄사업은 공공 돌봄의 모범적인 사업이나 한계도 분명함

○ 긴급틈새돌봄은 전체 돌봄수요를 주도할 만큼의 규모가 아님

- 노인장기요양과 영유아보육 시장규모는 연간 20조원을 초과하고 있으나 긴급틈새돌봄은 20억 원에 불과함. 한 해 사회서비스 예산의 0.1%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며, 또한 지속적인 예산투입도 어려움
- 돌봄공백의 범위와 대상도 한정적이며,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상시적인 연계 발굴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기 어려움
- 다만 코로나 19 뿐 아니라 긴급한 돌봄서비스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자체가 필요한 긴급틈새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 권한을 갖고 그 서비스 제공 집행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사업을 확보해야 함
- 돌봄인력의 채용과 관리의 문제는 긴급틈새돌봄 성공의 관건임. 별도의 조직 예산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 돌봄종사자 채용의 단발성 및 급여체계의 문제 때문에 종사자가 공적 속성을 지니기도 어려움

3)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

□ 새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성 강화 방향에서 사회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해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로 방향이 선회함

○ 보건복지부의 업무계획은 사회서비스원이 가사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심리상담 등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와 지불 능력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시함(보건복지부, 2022)

-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종교계의 사회공헌, 사회적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민간의 기술·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규제개선·펀드 조

성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향임

-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 조성, 조직화·규모화 지원 등
- 기획·개발 단계부터 사업자·이용자가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기술개발 확대
-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확대·개편하여 사회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하고 진흥 기반을 확충하는 것임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원이라는 포괄 입법이 되면서 각 부처에 많은 재량적 권력을 부여함

- 모호한 법률은 관련 사무의 산출물을 관련 부처가 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함
- 사회서비스원은 ‘일괄 판매(bundling)’ 전략을 사용하게 됨. ‘공공성’과 ‘진흥’이라는 정책 방향이 상충되기보다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시도사회서비스원의 구분된 역할로 여러 상이한 사업들을 포괄함
- 이러한 정책 선택이 가능한 이유는 사회서비스원 모형의 현실정합성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데에도 기인함
 -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또한 도입 취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특히 종사자 직접고용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하고 유명무실하였음
 - 사회서비스원의 돌봄은 민간 기관과 차이가 없는 시급제 계약직 고용계약이 이루어졌고, 이용자의 돌봄 받을 권리의 확장이나,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측면에서도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었음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나 제공 기관 활성화 모두 단순한 정책 아이디어만으로는 성과를 내는 것이 한계에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분권화, 통합화, 이용자권한 강화 등 전반적인 전달체계 개혁과 병행되어야 함

○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의 돌봄 거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모색해야 함

- 현 법제 내에서 사회서비스원 모델은 장기요양과 바우처 사업의 수가 수입 등을 토대로 한 독립채산 운영을 전제로 함으로써 사실상 공공돌봄의 양적 확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
 - 현 표준모델은 사회서비스원의 소속시설들이 민간 공급기관과 경쟁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시장 견제효과가 미미함
-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핵심사업인 종합재가센터의 경우 경영 현황을 종합하면 2021년 기준 누적 127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함

○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과 지역사회통합돌봄 방향에 있어 절대적인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 모델로는 실패한 정책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사업모형을 유지할 경우 지속가능성은 매우 낮음. 이는 단지 이용자 수 확보나 종사자 생활임금 또는 월급제와 같은 처우 개선 문제에 따른 비용 문제가 아님
- 주요한 장애요인은 정체성의 문제로 거론됨. 돌봄에 있어 공공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혼동되며, 이는 지자체의 투자 부족과 공공기관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조직 운영 요인으로 연결됨
- 사회서비스원은 공공기관의 제도적 제약과 행정적 경직성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에 비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구에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어려움
- 민간기피 사례 수행 등 돌봄의 공공성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 재정 균형을 동시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 공공돌봄의 거점센터로서, 주민의 보편적 돌봄권을 보장하고 공공(지자체)의 책무성을 실현하는 사업범위 재설정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의 재정적 책임 하에 운영되는 시설임. 종합재가센터의 공공돌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위탁 사업의 적절한 배분과 함께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지방재정 추가 투입이 필요함

4) 제도 변화의 함의

□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 법의 제정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와 공공일자리 확충이라는 한국 사회서비스 제도 환경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은 단지 양적 확대가 아닌 서비스 사각지대와 품질에 대한 접근

- 공공인프라 확충은 지역별 대상별 사회서비스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은 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제

- 요양이나 보육 돌봄 기관은 양적으로 충분한 상태임. 공공 인프라는 사회서비스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뢰할만한 주체에 대한 요구임. 이에 공공인프라 확충이란 절대 공공투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임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지역사회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지점임. 사회서비스원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확충 요구도 동시에 주목하는 효과를 가짐

- 다만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돌봄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인프라를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임

○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종사자의 조직화된 요구인 처우개선이 중요한 추진 요인이었으며, 필수노동자로서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줌

- 표준적인 근로계약과 안정적인 고용관계 그리고 적절한 임금소득을 보장하는 공공의 선제적인 실험이 시도됨

- 시간제가 아닌 전일제 정규직 형태의 돌봄 일자리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음. 또한 돌봄 경력 인정과 서비스 질을 견인하는 교육과 훈련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시도됨

- 이 과정에서 다양한 노무관리 쟁점이 도출되었음. 서비스 양과 인력배치, 그리고 사업별 통합인력 등 향후 과제 또한 작지 않음

□ 다만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변화에 미칠 만큼의 공공돌봄의 규모화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따라서 제도 도입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 수많은 사회서비스 사업이 제각기 별도 사업으로 도입되고 관리되어 온 분절적인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미친 영향력은 거의 부재함

- 국공립시설 운영과 정부위탁사업 운영은 기존 사업의 관리주체만 바뀐 수준임
-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공공재가의 도입은 사실상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민간재가센터와 다를 바 없이 시급제 임금을 주면서 인력풀을 대기상태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종사자 채용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음
- 공공돌봄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관계, 임금구조, 서비스 양, 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현실성 없는 지침만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 질 보장은 무용하였음

○ 사회서비스원은 목적사업부터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목표 달성, 조직구성원 동기부여 노력, 그리고 노무관리에 대한 상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의된 조직운영이 필요함

- 현재 시도 사회서비스원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각 본부 인력조차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 법 제정의 목적, 종합재가센터의 표준운영 모형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목표에 대한 조직적 합의도 충분하지 않음
- 내적 동기가 사회서비스원 사업진행에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는 사회서비스원 본부뿐 아니라 소속시설 종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대다수 사회서비스원 인력이 공개채용을 통해서 선발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에서 장기간 근로한 이들이 다수임. 이에 공

공성 강화의 방향에 동의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함

- 시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운영 현황이 원장의 경력이나 관심도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함. 향후에도 지자체장, 사회서비스원장, 종합재가센터장의 각기 독립된 이해로 인하여 표준모형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업무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전국적으로 표준모형에 따른 통일된 사업과 업무 매뉴얼, 그리고 인사노무 원칙의 준수가 중요한 과제임. 지역사회마다 돌봄서비스 공급자원이 다른 환경에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나, 사회서비스원 설립목표의 통일된 방향에서 민관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공공성과 수익성 추구라는 양립불가능한 방향의 모호성을 줄여야 함

-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미를 부정하는 것임
 - 공공돌봄의 정체성을 가진 지역돌봄센터로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수익은 낮지만, 사각지대 발굴, 긴급틈새돌봄 제공, 적극개입 사례관리, 다대다 및 다회 등 욕구기반 서비스, 지역중심 공공돌봄 체계 구축 등 민간과 차별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코로나 19 상황에서 더욱 공공돌봄의 거점기관으로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

- 공공의료 및 공공돌봄 등 제도적 확충 노력은 코로나 시기에 추진되지 못하였음
- 따라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집행을 주도하는 지자체가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들이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민관협력 전달체계 내에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기관으로서 역할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2. 온종일 돌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1) 코로나 19 이전 제도 현황

- 아동복지는 아동보호 중심의 선별적 복지 정책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중심의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어 왔음
- 아동복지 법제는 전쟁 이후 빈민아동구호를 목적으로 한 1961년 아동복지법, 1970년대 모자보건법과 입양특례법 등 잔여적 보호 제도를 거쳐, 1981년 아동복지법 제정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포괄하게 됨
- 현재 아동복지는 크게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 그리고 모든 계층의 아동돌봄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보편적 돌봄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과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돌봄이 주요한 사업임
- 아동돌봄은 ‘국가가 책임지는 아동 보육과 교육’이라는 국정과제 하에 저출산 극복과 공공성 강화라는 과제가 추진됨
 - 2020년 기준 통계청 국가통계의 아동보호 시설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14,614명임. 생활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미취학 아동 돌봄은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② 보육체계 개편, ③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④ 부모 양육지원 확대의 4개 분야로 추진됨
 - 2020년 기준 영유아 돌봄(만 5세 미만의 돌봄서비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용률은 72.3%에 달함. 만 2세의 88.4% 그리고 만 1세의 79.3%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만 0세는 가정 내 돌봄으로 가장 작은 이용률(20.4%) 그리고 만 3세 이후는 교육시설인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경향임
 - 초등학생 돌봄은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방안 병행 추진하는 교육부,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연계가 주된 사업으로 추진됨

〈표 4-6〉 아동 돌봄 주요 사업

구분		관련 시설	이용자 수, 돌봄 이용률(2019년 12. 31.기준)
아동 보호	시설보호	아동양육시설	10,585명
		아동공동생활가정	2,949명
		보호치료시설	469명
		자립지원시설	218명
		일시보호시설	275명
		종합시설	118명
아동 돌봄	미취학아동 돌봄	어린이집(복지부), 유치원(교육청)	총 1,851,591명 만 0세: 20.4%, 만 1세: 79.3%, 만 2세: 88.4% 만 3세: 52.1%(어린이집), 36.4%(유치원) 만 4세: 39.2%(어린이집), 49.7%(유치원) 만 5세: 33.9%(어린이집), 54.8%(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9,663가구
	방과후 돌봄	초등돌봄교실 (교육청)	256,113명(초등학생의 9.5%)
		지역아동센터 (복지부)	87,510명(초등학생의 3.2%, 2018년)
		다함께돌봄센터 (복지부)	173개소

자료: 1) 보건복지부 (2020).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현황 2) 육아정책연구소 (2020). 영유아 주요통계

- 코로나 이전 기준(2019. 12. 31.) 초등학생의 공적 방과후 돌봄 이용율은 12% 수준임. 초등학생 2,693,716명 중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초등돌봄교실 9.5%, 지역아동센터 3.2%였음

□ 온종일돌봄은 영유아 대비 공적 돌봄 이용율이 매우 낮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이었음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49번)에 따라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보건복지부, 2018)으로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및 돌봄 체계구현 계획이 발표됨

- 방과후 돌봄은 각 부처의 비효율적인 전달 체계가 주목됨

-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학교돌봄터,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아이돌봄서비스라는 분절적 사업에서 온종일돌봄 체계라는 하나의 체계 구축 시도

- 목표는 '18년 33만 명의 공적 돌봄 이용자 수를 '22년까지 53만 명으로 확대

- 초등돌봄 공급 계획으로는 초등돌봄교실 7만, 교실활용 3만, 마을돌봄 10만으로 총 20만 명 규모의 공적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획
- 마을돌봄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주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한다는 계획임. 즉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임
- 보건복지부는 2019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다함께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6월 기준 약 4,858명, 2021년 동월에는 약 12,190명의 이용자 성과를 달성함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 및 신고된 시설로서, 국고보조금으로 기본운영비와 특성별 운영비가 지원됨

○ 지역아동센터는 2020년 기준 4,148개소가 있으며, 이용자 수 약 10.6만 명 중 초등학생이 약 8.3만 명을 차지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임
-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양부모 가정과 비슷한 비율을 차지할 만큼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정부보조금으로 기본운영비를 지원받는 센터의 정부보조금은 평균 년 6694만원 수준에 불과하며,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2020년 연간 총 수입은 평균 1억4154만원으로, 지자체 별도 지원금, 기타 지원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민간기업체 지원, 개인후원금에 의존함
- 대다수 시설은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며(99.4%),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

〈표 4-7〉 지역아동센터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개소	3,742	3,989	4,113	4,113	4,113	4,124	4,135	4,148
신규시설	148	158	256	207	102	98	95	263
개인비율				69.6	70.0	70.1	69.9	66.1
지자체비율				1.0	1.5	1.8	2.1	2.6
이용아동수				106,668	108,578	109,610	108,971	106,510
초등이용자수				82,140	84,706	87,501	87,775	83,691
종사자 수	9,203	9,311	9,415	9,379	9,460	9,495	9,425	9,309

자료: 1) 보건복지부, 2020년 12월말 기준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의 규정을 따르는 사회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 개정(2019. 4. 16. 시행)으로 설치됨

○ 다함께돌봄은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주체가 되어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정기·일시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2017년 10개소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 온종일돌봄 정책 발표, 2019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12월 기준 424개소를 설치 운영함

-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임

〈표 4-8〉 다함께돌봄센터 추진 경과

년도	내용
2017년	시범사업 10개소 실시
2018년	관계부처 합동 온종일돌봄 정책 발표, 17개소 설치 운영
2019년	아동복지법 개정,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발족, 173개소 설치 운영
2020년	424개소 설치 운영

자료: 보건복지부 (2022)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2) 코로나 19 이후 제도 변화 내용 : 도입 및 지체

□ 코로나로 인한 가정내 아동돌봄 공백이 급격히 확산되자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 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관계부처합동, 2020)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감염병 상황에 맞지 않는 대면·집단 시설 위주 돌봄을 지역사회통합돌봄 방향 하에 재가서비스 확대에 대처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첫째, 돌봄 시설은 운영중단이 아닌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 운영하되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종류별 위험도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 둘째, 재가서비스 및 비대면 사회서비스 전환을 통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며,
- 셋째,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를 재정비하여 돌봄 친화적 문화를 장려하는 방안임
 - 돌봄을 지역맞춤형으로 개선하고 통합적 제공을 위한 법제정 및 복지서비스 부문별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
 - 돌봄을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확대함. 주요 돌봄사업의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원격학습 지원 및 코로나 19 하의 재가서비스의 비대면 전환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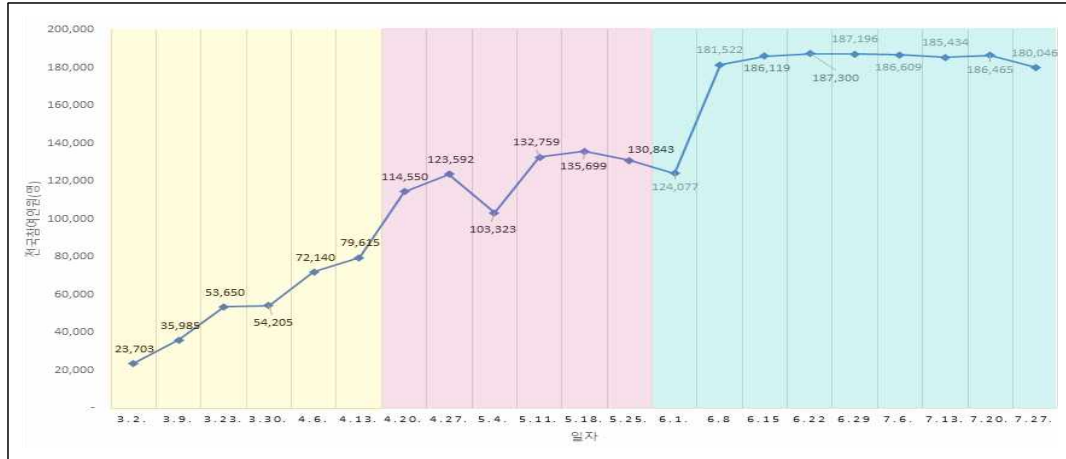
- 가족의 돌봄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고 육아휴직 제도 개선으로 돌봄 수요에 대응, 그리고 가정 돌봄 아동의 경우 방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임

□ 코로나 시기 초등 방과후 돌봄은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긴급돌봄과 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아동양육한시지원)으로 대응

○ 학교돌봄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등교중지 및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현장 맞춤형 긴급돌봄 지원이 이루어졌음

-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1실당 규모를 10명 내외로 조정하였으며, 긴급돌봄의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의 오전돌봄과 오후 7시까지의 연장 돌봄을 허용함
- '20.9월 기준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 25.6만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돌봄교실 활용하여 제공함
- '20년 시행초기 긴급돌봄은 전국적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0.9~2.9%가 참여하였으나, 6월 이후 등교수업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6.7~6.9% (180,046~187,300명)의 초등학생이 긴급돌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김은정, 2021)
- 초등돌봄교실은 별도 공간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특성상 공간 확보가 핵심이나, 학교 내 추가 공간 확보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음
- 초등학교 재학생 및 예비취학아동(약 268만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체 응답자 1,049,607명(응답률 39%) 중 474,559명(45.2%)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신입생, 1학년, 2학년)일수록 돌봄 필요 응답률이 높음
-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 오후 1시~5시(66.3%)이며, 그 다음으로는 오후 5시~7시(17.6%) > 수업 시간 전(13.8%), 오후 7시 이후(2.3%) 순이었음

[그림 4-4] 코로나 19 초기(20. 3~8월)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수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2020. 8.27)

○ 마을돌봄은 보건복지부가 아동돌봄 수요에 따라 아동돌봄쿠폰으로 대응함.

2020년 3월 17일 1조 539억 원이 추경예산으로 반영됨

-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며, 지원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
- 이후 하반기에는 만 12세까지 1인당 20만원 현금, 중학생 15만원 비대면 학습지원 현금지원으로 확대됨

□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로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집단시설 운영 대응지침 이외에 별다른 제도적 보완이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

○ 보건복지부는「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과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바탕으로 세부 시설 유형별로 대응지침을 제시함

- 2020년 2월의 대응지침은 “학교 휴업 등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다

함께돌봄센터는 필수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종사자는 당번제 등으로 긴급 돌봄에 대처하도록 함

- 이후 대응지침 또한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일시폐쇄 또는 휴원 시에도 기본 프로그램은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지자체별 또는 시설별로 이용수칙 및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운영하는 것이었음

○ 아동복지법에 따른 설치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제도 변화는 없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유급휴가 및 대체인력 등 활용, 확진으로 관할 보건소의 격리통보에 의해 격리된 종사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가능, 종사자 확진 등으로 인한 업무배제 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사업 활용 가능, 종사자 확진 등에 대비하여 대체 근무자 지정, 재택·원격·교대근무 등 근무형태 마련의 지침임
- 코로나 방역 및 위생 관리 하의 프로그램 유지, 휴원 시 조치사항만 있음 (휴원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유지)
-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수가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하였음
 - 지역아동센터 월별 이용아동 수는 코로나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는 등록아동 수를 기준으로, 긴급돌봄 등 실제 이용 아동은 센터별로 증가함

○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제도 변화는 없음

- 온종일 돌봄의 마을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관련 법제 및 투자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함

○ 온종일돌봄 법률안은 의안심사가 지체되면서, 아동돌봄 관련 법제의 변화는 없음

-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공무직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돌봄교실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관련 법안은 폐기됨
- 코로나 이후 돌봄 관련 법제의 변화는 아이돌봄지원법의 종사자 자격관리 강화만 추진되고, 아동복지법은 학대 보호 관련 내용만 개정됨

〈표 4-9〉 코로나 19 이후 아동 돌봄 관련 법제의 변화

구분	시기	제도 개혁의 내용
아이돌봄 지원법	2020. 5. 19.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 -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시·도지사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 - 아이돌보미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취소 이력,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 -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등
아동복지법	2020. 12. 29. 일부개정 2020. 12. 21.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관련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민간전문인력 배치, 보호조치 의뢰 - 아동일시보호시설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 보호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 보호기간 24세까지 연장 -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 마련 등
영유아보육법	2021. 6. 8.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법적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령 요건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기준 준수 등

3)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

□ 마을돌봄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이원화된 체계에서 충분한 수요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함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보편적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지만, 현장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돌봄, 다함께돌봄센터는 틈새돌봄 기능강화만 강조되고 있음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시 초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 실태 및 환경변화를 조사한 결과, 돌봄기관과 돌봄서비스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다함께돌봄센터(10.1%) 그리고 긴급돌봄(지역아동센터 14.4%, 다함께돌봄센터 8.2%) 모두 소수에 불과함(김은정 외, 2021)
- 아동돌봄에 대한 만족도가 시설유형과 관계없이 대부분 낮음. 휴교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 및 학습이 적절히 수행되지 못함

○ 지역아동센터는 보조금 지원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시설의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오히려 코로나 19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감소로 인해 운영비 부족의 문제와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 실습생 등 외부 자원 유입이 어려운 종사자 업무량만 증대되었음
- 코로나 19 이후 센터 이용아동 수와 돌봄 시간이 증가 추세이나 긴급 돌봄, 온라인 학습지원, 도시락 배달 등으로 인해 종사자 소진이 높음
- 최근 저소득 이외의 일반 아동 이용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17) 10% → ('18) 20% → ('19) 최대 40% → ('20) 최대 60%

○ 다함께돌봄은 여전히 인프라 확충 초기 단계에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는 2018-2022년간 3,560억원을 투입하여 1,81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2021년 6월 말 기준 518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용 아동수는 12,190명에 불과함(아동권리보장원, 2021)
 - 직영 운영센터 75개소, 위탁운영 441개소, 공동운영 24개소
 - 이용자는 정원 13,061명 중 현원 12,190명으로 93.3%의 이용률을 보임

〈표 4-10〉 다함께돌봄센터 추진 경과 및 현황

	2019.12	2020.6	2020.12	2021.6
개소	173	246	424	518
이용아동 수 (전체)		4,858	7,886	12,190
상시돌봄		4,503	7,167	10,478
일시돌봄		335	719	1,712

자료: 김은정(2021)에서 재구성

□ 온종일돌봄 제도 변화를 위한 관련 법제는 난항에 있음. 현재 두 개의 법률(권철승, 강민정 의원안)이 계류 중임

○ 권철승 의원의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부총리 겸 교

육부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돌봄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내용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광역 및 기초돌봄협의회를 둠(안 제7조 및 제8조).
-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시설 및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18조).

○ 강민정 의원의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권칠승 의원의 안과 유사하나 다만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임

○ 그러나 각계의 반대와 실효성 문제로 법안 통과는 불투명함

- 수요자인 초등학생 부모들과 공급자인 돌봄전담사들 모두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규정한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교사단체는 교육과 돌봄은 구분되며 돌봄은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 책임이라는 입장에서 대립함
- 또한 비용부담에 있어 지자체와 협의 또는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관련 제도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함

4) 제도 변화의 함의

- 코로나 19에 따른 아동돌봄의 제도적 변화는 한시적인 긴급돌봄 이외에는 전무하였고, 온종일돌봄 체계구축에 의해 설립된 다함께돌봄이라는 신규 인프라는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딤
-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보편적 아동돌봄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였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실행가능성 문제가 대두됨
 - 지자체의 예산 부담 등으로 인해 대규모 신설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움
 - 다함께돌봄의 낮은 수요도 고려해야 함. 마을돌봄보다는 학교돌봄 수요가 더 많고, 이에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교육청과 지자체 분담에 따라 다함께돌봄 수요도 크게 영향을 받음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교가 돌봄도 함께 맡아야 한다는 의견은 69.9%로 다수임(한국행정연구원, 2022)
 -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도 서울 중구의 초등돌봄 지자체 직영 같은 사례가 지역주민에게 매우 높은 호응을 받음
 - 지역아동센터와의 분리에 따른 계층화 문제가 제기됨. 이용대상과 이용시간의 차이를 제외하면 두 센터는 차이가 없음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시범사업 확대와 같이 기존 돌봄인프라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임. 이용대상을 구분하는 돌봄시설 설치 접근이 아니라 공적 책임성을 높인 공공돌봄 센터로서 기존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코로나 19 감염병의 경험은 아동돌봄이 정기돌봄뿐 아니라 위기상황에 폭증하는 돌봄수요에 즉시적 대응이 가능한 통합적인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주었음
 -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은 모두 각 운영주체의 이해에 따라 지침에 따른 대응만 해 옴
 - 마을돌봄의 경우는 돌봄공백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서비스 제공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는 이러한 역할이 없음

- 지자체의 긴급돌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응 매뉴얼뿐 아니라 추가적인 공간지원, 인력지원, 그리고 종사자 지원 등이 가능한 체계구축과 비용부담의 지원근거가 명확하도록 법제화가 수반되어야 함
-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도 고려해야 함. 민간위탁의 마을돌봄 종사자의 처우도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상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의 긴급돌봄 대응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움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 코로나 19 이전 제도 현황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1년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대표적 장애인돌봄 제도임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는 총 8가지 사업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중 장애인 돌봄은 복지서비스와 지역사회 복지사업 영역이 해당됨(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8대 영역: 연금과 수당, 보육과 교육, 의료와 재활지원, 복지서비스, 일자리와 용자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제혜택, 지역사회 복지사업
 -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은 총 16가지 주요사업으로 구분되며, 대표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 등임
 - 지역사회 복지사업은 총 17개 주요 사업이 있으며, 대표사업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주간보호시설운영, 장애인복지관운영,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등임
 - 장애인의 시설돌봄은 2020년 기준 거주시설 29,662명(지적장애인시설 11,485명, 중증장애인시설 10,978명, 공동생활가정 2,949명 등)이며, 지역사회재활시설 1,468개소(복지관 254개소, 주간보호 769개소 등)가 주요 인프라임

- 장애인돌봄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이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도입을 확대하고 자립생활 보장과 탈시설 지원 방향을 설정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년 12월에 통과되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되는 과정에 있음
 - 장애등급제 폐지의 주요 내용은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조사 단계적 도입, 전달 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됨
 -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로는 장애인 체감도 및 예산규모가 가장 큰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를 1단계로 추진되고, 이동지원과 소득 고용지원 서비스를 2, 3단계로 추진하도록 함
 - 아울러 탈시설을 위한 자립생활지원센터, 탈시설지원센터, 장애아동가족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함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 확대('11년 3만 명 → '20년 약 9.1만 명)와 예산 확대('11년 1,928억 원 → '20년 약 1.3조 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장애인활동보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과 병행하여 장애인 돌봄에도 적합한 방식의 요양서비스를 제도화 한 것임
 - 장애인활동보조는 지속적으로 제도 확충이 이루어졌으며, 장애1급에만 적용되던 활동보조가 2013년에는 장애2급까지 그리고 2015년에는 장애3급까지 확대되었고, 최종증장애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가산급여 등이 추가되었음
 -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특별지원급여(생활환경 고려)로 최소 약 60시간 ~ 최대 약 480시간을 지원함

- 급여의 종류는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성됨

□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여전히 낮은 이용자 비율, 활동지원 미연계, 협소한 서비스, 종사자 처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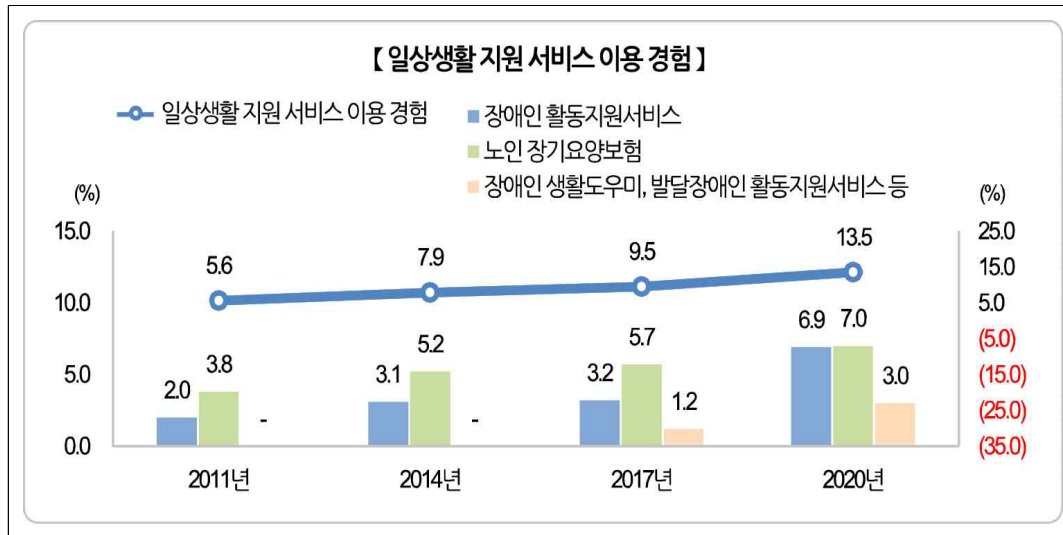
○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비율은 6.5%에 불과함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32.1%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거의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6.2%에 달함(김성희 외, 2021)
- 그러나 2020년 기준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6.5%에 불과하고, 이는 서비스가 일부 장애 유형에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함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경험률은 자폐성장애 35.8%, 지적장애 21.5%로 다수를 차지하고, 지체장애는 3.3, 시각장애 7.1%, 청각장애 2.3%에 불과함(김성희 외, 2021)

○ 활동지원서비스 연계 실패 및 본인부담금 또한 장기미이용의 원인임

- 장기 미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희망하지만 이용 불가 사유로 활동지원사 미연계 문제를 제시한 응답은 약 79%를 차지함(최혜영 의원실, 2021). 미연계는 주로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회피하는 경향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이용자가 수급자의 60%에 달하는 것도 장기미이용의 주된 사유임(최용길, 김유정, 2019)
- 활동지원서비스의 선택권이 한정됨. 활동지원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비스 욕구가 야간 및 주말 서비스는 이용하기 어려움

[그림 4-5] 장애인 일상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비중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발표

- 이 밖에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종사자 처우 문제, 가족에 의한 서비스 수행 제한, 65세 이상 장애인의 서비스 보전 문제, 산정특례 등 제도 개선 이슈들이 산적해 있음
- 민간 위탁기관에 종사하는 활동지원사는 시간제 단가에 따라 인건비가 지급되나, 단가에는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기관 운영비가 포함되어 실임금은 매우 낮고, 업무난이도 차이에도 급여 차이가 없는 등 처우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음
-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렵지만, 장애인활동지원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와 자매를 제한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제도와 형평성 문제를 보임
- 노인장애인의 서비스 인정,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서비스종합조사에 따라 활동지원 구간 하락 이용자 문제 등이 제기됨. 후자는 3년간 급여를 보전하는 산정특례가 적용되나 단기처방이라는 한계가 있음

2) 코로나 19 이후 제도 변화 내용 : 보장성 확대

□ 코로나 19 이후 이용대상, 서비스시간, 예산은 증가하고 있음

○ 2019년부터 장애인 지원체계의 큰 틀을 전환하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1단계 개편의 성과로 볼 수 있음

- 장애등급제 폐지로 대상자가 1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급여적정성 개선으로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월평균 20.5시간 증가하였음
- 경증장애인들도 서비스 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1,246명이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평균 92.2시간의 서비스를 받음
- 급여시간 감소의 경우 산정특례를 인정하였고, 본인부담금 산정체계 및 기준변경으로 평균 본인부담률을 기존 4.03%에서 3.35%로 인하함

〈표 4-11〉 코로나 19 이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자 수	6.5만명	7.1만명	8.1만명	9.1만명	9.9만명	10.7만명
서비스 시간 (월평균)	109 시간	109시간	109시간	127시간	127시간	140시간
시간당 단가	9,240원	10,760원	12,960원	13,500원	14,020원	14,800원
예산액	5,461억	6,907억	1조 35억	1조3,057억	1조 4,991억	1조 7,405억

자료: 1) 한국장총(202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

2)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 법제 변화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임

○ 2020년 12월 29일 개정안 통과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65세 도래로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어 서비스 시간이 감소한 자에 대하여 2021년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함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갖도록 함

○ 시행령 개정으로는 제27조제1항제2호 중 "천재지변, 화재 또는"을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화재의 발생이나"로 변경함

- 코로나 19 등 감염병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활동지원 수급자 결정 통지 전에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표 4-12〉 코로나 19 이후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법제의 변화

구분	시기	제도 개혁의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22. 6. 10. 일부개정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제한한 법률 개정 -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함(제5조제2호).
	2021. 6. 8 일부개정	활동지원급여 신청은 시·군·구를 방문하여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여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음 -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20. 12. 29, 일부개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 해소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갖도록 함(제5조제2호 단서).
시행령	2021. 12.31. 일부개정	긴급활동지원의 요건에 '감염병 발생'을 명시적으로 규정 - 감염병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함.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활동 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 전에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 코로나 19 발생 초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돌봄 관련 주요 지침을 발표하여 격리 시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 유행대비 사회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대응지침」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2020. 2. 21)으로 장애인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주요 내용은 자가격리 상황 시 중단 없이 활동지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 급여, 가족돌봄비용 지원, 돌봄 서비스 단절에 따른 가정생활 지원, 돌봄 투

입인력에 대한 개인보호장비 지원 등이 제시됨

- 코로나 19 확진 및 자가격리 시 활동지원 급여를 확대 제공
 - 자가격리시 활동보조, 방문간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하며, 활동지원사를 통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가족 서비스의 경우에도 한시적 급여 지급
 - 가족·친인척의 경우 활동지원사로 등록하고 기준급여 지급
 -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 보호자의 확진·자가격리시 월 20시간의 특별급여를 추가 부여
 - 독거 장애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 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확진 시 긴급활동지원 안내(2020. 12. 23.)

- 중증장애인인 수급자가 확진되는 경우 부족한 돌봄인력을 배치
-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이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에 준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하여 퇴원 시까지 일 24시간 지원
- 활동지원 비수급자인 장애인이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에 준하여 긴급활동지원급여 제공(일 12시간 총 10일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 지침(2021. 4.30.)

- 초·중·고 장애학생 특별돌봄(월 40시간) 및 고교생 방학기간 특별지원(월 20시간) 추가 제공, 대체공휴일추가지원(12시간)을 제공

○ 코로나 19 장애학생 돌봄 강화와 활동지원사를 위한 특별지원을 시행(2022. 2.28)

- 코로나 19 감염이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격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최대 336,000원 지원금 지급의 내용임 (2,000원×24시간×7일(격리기간 기준)). 즉 2천원임
- 초·중·고 개학 시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에 따른 장애 학생의 돌봄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추가 지원으로 월 297,000원(20시

간), 최대 4개월 지급함

〈표 4-13〉 코로나 19 이후 장애인활동지원 대응 지침

시기	지침의 주요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 (2020. 2. 21)	1)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돌봄을 원칙, 자가격리시 활동보조, 방문간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 활동보조의 경우 가족에 의한 돌봄 급여 지급 가능 2) 장애인의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월 20시간) 제공 3) 비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 긴급활동지원급여(월 120시간) 4) 기타 - 장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1:1 서비스 인력 확보 - 자가격리 대체인력 지원 (기준급여 + 생활지원비) - 가족·친인척의 경우 활동지원사로 등록하고 기준급여 지급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확진 시 긴급활동지원 안내 (2020. 12. 2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긴급활동지원급여 기준 완화 - 중증장애인인 수급자가 확진시 의료기관에 돌봄인력을 배치하여 퇴원 시 까지 일 24시간 지원 - 비수급 장애인의 경우 긴급활동지원급여 제공
장애학생 학습 돌봄을 위한 특별 급여 (2021. 4. 30)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교생 재학생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 수급자 중 초·중·고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 매월 40시간(561천원), 최대 6개월, 본인부담금 없음
코로나 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2022. 2.28)	1) 장애인활동지원사 코로나 19 돌봄 한시지원 인센티브 제공 - 코로나 19 확진·자가격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 최대 336,000원 지원금 지급 2) 초·중·고 개학 시 장애학생의 돌봄 강화 -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으로 월 297,000원(20시간), 최대 4개월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장애인활동지원 이외 시설 돌봄 추가지원과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등이 시행됨

○ 장애인 시설 등 휴관 시 대응 방안으로 돌봄 공백의 발생하는 경우,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 비수급자)과 보호자 일시 부재특별지원급여(기존 급여 + 월 20시간, 기수급자) 지원(2020. 3. 5)

○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경우 가족급여 한시 허용(2021. 01. 12)

- 발달장애인 수급자 중 코로나 19로 인하여 급여지원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 지급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안내서(매뉴얼)을 개정하여 자가격리 또는 확진 시 대응 방안에 현장지침 마련
- 장애인 자립을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발표(‘21.8.2.)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등이 추진됨

3)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

- 장애인활동지원은 대표적인 장애인돌봄 사업으로서 제도적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의 개선이 뚜렷함
 - 2022년은 장애인활동지원의 대상자가 8천명 확대(9만 9천명→10만 7천명)되고,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3천명 → 4천명) 및 단가도 인상(1,500원 → 2,000원/시간)
 - 장애인돌봄은 활동지원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해 돌봄공백에 대응함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월 25시간 확대(100시간 → 125시간)되고 지원대상 확대(9천명 → 1만명)
 -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720 시간 → 840시간)하고, 소득기준 초과 가정도 수급자 적용으로 4천명 확대(4천명 → 8천명)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으로 인정조사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급여량은 증가하였고, 산정특례 적용의 경우 평균 20.4시간이 증가

〈표 4-14〉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의 주요 급여 내용

구분		급여량				
활동 지원 급여	급여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7,105,000원 (약 480시간)	6,660,000원 (약 450시간)	6,217,000원 (약 420시간)	5,773,000원 (약 390시간)	5,329,000원 (약 360시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4,885,000원 (약 330시간)	4,440,000원 (약 300시간)	3,997,000원 (약 270시간)	3,553,000원 (약 240시간)	3,109,000원 (약 210시간)
		11구간	12구간	13구간	14구간	15구간
		2,665,000원 (약 180시간)	2,220,000원 (약 150시간)	1,777,000원 (약 120시간)	1,333,000원 (약 90시간)	889,000원 (약 60시간)
	본인 부담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2만원(정액) - 차상위 초과 :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35.5천원 ~ 177.6천원)				
		특별 지원 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297천원~1,185천원(약 20~80시간)				
		본인 부담				
		면제				

자료: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표 4-15〉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시간 변화

산정특례 적용 전			산정특례 적용 후		
인정조사	종합조사	증감	인정조사	종합조사	증감
113.7	129.5	+15.8	113.7	13.1	+20.4

자료: 국정백서 편찬위원회(2022) 문재인정부 국정백서에서 수정

□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은 제도 개선보다는 종합계획에 따른 급여 확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구체적 권리성을 보장을 통한 수급권 확대와는 거리가 있음

○ 법적 제도 개선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불만, 활동지원사 구인란, 발달장애인에게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가족돌봄허용, 지역별 격차에 따른 급여 차이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됨

○ 특히 코로나 19의 긴급한 상황에서 제시된 추가적인 활동지원서비스 공급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활동지원수급자의 65세 이후 서비스시간 보전의 실효성 증대, 산정특례 보전 기간종료 후 대책마련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관련하여 2020년 6월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2개가 발의되었으나, 이 중 대안 반영 포함 3개 법안만 통과되었고(5개 법안의 대안 반영 폐기), 14개 법안이 계류 상태임

○ 법률 일부개정을 통한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개선은 앞의 표에서 제시한 3개의 법률 개정과 하나의 시행령 개정에 불과함

○ 장애인활동지원 법제 소관위 심사 진행 중인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음

- 장혜영 의원 발의안(2022.4.20.)은 24시간 활동지원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법률 개정임
 - 현재 활동지원이 65세 이상,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 질병의 종류 등에 따라 보장성이 크게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의 장애정도, 생활환경, 사회환경, 당사자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임
- 김미애 의원 발의안(2022.1. 28.)은 수급자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 김예지 의원 발의안(2021. 12. 22)은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임
- 장재원 의원 발의안(2021. 11. 22)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이 어려운 희귀질환자를 수급자 대상에 포함
- 최혜영의원 발의안(2021. 8.9)은 활동지원급여에 방문재활을 포함
- 이 밖에 일부개정법류안들도 상기한 내용과 유사함. 코로나 감염병 상황 등 응급 상황에서의 돌봄, 연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돌봄 급여 등이 개정 사유임

○ 장애인활동지원의 대상과 급여가 한정되어 발생하는 문제들은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보완하는 경향이 있음

- 현재 다수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에게 자체사업으로 활동지원을 추가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은 복지부와 신설·변경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를 지님

〈표 4-16〉 코로나 19 이후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제도 개선안

개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2022.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급여의 기본원칙 신설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65세 이상에 도달 시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에 하나를 선택 -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 공개 -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 - 활동지원급여 차감 규정 완화 - 비수급 장애인은 감염병 확산 및 재난 발생 시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 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 관련 조항 삭제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2022. 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활동지원급여 기준 추가 - 수급자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수급자가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등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2021. 1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 수급대상 포함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관한 특례)에서「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추가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2021. 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제2호 중 “방문간호”를 “방문간호, 방문재활”로 확대 - 방문재활: 활동지원인력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재활을 위한 치료 및 교육·상담 등을 제공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안내 및 대응지침은 현장에서 작동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민간 중개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에서 활동지원 수급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음

○ 매뉴얼은 구체적인 책임주체와 서비스 수급권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예산 집행의 행정적·재정적 권고에 불과

- 지자체는 코로나 19 시기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 긴급활동지원,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허용 등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없고 또한 집행이 어려움
- 중개기관과 수급자들은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또한 활동지원사도 부가적 급여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장애유형별 상황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마련되지 못함
 -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입원 및 자가격리, 그리고 서비스지원 종류는 매우 편차가 큼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이 부재하며, 탈시설 커뮤니케어 전달체계 모색이 시범사업에서 그치고 있음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수급권의 실체적, 수속적,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사무들은 지자체가 수행해야 함
 - 수급자 선정에서부터 급여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책임이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임. 그러나 국고보조사업 개별사업에 대한 재량권이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 돌봄의 통합적 서비스 연계는 고려되고 있지 못함
 - 장애인활동지원을 여타 서비스와 연계하는 지자체 공공인프라와 공공돌봄 통합이 필요함
 - 그러나 공공형 모델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동종합재가센터조차 활동지원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활동지원 개별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4) 제도 변화의 함의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장성을 높였으며, 코로나 19에 따른 대응지침을 통해 적절한 추가급여와 긴급활동지원을 실시하였음
- 활동지원 수급자의 65세 이후 급여 유지 및 긴급활동지원 근거에 감염병 사유를 추가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은 긍정적임
- 코로나 19 시기에 적용한 특별급여와 가족 활동지원 급여,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기존 수급자의 지원시간 감소에 대응한 산정특례 등의 주요한 한시적 지원 제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제가 남아 있음
 - 코로나 19에 적용한 한시 급여들은 자주 공백상태에 있었던 장애인들에게

는 일상적인 욕구였음

- 따라서 한시 급여의 안정적 제도에 대한 장애인계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건복지상임위에 계류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들은 향후 과제를 잘 보여주고 있음

○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과 같은 서비스 확대 요구에 비해 코로나 19 이후 반영된 조치는 기존 서비스를 일부 확대하는 수준에 그침

- 코로나 대응 조치는 긴급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의 기능 정상화가 주된 내용이었음. 장애인돌봄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나 장애인 복지 예산의 큰 변화 없이는 요원한 상태임

- 장애인돌봄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공적 책임성을 높이는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

- 활동지원사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민간 위탁 기관에서 종사함
- 비용부담을 빼면 중개기관에 의한 서비스 연계가 사적 계약체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가 사각지대 해소나 충분한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것임

○ 장애인활동지원사 종사자 처우와 관련한 제도 개선도 시급함

- 기본급이 없이 최저임금과 법정수당으로 구성된 시간제 임금 형태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변화가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사 돌봄 노동조건을 개선을 위한 협의구조 그리고 초단시간 계약금지를 통한 기본 노동시간 보장 등이 논의되어야 함
-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 확보 문제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임. 이에 적정인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처우 개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제3절 합의 및 정책 제언

1. 주요 성과와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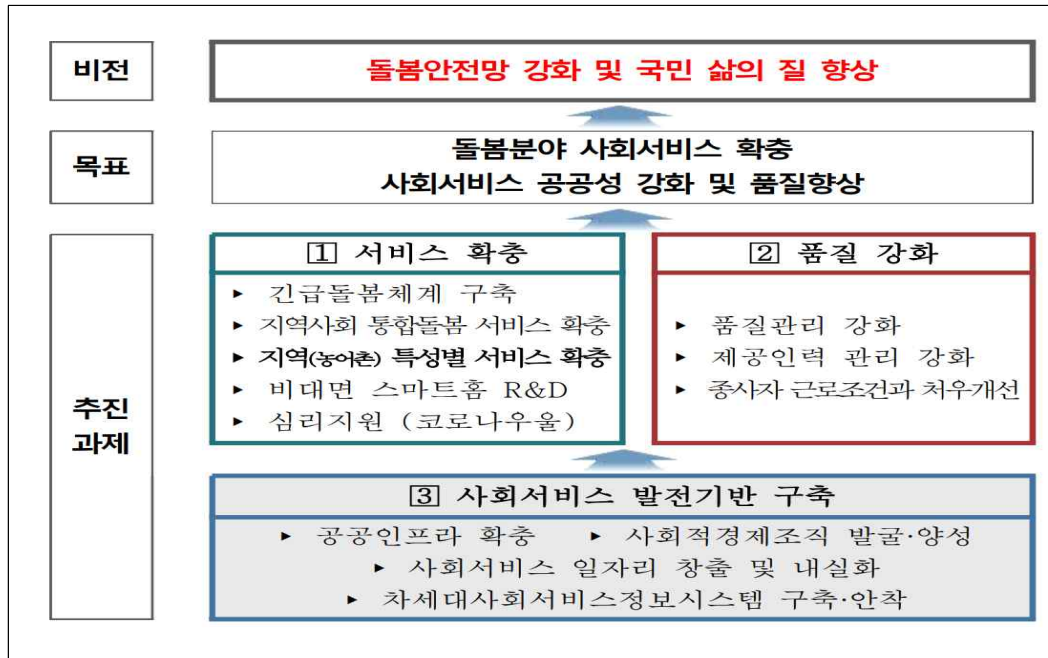
1)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적 돌봄 확대

□ 돌봄의 공적책임 강화로 사적 돌봄의 불안정성을 보완

- 사회서비스 중개기관이 소개하는 방문형 돌봄 구입 그리고 개인이 선택한 시설에 각자 입소하는 사회서비스 체계에서 지자체가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
- 정부의 사회서비스 혁신방안은 돌봄안전망 강화가 공공성에 있음을 명시
 -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지역사회의 공공돌봄 거점 기관 마련
 - 근거 법률 제정 ('21.9)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 지자체의 종합재가센터 운영, 국공립사회서비스 위탁운영, 긴급틈새돌봄, 대체인력 지원 등 공공돌봄 모델 시도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 온종일 돌봄: 초등돌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보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가 되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및 초등돌봄의 학교-마을 연계와 통합
 -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 추가급여 및 사각지대 해소
 - 긴급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사 특별지원 등
 - 제도 개혁을 통한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보전 노력
- 사회서비스 수급권 보장을 위한 제도별 긴급돌봄 추가 재정 투입
 - 재난상황에서 서비스 지속을 위한 역할
 - 사회서비스원 긴급틈새돌봄 실시 및 긴급돌봄지원단 운영
 - 아동돌봄쿠폰 및 방과후 틈새시간 돌봄 제공

- 장애인돌봄의 한시적 가족급여 및 장애학생 특별 돌봄

[그림 4-7] 코로나 19 초기 사회서비스 혁신 방향



자료: 관계부처합동 (2020. 12. 28) 사회서비스 혁신방안

2) 미시적 조정으로서 사회서비스 사업 집행의 한계

□ 코로나 19 발생 이후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의 불충분성을 개선하기 보다는 긴급돌봄 대응지침에 집중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에 따라 코로나 19 대응 하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노력에 주력함

- 코로나 19 대응 지침의 주요 내용은 감염취약시설 집중 관리, 운영중단이 아닌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 운영, 재가서비스 및 비대면 사회서비스 전환을 통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짐

○ 사회복지시설의 대응 지침은 코로나 19 확산을 예방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다수의 현장 의견은 공적 지원의 불충분성이라는 문제점을 제기(김전승,

2022; 김정근·김두레, 2021; 장혜영·최정숙, 2022; 유병선·정요한·정규형, 2021)

- 감염병 대응 지침으로 인한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부족
- 재난대응에 따른 추가적인 공적 지원 및 돌봄종사자 보상체계 부족

□ 돌봄서비스 수급량과 서비스 내용을 정하는 사례관리 체계 개선 미흡

○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권리부여 주체의 부재

- 돌봄 대상자의 입원이나 입소 생활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책임주체는 여전히 없음
- 돌봄공백이 발생할 때 돌봄서비스는 개별사업별로 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지며, 기존 재가서비스 이용자 이외 신규 진입은 어려움
- 돌봄사업의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서비스 연계 실적은 매우 낮고, 심리상담 및 재활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전문가 확보가 어려움
- 지자체 단위 돌봄에 관한 정책을 계획, 수립, 집행하는 체계 미흡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성과 민간 의존성을 해소할 제도 개선 미흡

○ 인구고령화에 따른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달체계 개편 노력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의 비용증가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가로만 재정을 지원하는 민간시장 의존도의 영향이 큼
- 돌봄에 대한 공공재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통제되지 않은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이 공공인프라 확충임
-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 기관에 대한 통제 강화나 운영비지원 방식은 관리감독 비용 증가에 비해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적절하지 않은 방식임

-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해야 할 공공돌봄 사무를 마련하고, 급여의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돌봄 시설 확충, 공공돌봄 종사자 확보 과제가 사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2. 향후 과제

1) 사회서비스원

□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원 사업 지원

○ 중앙사회서비스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표준화된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함

- 지자체의 고유사무인 주민 돌봄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우선 사업을 법령에 부합하게 실시할 필요
 - 코로나 19 상황에서 공공돌봄 제공기관으로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
 -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돌봄안전망으로서 역할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 코로나 19와 같이 민간이 기피하는 어려운 돌봄을 제공하면서 독립채산 경영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시도별 제각기 회피전략이 적용됨
 - 공공돌봄의 급여와 대상을 민간돌봄과 구분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피할 수 있어야 함

○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추진

- 공공인프라 확충은 공공투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
 -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사회서비스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위탁 의무조항, 공공요양원을 비롯한 지자체 필수 사회서비스 시설 운영 조항, 지방자치단체 공공돌봄 인프라 설립에 국고지원 근거 조항 등을 고려해야 함

○ 사회서비스원 필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 돌봄 정책에서 항시 중요하게 다루어진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시도가 병행되어야 함
- 일자리 처우개선은 사회서비스 종류별로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어야 하며, 이는 민간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적용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함

2) 아동 방과후 돌봄

□ 온종일 돌봄 정착을 위한 마을돌봄 인프라에 대한 투자

○ 지역아동센터 공공형 전환 모델 지원 확대

- 지역아동센터는 약 70%(2,904개소)가 개인 신고시설로서 규모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보편적 돌봄의 인프라로 기능하기 어려운 현실
-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적 영세성은 지자체의 공간 지원이 없는 것이 중요한 원인. 전체의 절반이 넘는 센터가 전월세 임대 형태이므로, 지자체는 공공성이 확보되는 센터에 대한 공간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설치시설은 임대주택단지의 지역아동센터 우선설치 등 공공형으로 확충하는 것을 우선 고려
- 한계시설의 경우는 지역사회 내 타 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 전환을 모색할 필요
-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 취약아동 이용시설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 자산으로 적극 투자하는 전략 필요
- 지자체의 재정투자는 지역사회 공동체 운영의 방식을 전제로 해야 함. 이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자산화와 동일한 방식임

○ 다함께돌봄센터는 민간위탁 방식의 적절성을 재고해야 함

- 사회서비스 시설 운영은 복잡한 민-관 전달체계의 난제들을 가지고 있음
- 다수의 돌봄서비스는 민간 사업자 중심의 공급구조와 수가 보상체제로

인하여 전달체계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비용통제 중심의 제도 설계는 낮은 수가에 따른 낮은 품질의 사회서비스를 고착화함

- 다함께돌봄센터 또한 지자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위탁조건이 지자체 별로 천차만별임. 일부는 공적돌봄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의 간접고용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됨
-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처우가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낮은 것에 더해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조차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지자체 아동돌봄은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이 갖추어져야 함

- 아동방과후 돌봄은 사교육·돌봄공급이 충분하여 수요자 선택권으로 서비스가 욕구충족과 최적화가 이루어짐
- 지역아동센터에 취약아동 비중이 높은 이유는 절실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이 시장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임
- 초등돌봄의 공적 이용율을 높이고 계층간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을돌봄 시설들의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좋은 프로그램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에서 보편적 마을돌봄이 마련될 수 있음

3)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의 보편적 수급권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수급권을 요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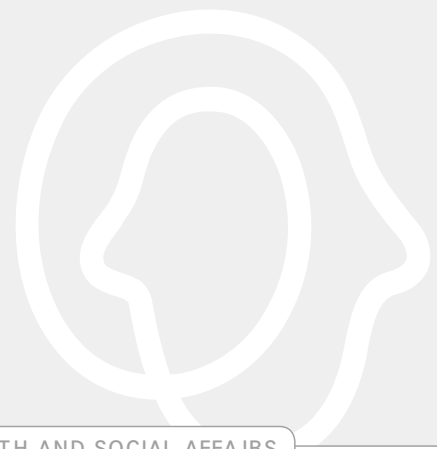
- 활동지원 수급권은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활동이나, 아직 수급자 선정기준은 보편적 서비스로 보기 어려움
- 신체적 ‘활동지원’ 이외의 자립생활 서비스 이용, 방문재활서비스 추가,

야간 및 주말 서비스 가산급여 확대, 가족 활동지원급여 허용, 본인부담금 삭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한 보편적 급여 이용의 요구들을 검토해야 함

-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규범이 강제되지 않는 비공식적 인간관계나 윤리적 영역의 돌봄이 아니라, 법제에 의해서 형성되는 공적 영역의 돌봄임

□ 장애인돌봄의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노력

- 장애인활동지원은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임
 -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은 지역사회통합돌봄 하에서 정책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주거지원 인프라, 방문건강 및 의료,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전달체계, 케어안 내창구 지역케어회의 등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맞물려 활동지원서비스를 설계해야 함
- 장애인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지역 중심의 돌봄 연속성을 확보하는 모델 개발은 지속되어야 함



제5장

보건 영역 제도 변화 : 상병수당 제도를 중심으로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내용

제2절 코로나 19 이후 보건 영역의 대응과 평가

제3절 합의 및 정책 제언

제 5 장

보건 영역 제도 변화 : 상병수당 제도를 중심으로

제1절 연구 배경 및 내용

- 이 장에서는 국가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맥락 안에서, 코로나 19 유행이라는 특별한 도전이 어떠한 정책적 변화를 야기했는지 그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 특히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이 종래의 협소한 의료보장 혹은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넘어서, 보편적 건강보장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건강 형평성 증진을 위한 건강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DoH)에 대한 개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제도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더 나은 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과 제약 요인들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1. 코로나 19 위기에서 드러난 사회서비스 분야 문제점 및 취약성

- 인권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를 요구하는 사회운동(social movement)에 의해 확장되고 발전해왔음.
- 17~18세기 서구의 시민혁명이 왕과 귀족의 지배에서 벗어나 시민의 정치 참여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권 증진의 시대였다면, 19세기 사회개혁운동과 노동운동은 물질적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를 확장해왔음.
- 20세기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유형의 복지국가 출현하게 됨.
- 건강권(right to health)도 선형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권의 확장 과정에서 대두함.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지칭함.

- 1946년 세계보건기구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고 1948년 세계인권 선언 25조, 196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12조 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됨.
- 국내에서도 헌법 제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 10조에 건강권 보장을 규정함
- 건강권은 단지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만이 아니라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폭넓은 범위의 요인들('건강의 기저 결정요인')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라는 점이 특징임.
- 예컨대 코로나 19라는 공중보건 위협을 맞아 진단과 치료, 백신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적으로 보장하여 접근성을 높인 것 뿐 아니라, 감염자/접촉자의 격리기간 동안 물품과 생계비를 지원한 것은 이러한 포괄적 건강권 보장 개념에 잘 부합함.
-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이 구체화된 것은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공백과 불충분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짐과 더불어 유행 통제를 위한 현실적 필요성이 부합하면서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예컨대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자들의 격리 조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이 아니라 자발적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격리 기간 동안 생계지원이 반드시 필요했음
- 또한 코로나 19 확진 전이라도 발열 같은 초기 증상이 있으면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출근이나 등교를 보류하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무르기'를 권고했지만, 현실에서 노동자들, 특히 불안정 노동자들이 이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2020년 유행 초기에 병원, 콜센터, 물류센터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이차적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면서 사회적 문제의식이 확산됨
- 한국의 노동관계 법령에서 병가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음.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유급병가는 물론, 무급병가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나라.
 -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표준 취업규칙에서도 무급병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개별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남겨둠.
 - 한국에서 독특한 상병수당의 부재 현실은 많은 노동자들이 ‘아파도 일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짐. 한국의 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아파서 불가피하게 쉬는 상황에서 소득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도 부재.
-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유급병가나 상병수당 제도인데, 한국사회에 유급병가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한국을 제외한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병수당’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본격적으로 알려짐.
 - 2절에서 ‘코로나 19 위기에서 드러난 사회서비스 분야 문제점 및 취약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겠음.

2. 연구목표

- 코로나 19 유행 시기에 어떠한 맥락에서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되었는지 그 경과를 살펴보고, 그 함의와 전망을 논의하고자 함

3. 연구 방법

- 코로나 19 유행 기간 동안 건강권 보장, 특히 보편적 건강보장(UHC),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DoH)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확인
 -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배경

-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 경과와 시범사업 특징
- 제도 설계를 둘러싼 시민사회·노동계의 비판과 제언

□ 자료 수집

- 통계 자료: OECD Stat과 KOSIS 등에서 병가, 프리젠티즘 관련 자료 확인
- 범부처 합동 혹은 관련 부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정책보고서 검토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안과 개정사유, 연혁 확인: 건강보험법, 감염병예방법
-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건강권 옹호 활동가의 자문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연구 보고서, 토론회 자료 등

□ 분석 내용

- 정책/제도 변화의 배경과 실제 변화 내용 종합
- 합의 도출과 미흡한 정책/제도 개선 영역 확인

제2절 코로나 19 이후 보건 영역의 대응과 평가

1.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의 상황

가. 코로나 19 유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 2020년 코로나 19 유행 초기 단계에 대구경북 지역의 집단 발병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 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음.
- 그러나 이후 수도권에 위치한 콜센터, 물류센터 등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가족, 지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남.
- 이들 유행은 환기가 불충분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근로환경에서 다수

의 노동자들이 밀집된 형태로 일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음 (최은숙 등, 2020).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일단 감염이 유입되고 나면 작업장 내에서 빠르게 대규모 전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음.

□ 그러나 물리적 환경만이 문제는 아니었음. 코로나 19로 콜센터 상담이나 택배 물량 등이 늘어나며 업무 요구도가 높아진 것도 감염 확산에 기여했음.

○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벼운 발열이나 근육통 등 코로나 19 감염의 전구 증상이 있어도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감염이 작업장 내 확산되거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함.

○ 이렇게 작업장을 통한 집단 발병과 뒤이은 지역사회 확산이 이어지면서 당국은 시민들에게 코로나 19 확진 이전이라도 ‘아프면 3~4일 집에서 머무르기’를 권고함

□ 이렇게 몸이 아파도 출근하는 것은 전형적인 ‘프리젠티즘(presentism)’에 해당함.

○ 프리젠티즘은 노동자 개인의 건강 악화는 물론, 작업장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업무 효율 저하로 노동생산성 저하에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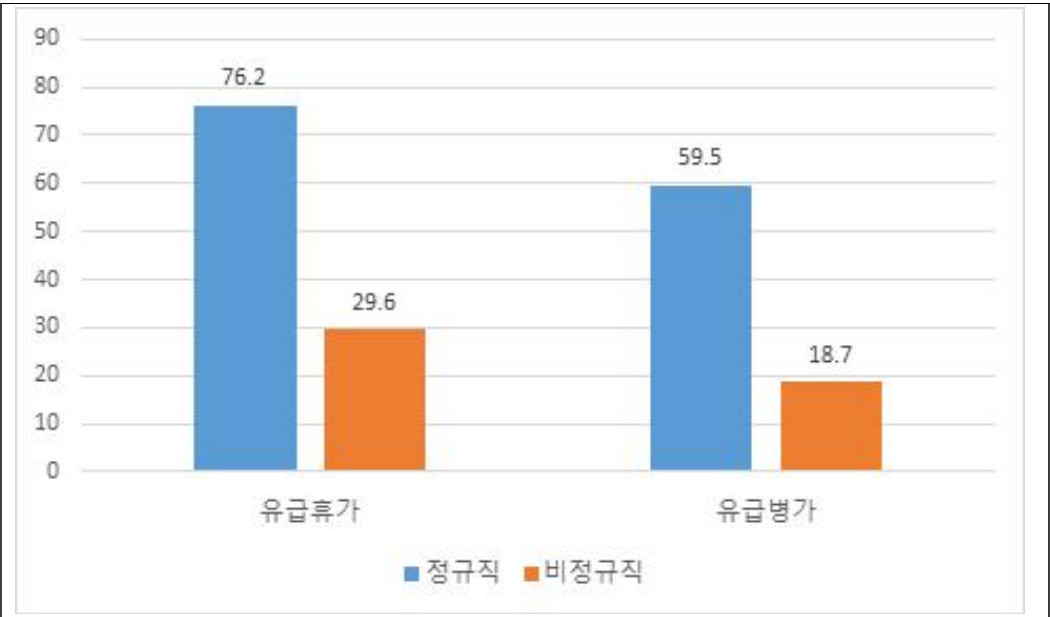
○ 코로나 19 유행 이전에 이루어진 체계적 문헌고찰에 의하면 (Kigozi et al., 2017), 연구마다 건강 문제의 정의나 생산성 손실의 비용 추정 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프리젠티즘에 의한 노동생산성 손실 비용이 상당한 수준이며 향후 연구에는 반드시 프리젠티즘 관련 요인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함.

□ 프리젠티즘은 노동자 개인의 성향이나 인식 부족 때문이라기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

○ 병가/휴가에 대한 접근성, 성과를 강조하는 작업장 규율이나 조직 문화, 대체 인력 부족, 고용 관계에서의 취약함, 생계 수단의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라 할 수 있음. 즉 무엇보다 노동시장 불평등과 사회보장 정책의 간극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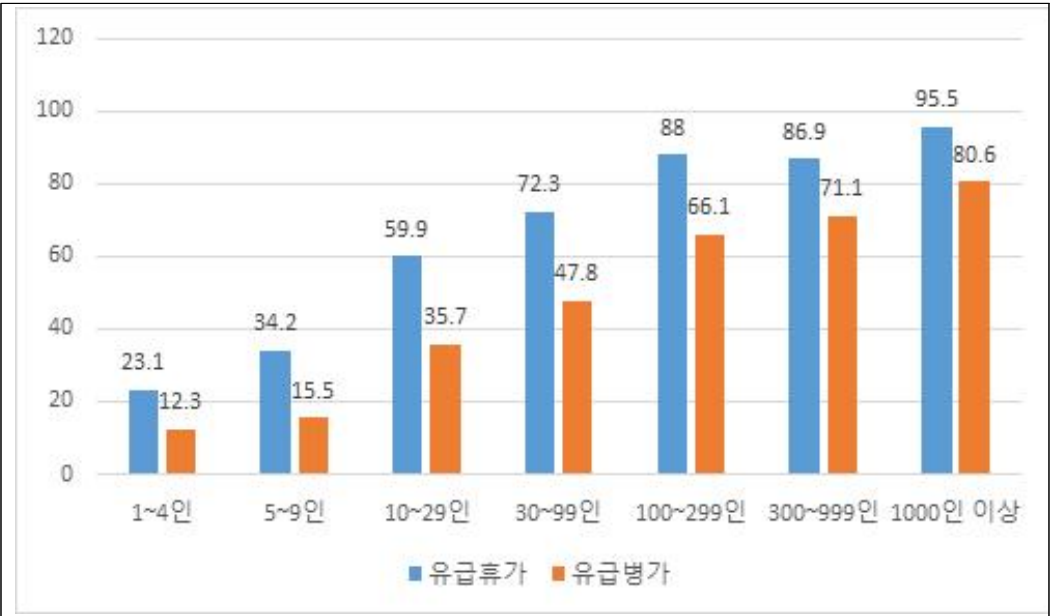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과 손상(상병)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보상법(산재보험)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요양급여와 휴업 급여를 제공한다.
-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 산재보험에 상응하는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적용하고 있음. 물론 업무 상 재해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의 적용 사각지대에 있거나 (김명희 등, 2020c),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승인 제도의 높은 문턱, 불충분한 건강보장 수준 때문에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김명희 등, 2020a)
- 하지만 업무 외 상병에 대해서는 감염병 일부를 제외하고 공적 보장 제도 자체가 없는 상황임.
 - 공무원·교원의 경우 복무규정을 통해 업무 외 상병에 대해서 병가/질병휴직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 밖의 기업에서는 휴가/병가는 유급이든 무급이든 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제공함.
 -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고용형태의 불안정 노동자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를 보장받기 어려움. 실제로 노동패널 2018년도 자료를 이용한 이재훈(2020)의 분석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회사에서 유급 휴가와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비율이 각각 30%와 20% 미만임 (<그림 5-1>).
 -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유급 휴가에 비해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비율이 낮고,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휴가와 병가 제공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5-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상병사업 시범사업 개발을 위해 2021년에 실시한 기초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남. 유급휴가나 유급병가/질병휴직만이 아니라 무급 병가/질병휴직에서도 불안정 혹은 영세사업장 노동자가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이 일관되게 관찰됨 (강희정 등, 2021)

[그림 5-1] 고용형태별 직장 내 병가 휴가 도입률 (%)



자료: 이재훈 (2020)의 “외국의 유급병가, 상병수당 현황과 한국의 도입방향”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재구성 (한국 노동패널 2018년도 자료를 종단면 가중치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그림 5-2] 사업장 규모별 직장 내 병가 휴가 도입률 (%)



자료: 이재훈 (2020)의 “외국의 유급병가, 상병수당 현황과 한국의 도입방향”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재구성 (한국 노동패널 2018년도 자료를 종단면 가중치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표 5-1〉 임금근로자의 휴가 제공 현황

(단위: %)

구분		유급 연차휴가	유급 병가/질병휴직	무급 병가/질병휴직
전체		64.7	42.2	47.4
종사상지위	상용	77.1	50.7	51.2
	임시	35.1	20.7	36.4
	일용	20.5	14.9	39.8
고용형태	정규	78.5	52.5	52
	비정규	57.4	36.8	45
사업체규모	5인 미만	45.4	29.4	34.1
	5~29인	60.7	36.6	42.9
	30~299인	78.7	50.5	57.1
	300인 이상	87.8	65.8	67.4

자료: 강희정 등 (2021)의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354쪽 결과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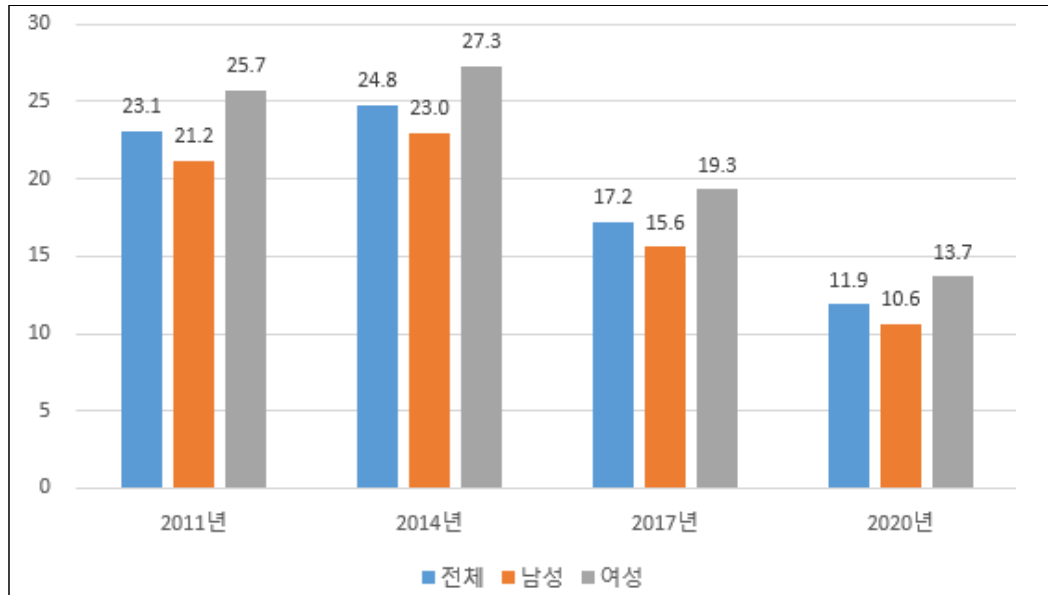
□ 물론 지난 10여년 간 아파도 출근해서 일을 하는 프리젠티즘은 꾸준히 감소해왔으나, 노동 집단별 차이는 여전히 크게 부각되고 있음.

○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근로환경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23.1%에 달하던 프리젠티즘은 2020년에 11.9%로 절반 가까이 감소함.

○ 하지만 시간 흐름에도 성별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게 유지됨.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임금노동자보다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이 일관되게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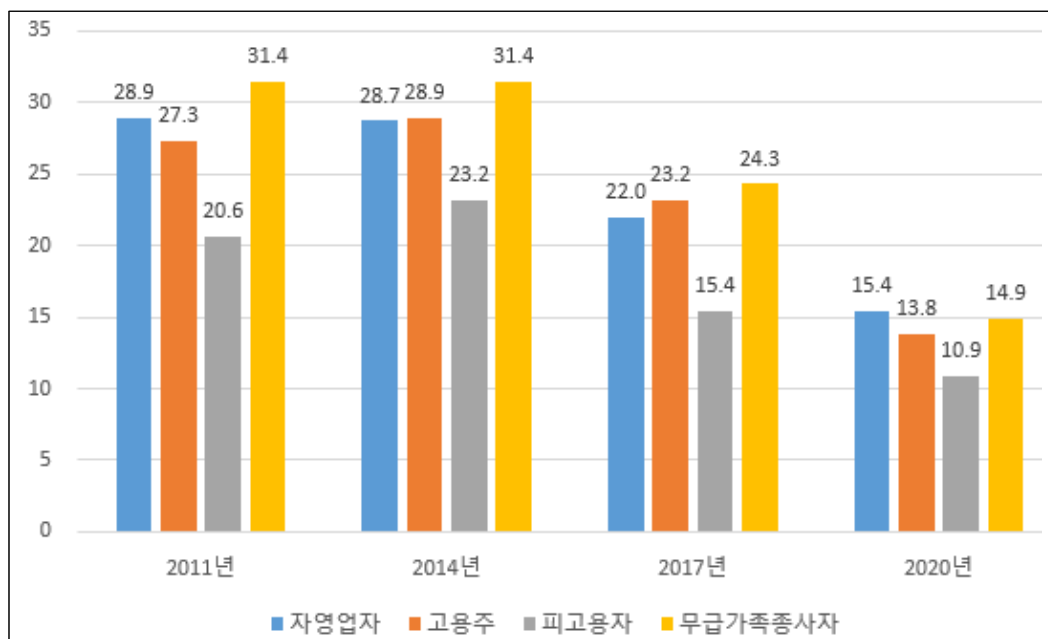
○ 이는 여성이 직면한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조건과 관련 있음. 또한 임금노동자만이 아니라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일관되게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줌 (〈그림 5-3〉참고)

[그림 5-3] 취업 인구의 성연령별 프리젠티즘(%) 변동, 2011~2020년



자료: KOSIS의 연도별 근로환경조사 자료

[그림 5-4] 취업 인구의 고용형태별 프리젠티즘(%) 변동, 2011~2020년



자료: KOSIS의 연도별 근로환경조사 자료

〈표 5-2〉 취업자 중 지난 1년간 상병 경험자 중 아파서 일하지 못한 날과 일한 날 평균

구분		상병경험자 비율 (%)	아팠던 날 (일)	아파서 일하지 못한 날 (일)	아파도 일한 날 (일)
전체		35.0	16.9	8.9	7.9
성별	남성	33.8	17.3	9.7	7.6
	여성	36.6	16.3	7.9	8.4
임금 근로자	소계	33.6	14	7.2	6.8
	상용직	33.3	10.5	5.4	5.2
	임시직	32.3	19.1	9.2	9.9
	일용직	40.3	33.1	18.8	14.3
비임금 근로자	소계	39.6	24.7	13.8	10.9
	고용주	42.2	13.9	7.4	6.5
	자영업자	38.7	25.6	14.9	10.7
	무급가족종사자	39.4	37.0	18.8	18.2

자료: 강희정 등 (2020)의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343~344쪽 결과표 재구성

□ 지난 1년 간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 경험이 있는 취업자 중 아팠던 날의 평균
은 16.9일이었고 그 중에서 아파도 일한 날은 평균 7.9일이었음(강희정 외,
2021).

○ 임금근로자의 경우, 아팠던 날, 아파서 일하지 못한 날, 아파도 일했던 날 모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순으로 많았음.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자영업
자<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아픈 날도 많아지고, 그에 따른 병결과 프리젠티즘
도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표 5-2〉)

○ 이 조사는 몸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한 이유를 중복응답 조사를 통해 확
인함. 소속 사업장에 병가나 질병 휴직제도가 없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가장 흔
한 답변은 대체 인력이 없다는 점이었음 (57.4%).

○ 상대적으로 인력 대체가 용이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용불안이 극심한 일
용직의 경우 소득감소에 대한 우려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한편
병가질병 휴직제도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 가장 흔하게 지적된 이유는 대체 인

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음. 일용직의 경우 아프지만 참고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과 소득 감소가 중요한 요인이었고, 상용직의 경우 회사 분위기를 지적인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5-3〉) (강희정 외, 2021).

〈표 5-3〉 임금근로자가 아팠는데 출근한 이유 (중복응답 중 1순위 %)

구분		업무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	아프지만 참고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소득 감소 우려	실직이 우려된다	회사 분위기	인사승진· 평가 등의 불이익 우려
병가/질병 휴직제도 없는 경우	전체	57.4	17.3	14.3	3.8		
	상용직	61.0	19.8	9.8	2.5		
	임시직	55.8	14.1	17.2	6.0		
	일용직	38.7	10.2	35.2	5.6		
병가/질병 휴직제도 하나라도 제공되는 경우	전체	51.3	22.9	11.2		11.7	2.5
	상용직	55.4	20.1	9.5		12.8	2.0
	임시직	47.2	26.6	12.5		9.0	4.1
	일용직	25.3	37.8	22.9		9.6	2.7

자료: 강희정 등 (2020)의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348, 350쪽 결과표 재구성

○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사업주 혹은 자영업자 자신의 재량에 의해서 얼마든지 쉴 수 있지만,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거나 (54.5%), 매출 감소 등 소득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29.3%) 아파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함 (강희정 등, 2021).

□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병가의 중요성만이 아니라, 병가를 제도화하더라도 그에 수반하여 소득 보장, 대체 인력의 확보, 조직 문화 개선 등의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특히 불안정 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 이러한 맥락 요인들이 제도 적용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나. 코로나 19 유행을 거치며 나타난 인식의 변화

□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아플 때 쉴 권리와 이를 위한 소득 보장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을 이루게 됨. 여기에는 몇 가지 계기가 있었음

○ 첫째, 글의 서두에서 지적했듯 아플 때 쉴 수 있는 것이 개별 취업자의 복리나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다중의 건강과 안전에도 중요한 이슈라는 점이 크게 부각되었음.

- 코로나 19 범유행 상황 이전에는 아파도 출근하는 것이 성실성, 책임감, 근태와 같은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그러나, 코로나 19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제고됨.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무르기”는 본인을 위해서든 타인을 위해서든 중요한 덕목이 되었음.
- 그러면서 불안정 고용 때문에 쉴 수 없거나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집에서 머무를 수 없는 이들의 현실에 대한 지적도 함께 이루어짐 (김명희 등, 2020b)

○ 둘째, 감염병 관련 법률에 의해 격리기간 동안 생계 지원금을 받으며 개인의 상병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만이 아니라 소득까지 보장해줄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함.

- 물론 과거에도 결핵 감염자에 대한 입원·격리치료 명령이 취해졌을 때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음(〈표 5-4〉 참고).
- 하지만 적용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를 체감하기는 어려웠음.

〈표 5-4〉 결핵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치료 명령과 생활보호조치

제15조(입원명령)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원명령의 통지는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 28.〉

③ 제1항에 따른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 1. 28.〉

제15조의2(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거부한 경우

2. 입원치료 중 임의로 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公衆)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격리치료를 명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및 격리치료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16조(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중일 경우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호 또는 지원에 상당하는 생활보호조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시행령 제5조(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받으려는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으면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생활보호조치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입원·치료 중인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의2(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실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계 내 주소득자인 결핵환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원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받아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가계 내 소득원(所得源)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소득원 상실 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9. 11.〉

② 생활보호조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기간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③ 생활보호조치로 지원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가구 구성원의 수, 소득상실액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4. 7. 28.]

○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 기간 동안 사업주가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감염병예방법에 신설함.

- 그리고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중에 이러한 조항들이 개정·보완되었고 대규모 유행이 발생하면서 실제로 유급 휴가나 생계비를 지원받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남. 병가와 소득보장에 대한 경험치와 권리의식이 성장할 수 있었음 (<표 5-5, 6> 참고).

<표 5-5> 감염병예방법의 유급 휴가 관련 사업주 협조 의무 규정

<p>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p> <p>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p> <p>시행령 제23조의3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p> <p>①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9. 11.></p> <p>② ~ ⑤ 생략</p>
--

<표 5-6> 감염병예방법의 생활 지원 관련 규정

<p>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p> <p>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p> <p>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셋째,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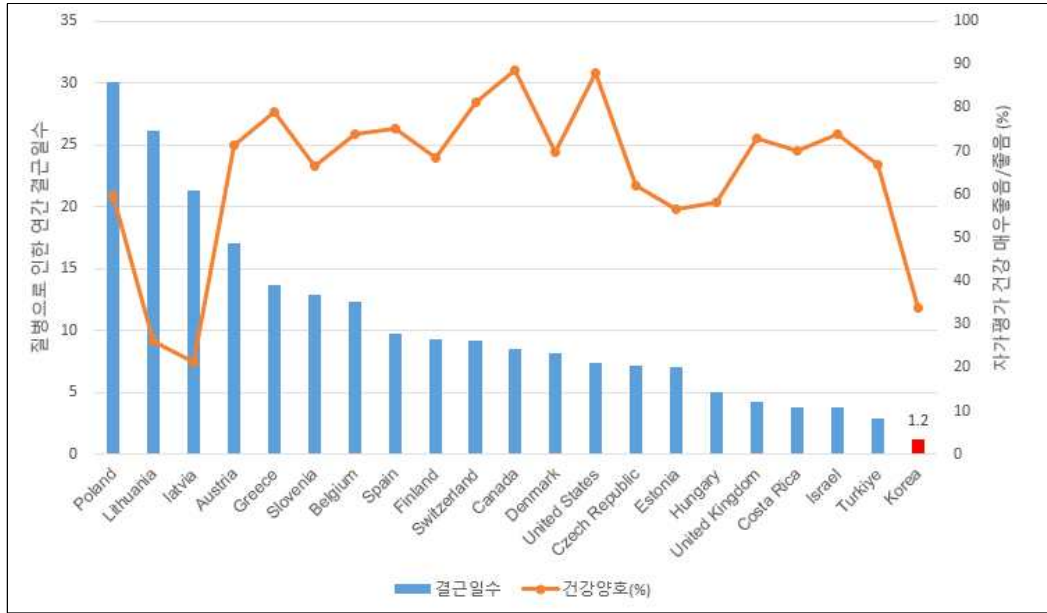
와 전문가 발언 등을 통해 한국 이외 대부분의 해외국가에 ‘상병수당’ 제도가 있다는 것이 대중들에게 알려짐.

- 예컨대 코로나 19 유행 초기인 2020년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연구기관인 사회공공연구원에서 발행한 이슈페이퍼 [외국의 유급병가, 상병수당 현황과 한국의 도입방향: 아프면 충분히 쉬고, 회복할 권리 보장](이재훈, 2020)은 다른 나라의 유급병가, 상병수당 제도를 폭넓게 소개하면서 한국의 상황이 전 세계에서 매우 예외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화제가 되었음.
- 이슈페이퍼는 코로나 19 유행을 맞아 상병수당 제도가 있던 나라들이 기존의 임금 근로자 중심 체계에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유행 통제를 위해 감염병에 대해서는 대기 기간을 줄이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상병수당 부재를 선명하게 드러냄.
- 실제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의 최신 집계 자료(2018~19년)에 의하면 상병 수당 ('cash sickness benefit') 제도가 없는 국가는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 가나(Ghana), 키리바티(Kiribati), 한국(Rep of Korea), 마셜 제도(Marshall Islands), 미크로네시아(Micronesia), 팔라우(Palau), 세네갈(Senegal), 시에라리온(Sierra Leone), 미국 10개국에 불과함 (ISSA, 2022).

□ 상병수당의 역사는 복지국가 프로그램 중에서도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진 것으로, 독일이 세계 최초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한 것이 1883년이었음.

○ 스웨덴의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가 1931년에 시작된 것에 비해 상병수당은 그보다 40년 이전인 1891년에 시작됨. 이웃 일본도 이미 1922년에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였음. 한국 임금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평균 결근일 수가 OECD 회원국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낮은 것은 이러한 제도적 차이를 반영함. 한국의 자가평가건강 수준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은 제도의 필요성과 공백을 분명하게 드러냄 (<그림 5-5> 참고).

[그림 5-5] OECD 회원국의 자가평가 건강수준(양호함 %)과 임금근로자 평균 결근일 수 (일) 비교



자료: OECD Stat (2017~2019년 기준 국가별 가장 최근 연도 자료 활용)

□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면 쉴 권리와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과 지지가 높아졌고, 이는 제도 도입의 동력이 되었음

○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무려 85.2%가 상병수당이 필요하다고 답했음.

-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소득 상실 우려 없이 적시에 질병을 치료받고 빨리 회복할 수 있어서’ (67.8%, 복수 응답)였으며, ‘질병으로 인한 가계 소득 감소 시 가족의 생계위험을 예방할 수 있어서’ (65.5%)가 다음으로 흔한 이유였음.

- 병가 기간 확보를 통한 건강회복과 그 기간 동안의 생계보장이라는 상병수당의 취지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상병수당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57.9%)이라는 답변 비율이 가장 높음.

- ‘허위 질병 등 제도의 남용이 우려되어서’ (57.5%)라는 이유를 제시함 (강희

정 등, 2021).

-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연대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주로 의료인증 절차)를 충실하게 설계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이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결과를 보면,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의료비 이외에 현금 보상을 제공하는 민간의료보험을 대체할 의사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강희정 외, 2021).
 - 이를테면 조사 참여자 중 현재 특정 질병 진단 시 일시금 지급 형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64.9%, 입원 정액 일당 지급 보험 가입 비율 59.6%, 실손 보험 가입률 67.8%, 간병비 지급보험 가입률 19.4%이며, 대체로 고용 상태가 안정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민간 보험 가입률도 높게 나타남.
 - 상병수당이 도입된다면 민간의료보험을 줄일 생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의 보험종류에 대해 37.6%, 37.9%, 34.6%, 38.4% 수준이었음. 즉,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1/3 정도가 상병수당을 통해 이를 대체할 의사가 있다는 것임.
 - 현재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향후 민간보험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비율이 27~30%에 달했음.

2. 상병수당 제도 도입 경과

- 코로나 19 팬데믹에서 비롯된 정책 환경의 변화를 통해 상병수당에 대한 인식과 요구 수준이 높아졌고, 정책의제화가 급물살을 탔지만 상병수당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나 정부의 제도 검토는 이미 이전부터 있었음
 - 우선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오래 전부터 상병수당에 대한 규정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음
 -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통합과 함께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됨. 이때 제45조 ‘임의급여’ 조항에 “공단은 이 법에 규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비·상병

수당 기타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1999.2.8)

○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을 거듭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조항은 변동이 없다가 2013년 개정에서 제50조 ‘부가급여’로 명칭이 변경되고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로 규정됨 (2013. 5. 22)

○ 문제는 그동안 이러한 조항을 집행할 수 있는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임. 하지만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안에 상병수당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제도 도입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만들어 주었음

□ 시민사회,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2000년대부터 상병수당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발전해왔음.

○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보장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상병급여의 법적 제공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2012년 12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후보가 공약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제안함.

○ 이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시민사회, 환자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음. 2013년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상병급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함.

○ 그리고 2014년 국정감사에서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과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방안으로 상병급여 제도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기도 했음 (고용노동부, 2017).

○ 2012년 3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상병 휴직제도 마련 계획을 발표함.

○ 2년 뒤인 2014년에는 김경협 의원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치료 목적으로 1년 이내 상병휴직을 제공하고 급여 지급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가칭 ‘상병휴직법’을 발의했음.

- 이는 실제 입법에 이르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지되었는데, 근로기준법을 통해 상병휴직을 보장하고, 고용보험을 통해 상병휴직급여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 이렇듯 2010년대에 상병급여 제도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주로 고용노동부가 담당했음. 2017년 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가 작성한 정책문서에는 해외 사례와 더불어 건강보험, 고용보험, 임의 소득보상보험제도, 산재보험 등 다양한 도입방안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함
- 2017년 즈음에는 건강보험 흑자 전환을 계기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상병수당 도입을 본격적으로 제기함 (정형준, 2017).
- 적극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옹호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9년 6월, 서울시에 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함. 그리고 이는 몇몇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됨
 - 서울형 유급병가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즉 비임금근로자나 불안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액의 일부를 정액 보상함 (85,610원/일, 최대 14일)
 - 2019년 6월~12월 동안 4,251명이 신청하여 그 중 2,675명에게, 2020년 1월~9월에는 7,191건이 신청되어 이 중 6,581건이 지급됨
 - 2020년 신청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40~60대 (40대 23.1%, 50대 31.5%, 60대 26.4%)가 전체 신청자의 약 80%를 차지함. 이들의 병가 신청 사유에는 입원이 57.1%를 차지했고 건강검진이 32.8%를 차지함.
 - 한편 고용 특성을 살펴보면 신청자의 47.8%가 사업소득자, 32.5%가 일용직 노동자, 10.2%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전체 취업인구의 분포와 비교해볼 때 자영업자와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또한 수혜자와 탈락자의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수혜자의 외래와 입원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 미충족 의료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강희정 등, 2021).
 - 이러한 양상은 근로 취약계층의 상병 시 소득보장과 이를 통한 미충족의료의 완화라는 본래의 제도 취지가 잘 구현되고 있음을 나타냄

- 서울형 유급병가는 몇 가지 한계를 보여주었고, 이는 상병수당 제도 설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첫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만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미충족 의료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음. 특히 중증, 만성질환의 경우 의료비 지출도 많고, 노동시장 복귀가 쉽지 않아 생계비 곤란 기간이 길어지는데 서울형 유급병가 정도의 지원 금액이나 기간만으로는 이를 보완하기에 부족했음.
 - 둘째, 근로불능 상황에 대한 공적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있다 해도 병가 혹은 휴가를 보장하고 병가 사용에 따른 해고·실직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음.
- 이러한 정책 흐름은 실증연구에서 근거를 가져오거나 혹은 제도 검토를 위한 정책 연구로 이어졌는데, 이 때 정책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고용노동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와 연관된 연구기관을 통해 이루어짐
 - 예컨대 이승윤과 김기태(2017)의 연구는 아픈 노동자들이 빈곤에 빠지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소득보장 제도의 정비와 상병수당의 도입을 제안함. 이들은 후속 연구에서 상병수당 제도 설계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음 (김기태와 이승윤, 2018)
 -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5년에 이미 해외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파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문성웅 등, 2015), 2019년에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함 (임승지 등 201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역시 2018년 발간한 정책연구보고서에서 고용 조건에 따른 건강보호 격차와 빈곤화 위험을 분석하며 상병수당의 필요성을 제기함 (김수진 등, 2018). 이듬해에 ‘보편적 의료보장 (universal health coverage)’ 관점에서 의료 격차 문제를 심층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써 상병수당 제도를 검토함 (강희정 등, 2019).
- 이렇게 상병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논의가 천천히 무르익어 가던

중에 코로나 19 유행이 시작되면서 급속하게 정책의제화가 진전됨

- 유행 초기인 2020년 3월 ‘코로나 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건강보험에 기초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 검토를 요구함. 6월에는 앞서 소개한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슈페이퍼 “외국의 유급병가, 상병수당 현황과 한국의 도입방향”가 발간되었으며, 7월에는 '코로나 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서 상병수당 법제화를 요구함
- 국회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됨. 이를테면 서영석(2020. 06), 한정애 (2020.06), 김경협(2020.06), 민병덕 (2020.06), 이수진 (2020.09), 박광온(21.02)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서영석 (2020.06), 배진교(2020.06), 박범계(2020.12), 정춘숙(2021.01), 박광온 (2021.02)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함
-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0년 7월 14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준비 및 시범사업 추진’이 포함됨.
 - 바로 뒤이어 같은 달 28일에 상병수당 도입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됨. 또한 경사노위 사회안전망위원회 건강보험 제도개선분과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짐.
 - 뉴딜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써 8월에는 상병수당 제도 설계를 위한 전문가 실무협의체가 구성됨.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내부에 전담 조직이 마련되었고 연구 용역 수행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면서, 시범사업과 본 제도를 설계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이 2021년에 추진됨.
 - 2021년 4월에는 ‘상병수당 제도 기획 자문위원회’가 발족했고, 2022년 1월 복지부가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함. 그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됨

3. 상병수당 제도와 시범사업

가. 상병수당 제도 소개

- 국내에서 취업인구가 건강 문제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받는 수단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업무상 상병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산업재해, 공무원·교원은 공무상재해로 취급하여 근거법률에 따라 의료비(요양급여)와 생계비(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유급병가·휴직)를 보장받음.
 - 한편 자영업자나 비임금 근로자, 다양한 형태의 취약 노동자(예, 어업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농업노동자, 초단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등은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동자들도 실제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김명희, 2020a,c).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업무 상 상병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호 체계가 존재함
- 업무 외 상병의 경우, 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라는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가 존재함. 하지만 상병 기간 동안의 생계 보호를 위한 장치는 공무원·교원과 일부 임금 근로자를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음.
 - 공무원·교원의 경우 복무규정에 따라 유급병가와 유급질병휴직이 가능하며, 일반 기업에서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병가/질병휴직을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 병가/휴직 제공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 게다가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의무 자체가 면제됨.
 -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나 영세사업장의 임금노동자,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등은 업무 이외 상병이 발생했을 때 감염병 상황을 제외하고는 생계를 지원받을 공식적 방법이 없는 상태임.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보상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소득보장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표 5-7> 참고)

〈표 5-7〉 상병과 인구집단 특성에 따른 보상 제도 현황

구분	대상	근거 법령/규칙	의료비 (요양급여)	생계비 (휴업/상병보상)	장해(애) 급여
업무 상 상병	임금근로자 (산업재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산재보험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 상연금	장해보상연금 (일시금)
	공무원·교원 (공무상 재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 요양급여	유급병가 (180일) 유급 휴직 (3년)	장해연금 (일시금)
	비임금 근로자	(일부 산재보험 적용)	(건강보험)	(X)	(국민연금)
업무 외 상병	임금 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 국 민연금법	건강보험 요양급여	(유급병가: 단체협 약, 취업규칙)	장애연금
	공무원·교원	공무원 복무규정		유급병가 (연60 일), 유급질병휴직 (1년 이내)	비공무상 장애연금
	비임금 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 국 민연금법		(X)	장애연금
감염병	전체	감염병예방법	건강보험, 일부 국고	치료 및 격리기간 생활지원	-

자료: 이재훈 (2020)의 “외국의 유급병가, 상병수당 현황과 한국의 도입방향”(사회공공연구원) 기초로 재구성

□ 한국은 OECD 회원국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병가 동안의 소득보장을 개별 기업의 재량에 맡기는 경우 취업자 사이의 불평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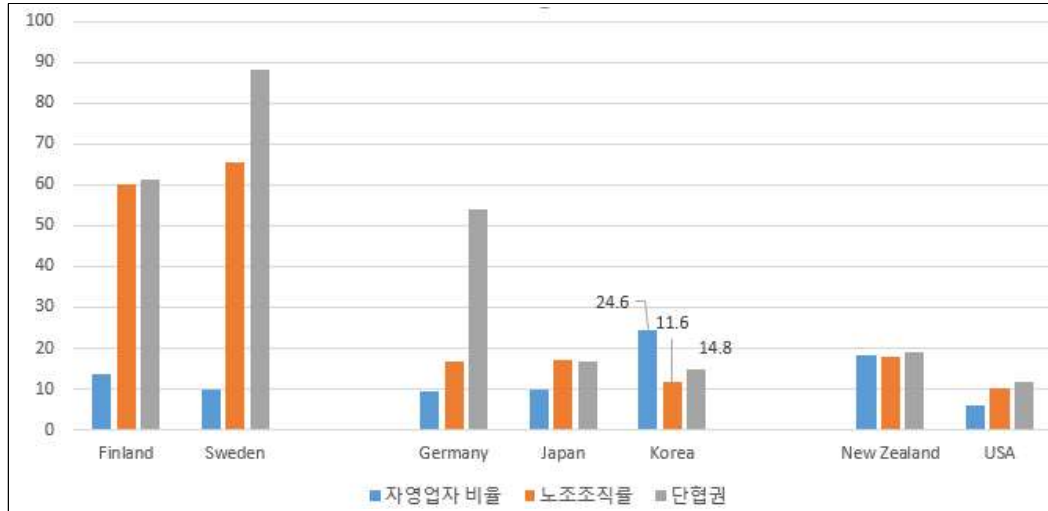
○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24.6%), 노동조합 조직률은 낮으며 (11.6%), 단체협약의 효력범위도 매우 낮기 때문에 (14.8), (〈그림 5-6〉 참고).

□ 상병수당은 일을 하던 사람이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임.

○ 유급병가나 질병휴직이 사용자 책임에 기초한 보호수단임. 이를 규제를 통해서 지원하는 국가도 있으며, 스위스와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사례임.

○ 상병수당은 국가가 조세든 사회보험이든 공적 재정 수단을 통해 아픈 취업자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한 기여 이력이 있는 경우, 실업자도 상병수당의 대상자로 포괄함.

[그림 5-6] 복지국가 유형별 노동시장 현황 비교



자료: OECD Stat (2018~2019년 기준 최근 연도 자료 활용)

- 세계적으로 상병수당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재원 조달의 방식이나 수급 자격, 지급 방식 등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해왔음.
- 다수의 국가들이 사회보험 방식의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는데, 예컨대 조세에 의한 국립보건서비스(NHS) 체계를 가진 스웨덴에서도 상병수당은 사회보험 방식임.
- 조세 방식의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보편적 보장이 아니라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정액 수당을 지급함. 말하자면 보편적 제도가 기보다는 취약계층에게 한정되는 공공부조라 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노동자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급됨
- 별도의 공적 상병수당 없이 전액 기업 부담에 기초한 법정 유급병가 제도만으로 운영하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급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향이 있음
-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보험료 분담 기여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대부분 기여에 따른 소득 대체, 즉 정률제 방식으로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고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있음. 또한 적용 대상을

임금근로자만으로 하는지 자영업자까지 모두 포괄하는지, 급여의 제공 기간, 상병수당 지급개시까지의 대기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함. 제도화된 유급병가의 존재 여부나 상병 인증의 첫 단계인 보건의료 체계 특성에 따라서도 제도 설계가 달라짐

□ 이렇듯 국가마다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상병수당 제도 특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최저 기준’은 존재함.

○ 이를테면 1952년 채택된 ILO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C102)은 상병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 급여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음.

- 이 협약은 상병수당이 상병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소득 유보를 포함하는 근로 불능 상태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함.
- 협약 당시에는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남성노동자를 ‘표준 노동자’ 기준으로 삼아, 상병 이전 소득의 45% 이상을(최대 지급 기간은 최소 26주 이상) 지급해야 하며, 임금노동자 기준 50% 이상의 인구(경제활동인구 기준 20% 이상)를 포괄하는 것이 최저 기준이라고 제시함.

○ 이후 1969년 “요양급여와 상병수당 협약”(C130)은 이를 업데이트하여 임금근로자의 100%(경제활동인구의 75% 이상)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함. 또한 상병급여 지급 최대 기간의 최소 한도를 52주 이상으로 늘리고, 급여 수준은 이전 평균 임금의 60% 이상으로 하는 것을 ‘하위 기준’으로 정함

○ 같은 해 발표된 “요양급여와 상병수당 권고”(R134)는 상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전 기간 동안 이전 소득의 66.7% 이상을 지급하고, 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계층으로 적용 확대하도록 권고함

○ 이러한 ILO 협약과 권고는 상병급여의 최저선을 정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기준을 제공함

□ 코로나 19 유행 시기에 세계 각국은 기존의 상병수당 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함.

- 이를테면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베트남, 덴마크, 캐나다 등은 코로나 19 치료를 위한 격리나 검역 기간에 상병 급여를 지급함.
- 호주, 캐나다, 포르투갈 등은 기존의 대기기간을 폐지했으며, 독일, 아일랜드, 포르투갈, 싱가포르, 캐나다 등은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상병급여를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함 (김홍수와 이재훈, 2022).
- 한국은 기존에 공적 상병급여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코로나 19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함

나. 시범사업

-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됨 (보건복지부, 2022; 윤성원, 2022)
- 시범사업은 3단계에 걸쳐 시행되며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10억 원의 예산(국비)으로 진행됨.
-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운영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에 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이 진행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신청한 63개 시·군·구 중 6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며, 실무 집행은 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음
-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업자,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 사업장의 근로자임. 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의료인증’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구조임
- 시범사업은 포괄하는 요양 방법, 상병수당 지급 개시까지의 대기 기간, 최대 보장기간에 따라 세 가지 모형으로 구분됨.
 - 모형1과 모형2는 의료이용 형태에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며, 모형 3은 입원한 경우에 한정함.

- 모형3의 경우는 대기 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하고 (3일) 입원이 필요한 상대적으로 중증 상병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모형1과 모형2는 대기기간을 1주와 2주로 구분하고, 대기기간이 짧은 모형1의 경우 최대 90일까지, 대기기간이 2주인 모형2의 경우 최대 120일까지 보장함
- 세 가지 모형 모두에서 1일 급여액은 최저임금의 60%인 정액 43,960원으로 정해짐

〈표 5-8〉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요양 방법	제한 없음 (입원, 외래, 재택요양)	제한 없음 (입원, 외래, 재택요양)	입원한 경우에 한정
급여 기간	근로활동 불가 기간	근로활동 불가 기간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 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 보장일수	90일	120일	90일
사업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급여액수	일정액 43,960원 (최저임금의 60%)		

자료: 보건복지부 2022.08.03. 보도자료 기초로 재구성

○ 2022년 8월 2일까지 6개 지역에서 총 337건의 신청이 이루어져 심사가 진행 중임. 이 중 8월 2일 현재 지급 결정된 사례는 총 46명임

- 평균 지급 일수는 10.8일, 지급금액은 461,569원으로 보고되었으며, 연령 별로는 50대가 가장 많고(32.6%), 자영업자는 6.5%를 차지함
- 상병으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가장 흔하고 (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그 다음으로 나타남 (30.4%) (보건복지부, 2022)

○ 시범사업은 다양한 조건을 통해 정책 효과를 실험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본 제도 설계에 중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임금근로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취업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강점임

□ 하지만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이나 본 제도 설계 시 보완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음.

- 무엇보다 모형3의 경우 근로불능 기간의 소득보장이라는 상병수당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게다가 입원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제공자가 주도하는 한국 의료체계 안에서 과잉 의료를 촉발할 우려가 있음.
- 또한 모든 모형이 1969년 ILO 협약(C130)에서 정한 하위 기준의 급여 수준(이전 평균 임금의 60% 이상)과 최대 보장 기간(52주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임. 급여 수준이 최저 임금의 60%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계 보장 역할을 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함.

다. 시민사회의 의견

- 최홍조(2022)는 현재의 시범사업이 보편적 사회보호의 관점이 결여되었다고 지적.
 - 이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중재하는 정책들과 연결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비롯됨. 예컨대 질병으로 인한 해고나 실업 문제를 다루는 고용보험, 업무로 인한 상병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빈곤한 고령층의 소득보장 수단인 기초연금, 역시 취약노동계층인 장애인의 생계보장 수단인 장애인 연금 등과의 연계가 분명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함
 - 보장 기간이나 보장 수준 모두 ILO의 권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중요한 비판 대상이었음
 - 또한 사람 중심의 관점이 결여되었다는 점도 비중있게 지적되었음. 현재로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참여와 거버넌스가 불충분하며, 시범사업의 계획 - 수행 - 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최홍조, 2022)
- 김홍수와 이재훈(2022)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긴급복지 제도 등 사회 보장 제도들 사이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방식의 운영에서 분담 기여에서 초래되는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함

- 또한 아파도 쉴 수 있으려면 원래 소득에 상응하는 일정 수준의 보장이 필요하며, 근로 취약계층의 보호뿐 아니라 비(非)빈곤층으로의 하향이동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소득계층에 초점을 두고 급여 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함.
- 한편 특수고용, 프리랜서, 자영업자 같은 비임금 혹은 비정형 임금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관리나 소득 파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도 적용에서 누락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상병수당이 가장 필요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최소 가입 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 없이 전체 취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함.
-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제도가 연계되어 있어서, 상병수당 수급까지의 대기기간에는 사업자 부담의 유급병가를 통해 소득을 보전받는 데 비해 국내에서는 유급병가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노동자들에게 대기기간 동안 마땅한 보장 수단이 없음. 게다가 비임금 근로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불안정 노동자들은 유급병가를 제도화한다고 해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큼. 이런 점을 고려하여 유급병가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임금, 취약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유급병가 제도나 해고 금지 조항 없이 상병수당이 도입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고용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함(김홍수, 이재훈, 2022)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비슷한 지적을 하면서, 상병수당은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설계하되 반드시 국고 지원이 필요하며,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사용자에게 보험료 의무를 분담하고, 취약노동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함(이인문, 2022.9.21.)
-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유급병가를 법제화하고, 불이익처우와 해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현재 업무상 상병(산업재해)나 산전후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해고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으며 이에 준하는 법

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임 (<표 5-9>)

<표 5-9> 근로기준법 상 해고 제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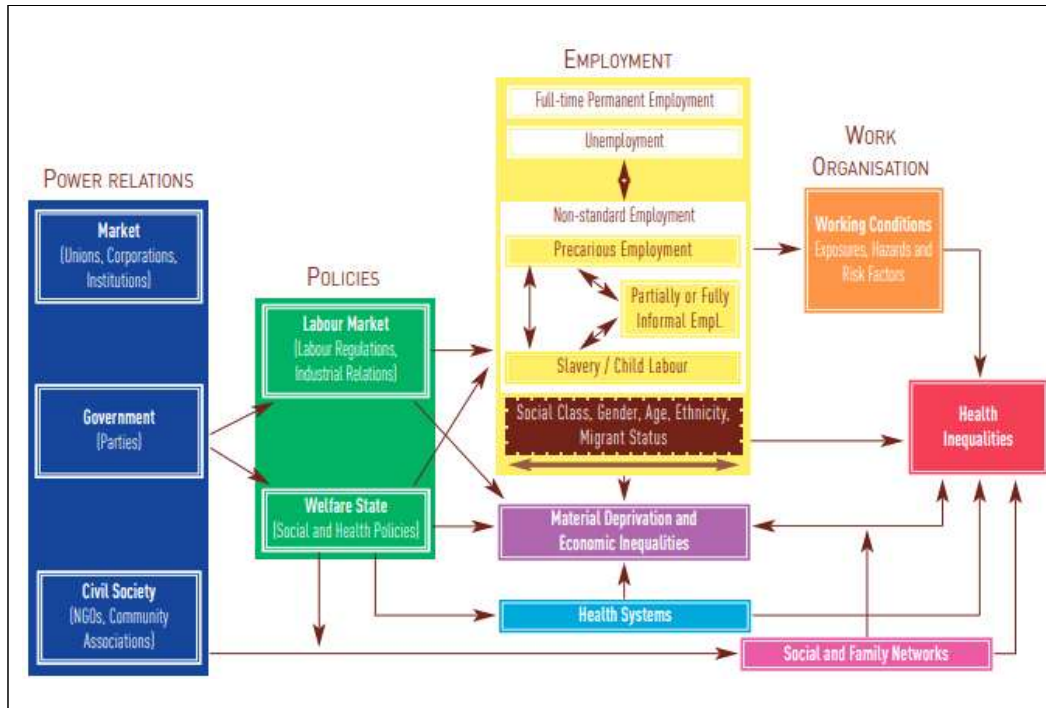
제23조(해고의 제한)
② 사용자는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합의 및 정책 제언

1. 합의

- 오랜 동안의 제도 검토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거쳐, 코로나 19 유행을 통해 정책 의제화가 급진전하면서 우리 사회에도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릅니다
- 이는 업무 외 상병에 대해 충분한 치료와 회복 기간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취업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근로 불능 기간의 소득 보장을 통해 빈곤화를 예방하고, 충분한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DoH)에 대한 직접적 개입 조치이자, 보편적 건강보장(UHC) 체계의 공백을 채우는 조치라 할 수 있음.
- 상병수당은 <그림 5-7>에서 노동시장 정책과 여타 사회정책 개입을 통해 고용조건의 불평등과 물질적 박탈,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음

[그림 5-7] 노동자 건강불평등의 설명 모형



출처: Benach & Mutaner (2013)

- 또한 기업과 사회 수준에서 프리젠테이션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을 예방하고, 장기적 의료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감염병 확산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건강 위협의 외부 효과를 차단한다는 중요한 효과가 존재함
- 특히 현재 시범사업의 설계가 임금근로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불안정 노동자를 모두 포괄한다는 점에서 건강형평성 증진과 사회 불평등 완화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일반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도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 효과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남 (강희정 외, 2021)

2. 정책 제언

-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나 비판은 매우 일관되며 공통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첫째,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제도의 공백이나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임. 이는 상병수당 제도의 설계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함

- 무엇보다 법정 유급병가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함.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든, 취업인구 사이의 불평등은 피할 수 없게 됨. 특히 상병수당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불안정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일수록 현재로서는 유급병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동계가 강조하듯, 노동자의 병가 사용을 빌미로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나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현재 병가 제도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고용불안이나 승진·인사에서의 불리함을 이유로 실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법적 보호조치가 수반되어야 함
- 건강충격으로 인해 초래되는 장·단기 소득 상실을 보장할 수 있는 여타의 사회보장 제도, 이를테면 산재보험, 긴급복지지원제도, 장애연금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특히 업무 상 상병을 보장하는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 사각지대가 존재할 뿐 아니라 적용 대상이라 해도 실제 수급에 이르기까지 많은 걸림돌이 있기에 현재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보장을 받거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하기도 함 (김명희 등, 2020a,c). 산재보험의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업무 외 상병 뿐 아니라 업무 상 상병에 대한 보장도 상병수당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존재함.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업주의 기여 회피와 부담전가라는 점에서 재원조달의 형평성과 연대성 원리를 저해하는 것이기도 함

□ 둘째, 보장의 보편성을 보장하고 소득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시범사업의 설계는 임금근로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보편성 원칙에 접근한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ILO의 하위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60% 수준의 정액 급여이며 최대 보장 기간도 120일

에 불과함.

- 이렇게 급여 수준이 낮은 경우,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용이 안정된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기업복지(유급병가/질병휴직)나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생계를 보장할 가능성이 커짐.
- 독일의 경우, 상병수당의 소득 대체율이 통상임금의 70% 수준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연간 수급 자격자의 약 5% 정도가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스웨덴은 근로능력소실이 100%인 경우 기준소득의 최대 80%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연간 상병수당 수급 자격자의 11%가 상병수당을 실제로 수급할 만큼 보편적 제도임. 하지만 미국 뉴욕주의 경우, 직전 8주간 주당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는데 1주당 \$170의 한도가 정해져 있음. 이는 뉴욕시 근로자 평균임금의 11.9%에 불과하며, 2021년 기준 뉴욕 주의 최저 시급은 \$15 수준임. 이런 상황에서는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 병가 기간을 늘려도 거의 실익이 없음 (강희정 등, 2021).
- 적용 인구에서의 보편성이 확보되더라도 실제 급여 수준이 낮아 저소득층만을 위한 제도로 주변화되는 경우, 기여 부담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정치적 지지가 쇠퇴함으로써 잔여적 제도로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함. 또한 건강충격으로 인한 취업인구의 빈곤화 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도 달성하기 어렵게 됨

○ 최소한 ILO 협약(C130)의 하위기준을 충족하는 급여 수준과 보장 기간을 확보해야 함

□ 셋째,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사람 중심성(people centeredness)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 국내 사회보장 제도는 복잡하게 분절되어 있고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환자 입장에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수용성 차이는 본인이 각종 자료를 구비하여 직접 청구하는지의 여부임.

○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수록 정보접근성이나 문해력이 낮은 계층은 복지제

도에 접근하기 어려움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상병수당 청구를 위한 서류 구비와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며 이의 제기 등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 넷째, 재원조달의 형평성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시범사업은 국비로 조달되며, 향후 본 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상병수당을 위한 추가 부담이 필요한데, 사회보험 형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에서 사업주·노동자의 기여 분담률, 자영업자의 기여율은 각기 다르고 정답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재정추계 같은 근거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분담 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 또한 어떤 방식의 분담이 이루어지든, 국가의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병수당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취약노동자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상병수당 제도 도입 과정에서 ‘노사정 협약’이 이루어졌고 ‘제도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건강보험과 관련한 거버넌스 기구로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존재함
- 하지만 상병수당의 구체적 제도 설계와 시범사업 기획 과정에서 직접 이해자인 불안정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됨. 상병수당의 의료인증 제도 설계와 지침 개발을 위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임상 학회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조화와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시민·노동자의 참여 부족은 더욱 두드러짐
- 거버넌스는 유연한 현장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이고, 정부와 기업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위험부담과 편익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게 다가 공적 이슈에 관심을 갖는 시민의 존재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자산이자 (Schoch-Spana 등, 2007)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원임

- 시범사업 수행 등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의견을 반영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도전에 맞서 한국은 2020년 7월과 2021년에 연이어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1.0과 2.0을 발표하면서 제도적 대응.
 - 전국민 고용보험 달성, 산재보험 가입대상 특고 직종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긴급복지 지원 규모 확대,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최대지급액 지원 대상 확대, 국민취업 지원제도 전면 도입 등을 제시.
 - 2020년 이후 여섯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실시.
- 보고서가 다루는 영역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서 각 영역별로 핵심이 되는 일부 제도에 초점을 맞춤.
 - ① 노동 및 고용 영역은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② 소득보장 영역은 공공부조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등, ③ 사회서비스 영역은 사회서비스원, 온종일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④ 보건 영역에서는 소득보장의 성격을 가진 상병수당에 주로 초점을 둬.
- 고용 영역에서는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노동 분야 취약성이 확인됨.
 - 특고·프리랜서 등 산재·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 소득 감소에 대응한 현금지원 정책 미흡
 - 임시·일용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정책 미흡/부재

□ 코로나 19 이후 제도 변화와 성과

○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당연가입), 자영자(임의가입)→예술인(20.12.10), 노무제공자(21.7.1~)로 단계별 확대,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확대 (20.7월 이후 9→14→15개 직종, 20.7월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22.7월 현재 전체 1,486만 명) 및 예술인, 노무제공자 가입자 수 증가(21.12월말 기준, 예술인 10.7만 명, 특고 57.7만 명),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22.6월말 기준 1,987만 명으로 확대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취업자의 실업 충격을 완화하는 1차 고용안전망의 역할을 강화,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지속 추진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성공패키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 제도 밖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하는 2차 고용안전망
 - 15~69세(청년은 18~34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용비용을 지원
- 21년 43.2만 명(1유형 34.9만 명) 지원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의 약 2배 수준(취성패 20년 22.7만 명 지원)으로 확대되었으나, 당초의 계획보다 구직활동 요건 및 재산기준이 엄격하여 지원 인원 제한적, 즉 2차 고용안전망 역할 제한적.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대응 가능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음.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

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 위한 임시적인 조치

-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25% 소득·매출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대상으로 50~200만원 지원
- 1차 149.7만명, 2차 61.3만명, 3차 68.2만명, 4차 71.5만명, 5차 52.7만명, 6차 75.4만명 지원, 1차 수급자 대상 분석 결과 월 소득 평균 69.1% 감소한 지원 대상에게 생계비 지원 역할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최초의 소득 지원이라는 정책적 의의, 위기 시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공백은 이와 같은 임시적인 조치로 보완

□ 소득 보장 영역에서는 공공부조, 사회수당, 자산형성지원제도 등을 다룸.

□ 공공부조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2019년 1월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정되기 시작하여, 이후 2021년 1월 생계급여에 한해 만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구(30세 초과)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 2021년 10월에는 그동안 제외되어 있던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단, 부양의무자 소득이 1억 이상, 재산 9억 이상은 적용)

○ 긴급복지지원제도

-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 조건(재산, 금융 조건 등)을 완화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
- 일시지원제도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한시생계지원 등을 위해 위기가구 지원 확대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일을 해도 가난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근로유인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으로 여겨지면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 현 정부 국정과제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중 하나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적정수준 상향 및 재산 요건 합리화”가 포함

□ 사회수당제도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 급여수준 조정
 - 기초연금 급여액 단계적 조정 : 월 30만원(노인소득수준별 조정)
 - 장애인연금 단계별 조정 : 월 30만원(기초보장수급자에서 기초급여로)
- 기초연금 향후 방향으로는 기초연금에 대한 성격에 대한 명확한 설정 필요: 연금 혹은 공공부조

○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 양육수당 : 코로나 19를 전후로 양육수당 개편을 추진하여 2022년 만0~1세 이하 영아수당 월 30만원(2025년 월 50만원), 만2~7세 이하 양육수당 월 10만원 개편.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대체
-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아동이 있는 가구 90%(만 0~6세 미만), 월 10만원으로 되어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 만 8세 미만까지 조정

□ 자산형성지원제도

○ 보건복지부는 빈곤층의 탈수급을 촉진하고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

- 희망키움통장 I (2010년), 내일키움통장(2013년), 희망키움통장Ⅱ(2014), 청년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2020년)가 도입
- 코로나 발생 이후 한국판 뉴딜 발표를 통해 청년대상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도입

○ 정부는 2022년부터 자산형성사업 개편을 추진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 I,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조정

□ 사회서비스는 돌봄의 사회화 진전에 따라 관련 제도 신설과 인프라 확충이 지속되어 왔으나, 코로나 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광범위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사회보장급여로서의 취약성을 보여주었음

○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은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인 노인요양원 및 장애인생활시설 등 집단생활시설 거주자들의 사망 위험을 높였고, 보편적 서비스인 보육, 방과후 돌봄,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 돌봄서비스 중단으로 돌봄의 재가족화라는 문제를 야기하였음

○ 현 사회서비스 제도는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시설격리 보호 그리고 사적 돌봄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하였으며, 돌봄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전달체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음

□ 코로나 19 이후 제도 변화와 성과

○ 사회서비스원

- 사회서비스원의 근거법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21.9.24.)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의 사업으로 재난으로 돌봄 공백 발생 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명시함
- 긴급틈새돌봄의 양호한 실적은 지역사회 돌봄 공백에 따른 관련 수요가 많음을 보여줌. 반면 당초 사회서비스원의 표준 모델인 종합재가센터와 어린이집 직접 운영 사업은 지체 또는 퇴보로 평가됨

○ 온종일 돌봄

- 온종일 돌봄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제도임.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2019. 4. 16. 시행)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도 확대하고자 함

- 코로나 19에 따라 초등 방과후 돌봄은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긴급돌봄과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아동양육한시지원)으로 대응되었고, 마을돌봄 확충은 당초 계획에 비해 미진한 실적을 보임
- 다함께돌봄센터는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518개소가 설치되었고(2021년 6월 말 기준), 지역아동센터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집단시설 운영 대응 지침 이외에 별다른 제도적 보완이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등급제 폐지 이후 이용자 확대('11년 3만 명 → '20년 약 9.1만 명)와 예산 확대('11년 1,928억 원 → '20년 약 1.3조 원)가 이루어짐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음. 노인장애인의 경우 2021년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되었고, 긴급활동지원의 요건에 감염병을 추가하는 등 보장성 강화가 반영됨
- 코로나 19에 따른 조치는 지속적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을 제시하여 긴급활동지원, 특별급여, 가족급여 한시지원 등이 이루어짐
- 장애인활동지원은 여전히 제도 개선사항이 충분치 않고, 발의된 다수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못함
- 서비스종합조사 이후 산정특례 보전, 발달장애인에게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가족돌봄허용, 지역별 격차에 따른 급여 차이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의 대상과 급여가 한정되어 발생하는 문제들은 제도 개선 보다는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보완하는 경향으로 고착화되고 있음

□ 함의 및 평가

○ 코로나 19 이후 사회서비스 제도 변화는 돌봄의 보장성 강화 방향에서 일정부

분 성과를 보임

- 방문형 돌봄 구입 그리고 개인이 선택한 시설에 각자 입소하는 사회서비스 체계에서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
- 사회서비스원, 온종일 돌봄, 장애인활동지원은 돌봄안전망 강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계 제도 개선에 있음을 보여 줌

□ 보건 영역에서는 국가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맥락 안에서, 코로나 19 유행이라는 특별한 도전이 가져온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 전개 과정과 그 함의를 살펴봄

-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취약 노동 계층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됨. 비정규직의 경우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18.7%로, 정규직(59.5%)보다 크게 낮았음(이재훈, 2020).
-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급속하게 확산됨. 시민사회 요구가 커지고, 국회에서도 상병 급여 도입을 위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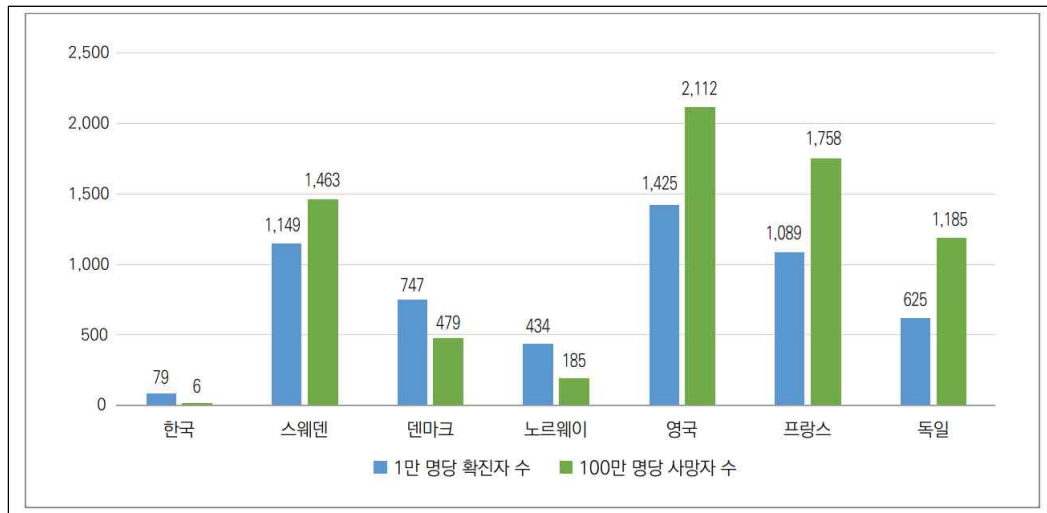
□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에 발표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준비 및 시범사업 추진’이 포함됨. 그에 따라 제도 설계를 위한 용역 연구 등 후속 조치가 마련되었고, 2022년 7월부터 6개 지자체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음

-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앞두고 시범사업은 3단계에 걸쳐 시행 예정이며 현재 1단계 사업이 약 11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임.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업자,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 사업장의 근로자가 그 대상이며, 요양형태와 급여기간, 대기기간과 최대 보장일수에 차이를 둔 세 가지 모형으로 구성됨. 급여액은 최저임금의 60%인 일정액 43,960원으로 동일함.
- 현재 시범사업의 설계가 임금근로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불안정 노동자를 모두 포괄한다는 점에서 건강 형평성 증진과 사회 불평등 완화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종합하면, 한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유럽과 같은 극단적인 봉쇄조치 없이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고, 민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완화하면서, 소득 분배 지표를 전반적으로 개선함. 약간의 과장을 보탠다면, ‘세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먼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보면, 지난 2021년 11월 기준 한국의 1만명당 확진자 수는 79명으로, 영국(1,425명), 독일(625명), 스웨덴(1,149명) 등 주요 국가들보다 적고, 한국의 사망자 수는 100만명 당 6명으로, 영국 (2,112명), 프랑스(1,758명), 스웨덴(1,463명)보다 적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6-1> 참고)

[그림 6-1]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 19 발생 현황



주: WHO 자료(<https://who.maps.arcgis.com/apps/dashboards/ead3c6475654481ca51c248d52ab9c61>)와 보건복지부 자료(<http://ncov.mohw.go.kr/en/>)에서 2021.11.9. 인출한 자료 종합
자료: 김기태 (2021). p. 27. 재인용.

○ 경제 성장률의 측면에서 보면, 2020년 전세계적으로 GDP는 3.4% 감소하고, G20 국가들 역시 GDP가 3.1% 감소한 상황에서, 한국은 2020년 GDP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0.9% 감소했음 (기획재정부, 2021). 2021년 대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는 그나마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세계 경제는 6.1%,

선진국 경제는 5.2%, 한국 경제는 4.1% 성장해서(기획재정부, 2021), 감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완충.

- 코로나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공적이전지출을 통해서 분배 상황도 개선시켰음. 지난 2020년 소득분배지표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개선세가 이뤄짐(기획재정부, 2021.12.16.). 특히, 1분위는 2019년 대비 근로, 사업, 공적이전소득이 모두 증가하면서 가계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음. 분배 지표를 보면, 2019~2020년 사이 지니계수는 0.339→0.331, 5분위 배율은 6.25→5.85, 상대적 빈곤율은 16.3→15.3으로 개선.
- 코로나 19 감염병 상황에서 한국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 및 사회보장 제도의 유연한 적용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의 이면에는 단기·일시 지원제도 적용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음.

-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주요 국가들의 위기 대응을 살펴보면, 유럽국가와 미국, 일본, 한국 등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
- 유럽 국가, 특히 북유럽 국가의 경우 기존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선정, 급여 기준 등을 조정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주로 활용함. 기존의 보편적 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함.
- Pereirinha and Pereira (2021) 역시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기존의 실업자 및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소득 보장 정책을 조정하면서 위기 상황에 그나마 효과적으로 대응한 반면, 남유럽 복지국가들은 위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평가.
- 미국, 일본, 한국 등과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단기·일시적 처방을 사용했음(김태완 외, 2020). 이는 위기 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제도적 기반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부실함을 방증함.
- 한국 복지국가가 앞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상황에 보다 안정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정책 제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이는 앞선 2~5장에서 제시된 내

용들을 정리한 것임.

제2절 정책 제언

1. 고용·노동 분야

-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나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향후 국세청-근로복지공단 소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실행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하는 과제가 남아있음.
 - 둘째, 자영업자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 있음. 현재 2025년까지 자영업자를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함. 1인 자영자,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다양한 자영업자의 특성 파악 및 자영업자의 휴폐업, 소득감소 등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위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입 대상 확대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해야 함.
 - 셋째, 위기 시 적시 대응을 위한 고용유지정책의 지원요건 완화 및 확대, 고용보험 재정 운용의 유연성,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일시적인 특별조치 등 필요할 것임.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의 역할을 시작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구직촉진수당 현실화로 실질적인 실업부조 역할 할 수 있도록,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부양가족(특히 자녀)에 따라 정액의 추가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가족부양의 책임을 진 일차 소득자의 참여를 높일 필요(이병희, 2021)
 - 둘째, 장기적으로는 2차 고용안전망의 위기 대응력 제고 필요. 현재,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제도적인 대응력이 아쉬움이 있음. 고용 위기 동안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완화하거나 수급기간을 연장하고 회복기에 조정하는 방식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이병희, 2021)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제도로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
 -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이 자영업자를 포괄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 구직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이 일시적 경영위험 등으로 고용위기에 처한 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상황이 바람직함. 또한 위기 시에는 각 제도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필요(이병희 외, 2021). 이러한 전제 하에 발생하는 제도 공백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제도로 보완하도록 설계.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취업취약계층과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복지제도와의 연계성이 큼.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기준과 내용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일관성 및 상호보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이 실업 또는 불완전취업으로 소득이 낮을 때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할 수 있음.
 -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은 22년 1인 생계급여 지원액 58만원보다 낮고 가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실업부조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
 - 긴급복지제도의 경우 현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보호하는 대상과 같이 소득과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지원 대상의 실태와 특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 있음.

2. 소득 보장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장·단기 제언을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재산기준의 완화가 필요. 재산기준의 경우 기본재산액을 조정하는 것 이

외에 제도 개선이 크게 진행되지 못함. 재산기준에 적용되는 급지구분, 재산의 소득환산율, 자동차 기준 완화 등 여러 제도적 제약조건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 있음

- 둘째, 장기적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혹은 폐지가 요구됨. 생계, 주거 및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나,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되고 있음. 의료급여 역시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부담 증가라는 서로 상반된 지향점이 있으므로 서로 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빈곤층의 의료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
- 셋째, 장기적으로, 노인빈곤 및 근로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역할 분담에 대한 검토 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외부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논의 중.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이 개혁돼도 현세대 노인 빈곤문제는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 잔존함. 연금개혁 속에서 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 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인빈곤 축소에 어디까지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간 논의가 필요함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장·단기 제언을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단기 대응보다 중장기 대응 기조 유지를 통해 위기 가구 위기 극복 지원 필요. 위기 속에서 위기조건, 선정기준(재산 기준 등) 완화와 급여 수급 조건 등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가 있었음.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단기적 기준 완화보다는 좀 더 기준 완화 기간을 늘려 위기 가구가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의 지원 예산이 확보되면서 지원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담당할 핵심 및 지원인력이 부족하여 적시적기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음. 위기가구가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
- 셋째, 장기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위상 제고가 요구됨. 재산기준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기준중위소득 30%를 쉽게 초과한다는 점에서 이들 위기가구에게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최저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임. 하지만 현재 긴급복지지원제도 급여조건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기를 쉽게 벗어나지 못한 가구의 경우 언제든지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 급여조건의 조정이 필요

- 넷째, 장기적으로,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나가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이상에서 현금성 급여를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이 등장.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들 수 있음. 각각의 제도가 가진 급여조건은 다르지만, 지원대상 범주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차상위 혹은 차차상위로 명명되는 기준중위소득 30% 초과 개인 및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들에 대한 특성과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 필요시 제도간 연계, 역할 조정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근로장려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할 수 있음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장·단기 제언을 제시할 수 있음

- 먼저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근로장려금의 목적과 방향 설정을 명확히 하여 근로장려금이 평시에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같이 평시와 위기 상황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둘째, 근로장려금이 근로빈곤층 및 영세소상공인 대상 주요한 사회안전망제도라는 점에서 이들 제도와와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테면, 전국민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자활지원제도, 서울시 안심소득,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근로빈곤층 대상 지원제도 등과의 관계 설정이 과제로 남음.

3. 사회서비스 분야

□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함.

- 첫째,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원 사업 지원이 요구됨. 중앙사회서비스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표준화된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함. 지자체의 고유사무인 주민 돌봄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우선 사업을 법령에 부합하게 실시할 필요
 - 둘째,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추진이 필요함. 공공인프라 확충은 공공투자가 없는 이루어질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사회서비스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위탁 의무조항, 공공요양원을 비롯한 지자체 필수 사회서비스 시설 운영 조항, 지방자치단체 공공돌봄 인프라 설립에 국고지원 근거 조항 등을 고려해야 함
 - 셋째, 사회서비스원 필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함. 돌봄 정책에서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진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시도가 병행돼야 함. 일자리 처우개선은 사회서비스 종류별로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어야 하며, 이는 민간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적용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아동 방과 후 돌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함.
- 첫째, 온종일 돌봄 정착을 위한 마을돌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요구됨. 특히 지역아동센터 공공형 전환 모델 지원 확대가 필요함. 지역아동센터는 약 70%(2,904개소)가 개인 신고시설로서 규모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보편적 돌봄의 인프라로 기능하기 어려운 현실.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 취약아동 이용시설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 자산으로 적극 투자하는 전략 필요.
 - 둘째, 다함께돌봄센터는 민간위탁 방식의 적절성을 재고해야 함. 사회서비스 시설 운영은 복잡한 민-관 전달체계의 난제들을 가지고 있음. 다수의 돌봄서비스는 민간 사업자 중심의 공급구조와 수가 보상체제로 인하여 전달체계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비용통제 중심의 제도 설계는 낮은 수가에 따른 낮은 품질의 사회서비스를 고착화.
 - 셋째, 지자체 아동돌봄은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이 갖추어져야 함. 초등돌봄의 공적 이용율을 높이고 계층간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을 돌봄 시설들의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좋은 프로그램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에서 보편적 마을돌봄이 마련될 수 있음.

□ 장애인 활동 지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함.

-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의 보편적 수급권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활동지원 수급권은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활동이나, 아직 수급자 선정기준은 보편적 서비스로 보기 어려움. 신체적 ‘활동지원’ 이외의 자립생활 서비스 이용, 방문재활서비스 추가, 야간 및 주말 서비스 가산급여 확대, 가족 활동지원급여 허용, 본인부담금 삭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한 보편적 급여 이용의 요구들을 검토해야 함
- 둘째, 장애인돌봄의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요구됨. 장애인활동지원은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임.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은 지역사회통합돌봄 하에서 정책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장애인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지역 중심의 돌봄 연속성을 확보하는 모델 개발은 지속되어야 함

4. 보건의 상병수당 분야

□ 2025년 본 사업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함.

- 첫째,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제도의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함. 아울러, 상병수당 도입과 함께 노동자의 쉼 권리의 법적인 보장이 필요함. 이를테면, 법정 유급병가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함.
 - 노동자의 병가 사용을 빌미로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나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현재 병가 제도가 있는 사업장에

서도 고용불안이나 승진·인사에서의 불리함을 이유로 실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법적 보호조치가 수반되어야 함

- 건강충격으로 인해 초래되는 장·단기 소득 상실을 보장할 수 있는 여타의 사회보장 제도, 이를테면 산재보험, 긴급복지지원제도, 장애연금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둘째, 보장의 보편성을 보장하고 소득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현재 시범사업의 설계는 임금근로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보편성 원칙에 접근한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ILO의 하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60% 수준의 정액 급여이며 최대 보장 기간도 120일로 짧음. 최소한 ILO 협약(C130)의 하위기준을 충족하는 급여 수준과 보장 기간을 확보해야 함.
- 셋째,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사람 중심성(people centeredness)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 국내 사회보장 제도는 복잡하게 분절되어 있고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상병수당 청구를 위한 서류 구비와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며 이의 제기 등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
- 넷째, 재원조달의 형평성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함. 재정추계 같은 근거 확보만 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분담 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상병수당 제도 도입 과정에서 ‘노사정 협약’이 이루어졌고 ‘제도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건강보험과 관련한 거버넌스 기구로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존재함. 하지만 상병수당의 구체적 제도 설계와 시범사업 기획 과정에서 직접 수혜자인 불안정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됨. 시범사업 수행 등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의견을 반영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강희정, 이현주, 강신욱, 신영석, 노대명, 이병희,...성민지. (2021).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희정, 김수진, 이현주, 김현경, 고제이, 신기철,...이은주. (2019).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격차의 진단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7.25.).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 명 돌파 임박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1.5.). 시행 2년째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확실히 안착시키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5.2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9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6.29.). 7월1일부터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도 산재보상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8.14.).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8.14~9.24)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 261호.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2022.6.7.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9.1.).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5.4만명에 지급 완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11.3.).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 분석 결과
- 고용노동부(2022.7.15.).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6.26.). 한국형 실업부조 고도화를 위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 계획 수립-지원대상 확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및 소득보장 여건 개선 등 추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별첨(2022.6.26.).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주요 추진방향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2017.03). 상병급여 제도 검토
- 교육부 보도자료(2020. 8.27). 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 방안 마련
- 국가통계포털. (2020년). 입원환자의 입원 유형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920023_A006&vw_cd=MT_ZTITLE&list_id=D1_004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2. 07.24 인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장기요양 수입/지출예산
<https://www.nhis.or.kr/announce/wbhaec11607m01.do>에서 2022. 08.02 인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관계부처 합동(202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관계부처 합동(2020.12.23.).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 관계부처합동(2018).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 관계부처합동(2019.2.19.).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 관계부처합동(2020.11.27.). 코로나 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
- 관계부처합동. (2020).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안)
- 관계부처합동. (2021).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 글로벌금융위기 극복백서. (2011).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1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21.12.17.)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10.11.). 2022년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 발표
- 김기태, 이승윤. (2018). 한국 공적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도 비교연구 및 정책제언. 사회복지정책, 45(1), 148-177
- 김기태. (2021).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응하는 스웨덴 상병수당 정책 내용 및 함의.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겨울), 26-37
- 김명희, 김성이, 김정우 역음. (2020). 인권중심 코로나 19 시민백서: 코로나 19 시대 시민의 삶, 우리의 권리. (사)시민건강연구소
- 김명희, 김세연, 이상윤, 정우준. (2020).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 아름다운재단노동건강연대
- 김명희, 박지원, 변수지, 안현경, 정우준, 정해명. (2020). 산재보험의 문밖에 서있는 사람들: 포용적 산재보험을 위한 과제. 아름다운재단노동건강연대
- 김성아, 한겨레, 이다미, 함선유, 여유진, 김미곤,...김남희. (2021). 긴급복지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희, 이민경, 오욱찬, 오다은, 황주희, 오미애,...이선우. (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진, 정연, 김기태, 김수정, 박금령, 오수진. (2018). 질병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종. (2012).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 방향. 보건사회연구. 32(2), 41-76
- 김은정, 오신휘, 이희현, 이해숙. (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체계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전승. (2022). 코로나 19와 장애인 인권, 인권 모니터링 결과. 코로나 19와 장애인인권. 국가인권위원회
- 김정근, 김두례. (2021).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 19 대응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표적집단면접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38(3), 381~408
- 김태완, 박세경, 강은나, 김문길, 변수정, 김기태,...김보미. (2020). 코로나 19 이하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 김미곤, 노대명, 김문길, 임완섭, 조성은,...강예은.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 류진아, 이주미, 박세경, 김문길, 정은희,...한창근. (2021). 사회안전망 강화정책과제 발굴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형용 외. (2021). 종합재가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보건복지부
- 김홍수, 이재훈. (2022). 상병수당,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주요 현황과 쟁점. 아프면 실 권리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2022.09.20.)
- 문성웅, 최은희, 김승희, 이장욱. (2015). 주요국의 상병수당제도 현황 고찰 및 시사점 연구.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06.22.)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 보건복지부. (2022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통계
- 보건복지부. (2022b).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자립지원: 자산형성지원)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204&PAGE=4&topTitle=
- 보건복지부. (2022).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 (2022).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2022). 시설 입소자 현황
<https://www.w4c.go.kr/intro/introFcltInmtSttus.do>. 2022년 8월 7일 추출
- 보건복지부. (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
- 보건복지부.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3. 30). 보도자료. 요양병원·시설 확진자 치료 및 인력 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4. 20). 보도자료.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발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3. 27). 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8. 3).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 손창우, 윤민석, 김성아, 조윤정. (2020).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코로나 19 감염 대응실태와 과제. 서울연구원
- 아동권리보장원. (2021).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 다함께돌봄
- 유병선, 정요한, 정규형. (2021). 감염병 발생과 노인복지시설의 대응 현황 및 과제, 장기요양연구, 9(1). 87~113
- 윤성원. (2022).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의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1980호(국회입법조사처 2022.08.17.)
- 윤자영, 김현경. (2021). 코로나 19와 고용유지정책.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은기수. (2020). 코로나 19 팬데믹과 자녀 돌봄의 변화. 월간노동리뷰, 2020.11.
- 이동선. (2021). 코로나 19 이후 일·돌봄 변화와 돌봄 정책 개선 과제. KWDI Brief. 2021. 6.
- 이병희.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차 고용안전망 역할 강화. 월간노동리뷰, 2021. 12.
- 이병희, 김근주, 이승호, 성재민, 김혜원, 오민홍. (2021), 제1차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국민취업지원제도) 수립 연구, 고용노동부
- 이병희, 김재진, 성재민, 오상봉.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보험 사각지대 분석 및 향후 과제.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 이승윤, 김기태. (2017). 아픈 노동자는 왜 가난해지는가?. 한국사회정책, 24(4), 113-150
- 이인문. (2022.9.21.). “대한민국만 아파도 쉴 권리 없어”. 건치.
<https://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908>에서
 2022.11.7. 인출
- 이재훈. (2020). 외국의 유급병가, 상병수당 현황과 한국의 도입방향: 아프면 충분히 쉬고, 회복할 권리 보장. 사회공공연구원·민주노동연구원
- 이태수, 남기철, 김형용. (2019).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공공성 강화와 분권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56(3), 63-92
- 임승지, 김나영, 이정면, 조정완, 김용빈, 김윤희. (2019). 상병수당제도 도입연구 I: 기초연구. 건강보험연구원
-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
<https://hope.welfareinfo.or.kr/bsns/bsnsIntrcnAcc.do#none>
- 장진희. (2021).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공백과 여성노동위기 대응과제, 노동 N 이슈, 제8호
- 장혜영, 최정숙. (2022).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33(2), 3~32
- 조성은, 김태완, 강희정, 박세경, 김동진, 김성아,...정성미. (2022). 더 나은 대한민국: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근배. (2020). 국가의 거리: 코로나 19와 장애인의 삶, 그 현황과 대책. 비판사회정책, 68. 173-207
- 정형준. (2017).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월간 복지동향, 222, 10-17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2021. 2.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202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https://ncov.kdca.go.kr/>에서 2022.11.5. 인출
- 최용길, 김유정. (2019).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25. 173-193
- 최윤경. (2021). 코로나 19와 아동 돌봄. 한국의 사회동향, 2021. 통계개발원
- 최은숙, 양선희, 하영미. (2020). 공기매개 감염병에 관한 사업장 대응 현황 및 개선 방안. 산업 안전보건연구원
- 최홍조. (2022). 아프면 쉴 권리, 현장의 요구와 정책의 간극.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2022.09.20.)
- 최혜영 의원실. (2021).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사유조사(202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자산형성지원)
<https://www.kdissw.or.kr/menu.es?mid=a10208010000>
- 한국장총. (202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 월간한국장총 406.
- 한국행정연구원. (2022). 더 나은 대한민국: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전략, 일상회복분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황명재, 황인섭, 김소현, 김희경, 박충민, 문경란,...손태중. (2022). 오미크론 이후 경북권 요양병원·시설 내 코로나 19 발생현황 및 상황평가.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 대응과
- 허민수. (2022). 코로나 19 시기의 가족 돌봄: 팬데믹 상황에서의 일·생활 균형의 조건과 과제. NARS 현안분석. 2022년 3월호
- Cook, S., & Ulriksen, M. S. (2021). Social policy responses to COVID-19: New issues, old solutions?. *Global Social Policy*, 21(3), 381-395
- Benach J, & Muntaner C. (2013). *Employment, work and health inequalities: A global perspective*. Icaria editorial
- Farnsworth, K, Irving, Z. (2011). *Social Policy in Challenging Times: Economic Crisis and Systems*. Bristol: Policy Press

- ILO 협약 리스트. <https://www.ilo.org/dyn/normlex>에서 2022.08.15. 인출
- ILO. (2021).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Trends 2021, 1, 112
- ILO. (2022). Social Protection Monitor. <https://www.social-protection.org/gimi/ShowWiki.action?id=3426>에서 2022.3.24. 인출
- ISS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국제사회보장협회), <https://www1.issa.int/country-profiles/programmes-by-branch>에서 2022.08.15. 인출
- Kigozi J, Jowett S, Lewis M, Barton P, Coast C. (2017). The Estimation and Inclusion of Presenteeism Costs in Applied Economic Evaluation: A Systematic Review, *Value Health*. 2017, 20(3), 496-506
- OECD (2020) Spending on Long term care
<https://www.oecd.org/health/health-systems>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Public Expenditure on Family. 2022. 9. 21. 인출
- Pereirinha, J. A. C., & Pereira, E. (2021). Social resilience and welfare systems under COVID-19: A European comparative perspective. *Global Social Policy*, 21(3), 569-594
- Roubini, N. (2020.4.29.). Ten reasons why a 'Greater Depression' for the 2020s is inevitable.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0/apr/29/ten-reasons-why-greater-depression-for-the-2020s-is-inevitable-covid>에서 2022.3.20. 인출
- Schoch-Spana, M., Franco, C., Nuzzo, J. B., & Usenza, C. (2007). Community engagement: leadership tool for catastrophic health events. *Biosecurity and Bioterrorism*, 5(1), 8-25
- Tooze, A. (2021). *Shutdown: How Covid Shook the World's Economy*. Penguin.
- WHO. (2020). WHO Coronavirus (COVID-19) Dashboard <https://covid19.who.int/?msclkid=6333be37ab3e11ecbd4708d34097f745>



[부록] 영역별 제도 변화 리스트

〈부표 1〉 소득 영역 법 개정(2020년 1월~2022년 8월)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및 교육 가능 이런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음. 보장기관은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 등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가능. 신설 제18조의9(자활의교육등)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교육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위탁운영가능, 비용지원가능. 신설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통합 정보전산망의구축·운영등) 통합정보전산망구축운영 신설	2022.1.28	자활기업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 (관보)	·관보 법률 제 1832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제3조 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본다.	2022.6.22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관보)	·관보 법률 제 1860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기준연금액 적용기간을 해당 조정연도 4월에서 다음연도 3월에서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로 변경	2020.1.21.	다른 공적연금은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를 1월로 하는데 비해, 기초연금은 4월로 반영해서 급여의 실질적 보전을 하는 데 불리함.	·관보 (법률제 16868호(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2020.1.21.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노인빈곤 수준	·관보 (법률제 16868호(기초연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특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초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도를 100분의40이하로 변경, 소득하위 20%만 지급하던 최대지급액을 소득하위 40%에게도 적용		이 높은 점을 고려	금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3항 신설(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한법인·단체·시설·기관등은 기초연금수급희망자의요청에 따라 기초연금지급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2.1.1	기초연금제도를 잘 모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신청이 용이하도록	·관보 (법률 제 18213호(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개정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내용 서면으로 그 이유를 수급권자에게 밝힐 수 있도록.	2022.1.1.	신청자의 자산 조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제도 개선	·관보 (법률 제 18213호(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긴급복지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긴급지원사업 대상자들에게 홍보 실시 신설.	2022.1.1.	위기가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가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 복지관 등에서도 긴급지원을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임.	·관보 (법률 제 18327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긴급복지지원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 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행하게 할 수 있다 내용 추가. 장례비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제17조의2(상속인없는재산의처리) 상속인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2021.6.30.	노숙인 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은 민법상 절차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나, 민법 절차 비효율적.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 재산은 처리절차 간소화.	·관보 (법률 제 17775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처리. 재산사회복지사업법금액 이하인 경우 잔여재산목록작성 하여 보고 권리주장 및 채권변제 등 내용 신설, 아무도 재산을 원하는 사람 없을 시 지자체에 귀속 내용 신설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제6조(노후준비지원사업) 제8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10조의2(노후준비사업수행평가)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제공자) 제14조(정보보호) 제15조(노후준비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 제16조(연금보험등정보의제공등) 제18조(보고·검사등) 제19조(시정명령) 제20조(지정취소등) 법률수행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 에서 시,도지사로 변경(시,도지사가 5년마다 노후준비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수립하여야 한다 로개정) 그 외 노후준비지원사업 내용 추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설, 노후준비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 신설	2022.6.22.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를 시,도지사가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면서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센터 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지정, 운영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준비전달체계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	·관보 (법률 제 18611호 노후준비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노후준비지원법)
사회보장 급여법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주체에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의장 추가 제11조(정보공유등의협조요청) 보장기관의 위기가구발굴을 위한 협조기관에 공공주택사업자, 공동주택관리주체 등을 추가	2020.4.7.	위기가구 발굴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관보)	·관보 법률 제 1720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 급여법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통신요금,임대료,관리비 연체정보를 추가	2020.4.7.	위기가구 발굴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관보)	·관보 법률 제 1720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 급여법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보장기관의장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2020.4.7.	위기가구 발굴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관보)	·관보 법률 제 1720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 급여법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또한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제7조(수급자격의조사) 협조요청 시 '단체'에서 단체, 법인, 시설 등으로 변경 제9조(사회보장급여제공의결정)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재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	사회보장급여 절차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종국적으로는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 (관보)	·관보 법률 제 1778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 급여법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정보제공에서 제공의방법, 절차, 기준으로 구체화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변경·중지) 중지단서신설, 소득·재산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1.1.	위기가구의 발굴 및 급여조사에 있어서 가능한 정보의 위를 확대 (관보)	·관보 법률 제 1778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 급여법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2022.1.1.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관보 법률 제 17781호 사회보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장이 사회보장급여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 내용 신설 제2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의사 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신설		위하여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근거를 신설(관보)	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보장기관의 장에서 보장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제공으로 변경 교육감 정보제공 내용 신설	2022.1.28.	학대 위기아동의 재원 학교 관련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 등 보건복지부, 지자체, 학교 간 정보 공유와 같은 협업체계가 미흡하여 학교 등 교육 당국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공받지 못하므로 교사가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없음. 이에 학교 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변경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관보)	·관보 법률 제 18330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전달체계와재정에서아래와같이 구체화 전달체계에미치는영향,재원의규모·조달방안을포함한재정에미치는영향및지역별특성,지역복지활성화	2020.7.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지역별 특성,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검토, 협의 기준에 추가 (관보)	·관보 법률 제 17202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사회보장행정데이터 내용 신설 제42조(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제공요청) 위원회는 사회보장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행정데이터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제43조(사회보장행정데이터분석센터)	2021.12.9.	사회보장위원회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 및 코로나 19의 유행과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관보 법률 제 18215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기본법)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사회보장행정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 내용 신설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체계의 뒷받침 필요,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관련행정데이터를 제공받아 주요 시책의 심의,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분석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보장정책기획,평가,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원기능을강화하기 위함(관보)	

〈부표 2〉 소득 영역 시행령 개정 (2020년 1월~2022년 8월)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신설	2021.7.1.	복지급여 수급 자격의 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수급자에 비하여 완화된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령 제 3183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지원의 대상 등)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여건, 소득·재산 및 취업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2.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100이하인 사람	2022.6.22.	저소득 청년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 대해서도 자산형성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 3271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5(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법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7.1.	국가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관보)	·대통령령 제 3081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7조(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 배우자의 전체 국민연금가입기간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2로 나눈 금액에서 금액의 50퍼센트(같은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로 변경	2022.1.1.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반영하여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행사로 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 분할 비율만 금액의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개선	·대통령령 제 32299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와	제3조(직무)	2020.9.12.	방역, 검역 등 감염병	·대통령령 제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직무 내용 변경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보육을포함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보건복지부 하부 조직 변경 운영지원과, 인사과,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인구정책실, 연금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및보건산업정책국을 둔다. 인원변경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및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후략)		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정원을 조정 (관보)	3101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 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2(복수차관의 운영) 보건복지부에제 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제2차관 순으로 그직무를 대행 신설 제5조의2(감사관) 감사관내용신설(차관보좌)	2020.9.12.	보건의료분야 정책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 (관보)	·대통령령 제 3101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 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한시정원) 공공의료인력확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조직과 정원에관한통칙」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9월1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보건의료연구개발 총괄·조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조직과 정원에 관한통칙」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9월11일까지 별표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신설	2020.9.12.	방역,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조정 (관보)	·대통령령 제 3101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 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보건의료정책실) 4의4.간호관련정책의수립·조정에관한사항신설 제41조(보건복지부에두는공무원의정원 80명에서 81명으로 증원	2021.5.11.	보건복지부의 간호 관련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 (관	·대통령령 제 31676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 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보)	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의2(의료보장심의관 등) 심의관업무 6.「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 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7.「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사 항 신설 제45조(한시정원) 건강보험분쟁조정지원업무를 추 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조직 과정원에관한통칙」제25조제1항 에 따라 2023년7월6일까지 별 표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 지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1.7.6.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 회 사무국에 건강보험 분쟁 조정 지원 업무 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을 한 시적으로 증원하며, 보 건복지부에 한시조직 으로 설치한 의료보장 관리과의 분장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관보)	·대통령령 제 31867호 보건 복지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일 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 터 보건복지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사회보장급 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협조기관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보 장기관의장이위기상황에처해있 다고판단한사람에관한다음각호 의정보를말한다. 1.「주민등록법」제30조제1항에 따른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지방세기본법」에따른지방세 의체납정보 신설	2020.10.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 굴에 관한 법률이 개 정됨에 따라 보장기관 의 장이 활용할 수 있 는 행정정보를 위기상 황에 처해 있다고 판 단되는 사람의 주민등 록전산정보자료 등으 로 정함 (관보)	·대통령령 제 31098호 사회 보장급여의 이 용 제공 및 수급 권자 발굴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 터 사회보장급 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 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 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연체정보신설및법률변경 연체정보에 3.정보의 제공을 요 청한 날부터 최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통신요금이 연체된 경 우 추가	2020.10.8.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통신요금을 연체한 경 우 해당 연체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 공받아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보)	·대통령령 제 31098호 사회 보장급여의 이 용 제공 및 수급 권자 발굴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 터 사회보장급 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 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 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맞춤형급여안내를 받으려는 사 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신청및증지세부 내용 신설	2022.1.1.	복지사각지대에서 어 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의 이용, 제공 및 수급 권자 발굴에 관한 법 률이 개정됨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및 중지 절차, 사	·대통령령 제 31962호 사회 보장급여의 이 용 제공 및 수급 권자 발굴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 터 사회보장급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 기관 및 업무의 범위,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정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관보)	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법률변동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업무세부내용 신설	2022.1.1.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및 중지 절차,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 기관 및 업무의 범위,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정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관보)	·대통령령 제 31962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업무의 위탁) 2의2. 제22조의 2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수급가능성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조사 및 처리 신설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및 신설	2022.1.1.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정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관보)	·대통령령 제 31962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법률변경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신설 1.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복지법」 제22조의 2제1항에 따른 학생 등의 성명·생년월일·	2022.1.28.	교육감이 학교의 장 등에게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 등의 성명, 생년월일 등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	·대통령령 제 32363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성별·주소 2.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정보			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매년 4월 30일에서 지자체장의 경우 6월30일로 변경	2021.12.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협의요청서 제출 기한을 조정 (관보)	·대통령령 제 32188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0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세부 내용 신설	2021.12.9.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해 (관보)	·대통령령 제 32188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세대의 구성원을 양육·간병하는 사람 등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다.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신설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 내용 신설 제6조의2(수급권자의추천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	2023.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해당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 구성원의 연령 또는 근로능력 등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해당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질환을 가진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1종 수급권자로 하고,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2종 수급권자로 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 (관보)	·대통령령 제 32865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급여법 시행령

〈부표 3〉 고용 영역 법 개정(2020년 1월~2022년 8월)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고용정책 기본법	법 제10조4의 2 특별고용지원 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계에 관한 사항 신설, 법 제32조2항~6 신설. (업종별 지역별 고용조종의 지원 등) 급 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종대는 업 동에 대한 특별고용지원내용 신 설	2022.2.18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 로 특별한 지원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지 역 또는 업종에 대한 고용위기 지역 및 특 별고용지원업종의 지 정 및 지정 해제 근거 를 명확히 하여 업종 에 대한 고용조정 지 원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 (관보)	·국가법령정보센 터(고용정책 기 본법 법률제 18423호)
고용보험법	제 77조의 2 (신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범위 제77조의3(신설) 예술인의 피보 험 자격의 신고특례범위 및 이 중 취득 제77조의5(신설) 예술인인 피보 험자의 구직급여수급 관련 정당 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소득 감소의 기준,예술인인 피보험자 의 구직급여기초일액의 상한액 및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산 정기준 마련 제116조 예술인의 출산전후휴 급여 등 지급기준 등 제118조 권한의위임 등	2020.12.10	「고용보험법」(법률 제 17429호, '20.6.9 공 포, '20.12.10. 시행예 정)개정에 따라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 용하고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휴가등을 보 장함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적용제외 소득기준, 실업급여 수 급을 위한 피보험단위 기간 합산 방식 등 대 통령령으로 위임한 세 부 적용 기준을 마련 하고자 함. (관보)	·관보 「고용보험 법」(법률 제 17429호)
고용보험법	제2조 (정의) 피보험자를「고용보험및산업재 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 한법률」(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 수법”이라한다)제5조제1항·제 2항,제6조제1항,제8조제1항· 제2항,제48조의2제1항및제48 조의3제1항에따라보험에가입되 거나가입된것으로보는근로자,예 술인또는노무제공자'로정의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피보험 자에대한적용)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 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하는 계약(이하“노무제공계약”이라한 다)을 체결한 사람을 적용대상	2021.07.01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 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 어 있는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 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 여 등에 관한 규정을 노무제공자에게도 적 용하고,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 사산 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 산전후휴가 등을 지급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	·관보 「고용보험 법」(법률 제 19912호)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p>으로함</p> <p>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대한특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 보험의관리 및 신고의무를 해야함</p>		(법률 제17859호, 2021.1.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및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근로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사항 등을 개선하며,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326호)이 '20. 5. 26. 공포, '20. 8. 28 시행됨에 따라 정비된 법률용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관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p>가. 예술인에 대한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정산, 보수충액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의3,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p> <p>나. 예술인의보수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금액으로 정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술인고용보험특례를 규정함(제48조의2 신설), 제49조의6, 제50조 과태료 벌금 내용 변경.</p>	2020.12.10	현재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고용보험법」에는 이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예술인도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관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일정기간 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한 경우 신고일 이전 산재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	2021.07.0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과거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관보 법률제 17858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부를 면제하도록 함(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 ‘나’의 내용이 길어서 생략함		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한 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한 경우 신고일 이전 보험료 징수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신속한 보험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관보)	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신설 가.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에 수급인·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재해가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재해 등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금액을 재해발생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사용자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금액에 포함하도록 함. ※ ‘나, 다’의 내용이 길어서 생략함	2021.01.01	현행 산재보험료 산정방식인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납부한 보험료와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은 하수급·파견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은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어, 산재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업무는 도급·파견을 활용하는 소위 “위험의 외주화”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도급·사용사업장이 도급·파견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산업재해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급·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사용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관보)	·관보 법률제18036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밖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	2022.01.01	현재 고용-산재보험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 변동	·관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2호)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p>다.</p> <p>1.제5조제1항또는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로서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제 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p> <p>2.제3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 3회 이상 체납한 경우</p>		<p>및 산업구조변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이나 지역에 대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해당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p> <p>그런데,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이 완료되면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의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해당 사업주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p> <p>이에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유예된 보험료가 그 기한이 만료되어 체납이 3회 이상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관보)</p>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p>제27조제4항및제5항 신설</p> <p>가.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미납된 징수금의 독촉을 전자문서 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p> <p>나.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보험사무업무가 폐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일정 기간동안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도록 함(제33조).</p> <p>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를 곱하여산정 함(제48조의6제2항신설).</p> <p>라.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p>	2023.07.01	<p>「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험행정이 이루어지고, 실제 보수에 근거하여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관보)</p>	·관보 법률제 18919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p>용제의 신청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소득파악이 곤란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휴업 등신고 제도를 신설함(제48조의6제4항 신설).</p> <p>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되,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도록 함(제48조의6제6항신설).</p> <p>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플랫폼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등 신고,산재보험료의 원천공제,산재보험료원천공제·납부를 위한 전용계좌개설 등 보험행정 관련 의무를 플랫폼운영자에게 부과함(제48조의7신설)</p>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요건) 제1항제3호에는 해당하나 같은 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 >>제1항제3호에 해당 으로 변경	2021.07.27	<p>현행법은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p> <p>따라서 최근 일정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는 청년은 노동 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가구 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취업한 사실과 무관하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가구단위의</p>	·관보 법률제 18368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구직활동 기간 중 소득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관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p>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제4항제3호 신설).</p> <p>나.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감염병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에 대한 휴업·휴교·휴원 명령 또는 처분으로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제5항 신설).</p> <p>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37조제2항제6호).</p> <p>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9조제2항제8호).</p>	2020.09.08	<p>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 시 가족이 감염병 확진환자등으로 분류되거나 자녀가 소속된 학교·유치원 등의 휴업·휴교·휴원 또는 자녀의 등교·등원 중지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p> <p>이에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돌봄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관보)</p>	·관보 법률제 17489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서 >>2회로 변경	2020.12.08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부모의 아동 돌봄 및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로는 실질적	·관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 17602호)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움. 이에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유연한 활용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관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p>가. 고용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집·채용 시 신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함(제7조).</p> <p>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9조 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p> <p>다.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부터 제29조의7까지 신설 등).</p>	2022.05.19	<p>현행법은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차별에 대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 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하여 별책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에서 더 나아가, 해당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p> <p>이법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고용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집·채용 시 신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p>	·관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178호)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p>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제4조제2항제1호의2 신설).</p> <p>나.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제8조의2제1항·제2항 및 제8조의4제1항·제2항)</p> <p>다.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의 운영주체를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공공부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제16조).</p> <p>라. 한시법인 현행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삭제).</p> <p>마.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제5조)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p>	2021.12.21	<p>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퍼센트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p> <p>또한 현행법은 한시법으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여, 청년실업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연속성·일관성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영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기간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p> <p>그밖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을 확대하고,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관보)</p>	· 관 보 법 률 제 18628호(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p>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명칭 변경, 그에 따른 전면 용어 개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의2</p> <p>제10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p>	2022.02.18	<p>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동</p>	·관보 법률제 18425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p>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하여 해당 훈련시설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4,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p> <p>가. 법의 목적·대상·사업 등의 확대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제명,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p> <p>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제2조).</p> <p>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p>		<p>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p> <p>그러나 현재 전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수요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체계적인 평생직업능력개발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p> <p>그밖에 다수가 한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상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관보)</p>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제1항 중 “시·도교육감”을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취	2021.06.24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취업 정보도 부족해, 정부·학교의 체계적 지원이	·관보 법률제 17957호(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p>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시·도교육감이 설치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으로 한다.</p> <p>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7조의4 및 제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7조의4(취업전담교사 지정·운영) ①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p> <p>②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지원활동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p> <p>③취업전담교사 배치기준,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제7조의5(취업지원인력 배치·운영) ①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지원, 취업역량강화, 실습 및 취업처 발굴 등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인력을 채용·배치할 수 있다.</p> <p>②취업지원인력의 채용, 배치기준 등 취업지원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없으면 취업 및 사회 정착에 큰 어려움이 있음.</p> <p>고졸 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여건 악화,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안전사고 이후 규정 강화에 따른 현장실습기업 감소로 직업계 고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임.</p> <p>그 결과, 2019년 기준, 직업계 고학생 중 59퍼센트가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취업의 마중물인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약 29퍼센트(2017년은 약 42퍼센트) 수준에 불과하고, 코로나 19 여파로 고졸 채용 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p> <p>현재 정부는 안전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연결하기 위해 직업계고에 취업 전담교사를 선정하고 취업지원관을 배치하며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2020년 6월)하는 등 중앙·교육청·학교의 취업지원기능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취업지원인력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설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관보)</p>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지도·감독 등),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제99조(과태료): 내용 신설 및 조항 번호 변경	2022.02.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배달·운전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영을 추가하고,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배달·운전 등의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공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관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p>가. “필수업무”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필요한업무로서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지원위원회의 심의를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업무로정의함(제2조제2호).</p> <p>나.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제공하는사람으로서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지원위원회의 심의를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사람으로정의함(제2조제3호).</p> <p>다.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소속으로 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지원위원회를두도록함(제6조및제7조).</p> <p>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전국적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제8조).</p> <p>마.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을 심</p>	2021. 11. 19	<p>코로나 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 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의료·돌봄·대중교통종사자는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함에 따라 감염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이륜배달차·환경미화원 등은 취약한 근무환경으로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높으며,택배기사등은 인력부족과 불명확한 업무범위 등으로 상시적으로 장시간 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p> <p>이와 같이 필수업무의 취약한 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국민안전 및 사회기능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미국·캐나다 등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음.</p> <p>이에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p>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p>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지역위원회를둘수있도록함(제9조및제10조).</p> <p>바.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에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정,종사자보호·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함(제11조).</p>		<p>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수립 등을 통해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관보)</p>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내용 변경, 제41조의2(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 신설,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 내용 삭제	2021. 6. 9	<p>현행법에 따르면 코로나 19와 같은 공기전파성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확진자와 동선을 대조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바,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공기전파성질병의 업무상 재해입증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관보)</p>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내용 변경 및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단서 삭제(종사자 본인이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1. 7. 1	<p>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 적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실제 적용자가 소수임. 이에 따라 적용 제외 사유를 개선함. (관보)</p>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53조(부분휴업급여) 내용변경, 제91조의15(노무제공자등의정의), 제91조의16(다른조문과의관계),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대한보험급여의산정기준등),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대한업무상의재해의인정기준),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대한보험급여산정특례),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대한보험급여의지급), 제91조의21(플랫폼운영자에대한자료제공등의요청)신설, 제116	2023. 7. 1	<p>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사각지대가 발생. 이에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p>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조(사업주등의조력)내용신설, 제 117조(사업장등에대한조사)내용 변경,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 자에대한특례)삭제, 제129조(과 태료)내용변경및신설		정의를 신설하고 산재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관보)	

〈부표 4〉 고용 영역 시행령 개정(2020년 1월~2022년 8월)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6항~8항, 제13조, 제29조, 제30조의2 기존에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만 있었는데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가 추가로 신설되면서 관련 내용들이 추가됨.	2022.02.18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지역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위한 법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법 변경 (관보)	·관보(대통령령 제32446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정책 기본법 대통령령 제 제3244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6조의 2, 제 18조, 제 26조, 제 29조, 제 35조, 제 38조, 제 39조, 제 40조, 제 41조, 제 49조, 제 52조, 제 56조, 제 95조, 제 95조의 2 육아휴직 지원 확대	2020.03.31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증액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관보)	·관보 「고용보험법 시행령」(법률 제3059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 금액 확대	2020.04.28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종전에는 해당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 피보험자의 임금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이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	·관보 「고용보험법 시행령」(법률 제30643호)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원을 확대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p>제21조의3, 제22조의2, 제26조, 제35조, 제37조의3, 제40조, 제47조의2, 제56조, 제145조 조신주요내용 다음과 같음. 가.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확대(제21조의3제5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2021년6월30일까지는 무급휴직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무급휴직피보험자에 대해서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금의 지원요건과 수준을 고시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급휴직피보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p> <p>나.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제22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등 다양한 노사합의를 통해 해당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p> <p>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확대(제26조제8항 신설, 부칙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촉진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달리 정하여 일정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p> <p>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 신설)</p>	2020.06.09	<p>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휴직을 실시한 경우 무급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확대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양한 노사 합의를 통해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관보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773호)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시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24조, 제41조, 제42조, 제61조, 제80조의 2, 제81조, 제142조의 2, 제145조, 제145조의2: 고용보험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부정수급 등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2020.08.28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또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에 관한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관보)	·관보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8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41조, 제42조 ◇주요내용 가.무급휴직고용안정지원금지급요건완화(제21조의3제1항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을 보전하는 조치를 3개월 이상한후 근로자에 대하여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을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하던 것을,앞으로는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도록함. 나.사업주의유급휴가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요건완화(제41조제1항제5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명 미만 인 사업주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2020년12월31일까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기간 동안에 3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어 18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2020.09.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속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무급휴직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요건과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관보)	·관보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3107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90일”을 “30일”로 한다. 변경내용: 고용유지지원금	동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속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지원기간 연장(안 제21조제2항) 현행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180일만 지원금지급이 가능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등으로 인해 고용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지원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음.이에 2020년에 한하여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여 240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정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0년에 한하여 60일을 연장하여 사업주와 재직자의 고용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관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보험연도의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240일에 이를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2020.1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속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금년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상한을 연간 180일에서 60일을 연장하여 연간 24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관보)	·관보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3112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83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6, 제104조의7, 제104조의8, 제104조의9, 제104조의10, 제104조의11, 제145조, 제145조의 2 ◇주요내용 가.고용보험적용대상예술인의범위(제104조의5제1항및제2항신설) 1)「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예술활동증명을 받지못하였거나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실연(實演),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을 고용보험적용대상 예술인으로 정함. 2)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소득기준을 사업주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	2020.12.10	예술인이 실업 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42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의 범위, 예술인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및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p>득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함.</p> <p>나.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이 중취득(제104조의6제7항신설)</p> <p>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근로계약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이 중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함.</p> <p>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지급요건(제104조의8제1항및제3항신설)</p> <p>1) 소득감소를 이유로 이직한 예술인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이직한 달의 직전3개월 동안에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100분의 20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함.</p> <p>2)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6만 6천원으로 정함.</p>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관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3, 제38조, 제61조 재단과 같은 사항에서 휴업 등에 따름 피보험자 지원요건,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 내용 신설	2021.01.01	<p>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파견사업주 및 수급사업주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별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후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난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의</p>	·관보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31324호)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요건을 갖추고 소속 피보험자에 대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보)	
고용보험법 시행령	<p>제145조의2 노무제공자의 생활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내용 신설 및 내용 추가.</p> <p>◇주요내용</p> <p>가.고용보험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제104조의11제1항및 제2항신설)</p> <p>1)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를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집화(集貨) 또는 배송업무를 하는 택배원,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점원, 방과후학교강사 등 12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로 정함.</p> <p>2)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기준을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거나,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80만 원이상인 경우로 정함.</p> <p>나.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제104조의12제4항신설)</p> <p>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함.</p> <p>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제104조의14제1항 및 제4항 신설)</p>	2021.07.01	<p>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무제공자의 생활안정과 조기재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 (법률제 17859호, 2021.1.5. 공포, 7.1.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적용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관보)</p>	관보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31748호)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p>1)소득감소를 이유로 이직한 노무제공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이직한 달의 직전3개월 동안에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100분의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함.</p> <p>2)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6만6천원으로 정함.</p> <p>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제104의15제1항 신설)</p> <p>노무제공자인피보험자의출산전후급여등의지급요건은출산또는유산·사산을한날이전에노무제공자로서의피보험단위기간이합산하여3개월이상이고,출산전후급여등의지급기간에노무제공을하지않았으며,출산또는유산·사산을한날부터12개월이내에출산전후급여등을신청한경우로정함.</p>			
고용보험법 시행령	<p>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p>	2022.01.01	<p>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관보)</p>	·관보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32301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p>소프트웨어기술자, 유통배송기사 등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 및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내용 추가 및 이에 따른 내용 변경</p>	2022.07.01	<p>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기술자, 유통배송기사 등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 및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p>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0호)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을 지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령 등으로 정하고 있는 지원금 신청기간에 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기준(제30조제1항제3호) 나.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직접 반환청구사유(제31조의2 신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한 자료제공요청의 범위 확대 (제54조의2제19호의2부터제19호의8까지신설)	2020.01.1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관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산정(제19조의3제1항 신설) 나.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제19조의6 신설) 다. 예술인의 보수액산정 및 고용보험료율(제56조의5제1항및 제2항신설)	2020.12.10	예술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술인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고 그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8호, 2020. 6. 9. 공포, 12.10.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의 월별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 예술인의 보수액 및 고용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관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보수액의 산정(제19조의3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6조의6제1항 제2항 신설) 나.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 및 고용보험료상한(제56	2021.07.01	실업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p>조의5제2항, 제56조의5제3항및 제56조의6제3항-제4항신설)</p> <p>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제56조의10신설)</p>		<p>징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7858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월평균 보수, 고용보험료를 등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경감 대상 직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관보)</p>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가.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상향(제12조제1항제2호, 제56조의5제2항 및 제56조의6제3항)</p> <p>나.도급인 등의 개별실적요율산정(제18조제2항신설)</p> <p>다.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수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의 적용기준(제18조제3항부터제5항까지및별표1의2신설)</p> <p>라.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범위(제56조의7신설)</p>	2022.01.01	<p>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사업과 관련된 고용보험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급인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 등의 개별실적요율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최근 3년 동안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 17858호, 2021. 1. 5. 공포, 2022. 1. 1. 시행 및 법률 제 18036호, 2021. 4. 13.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 등의 개별실적요율 산정,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에</p>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다른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 및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9조의3,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54조의2, 제56조의6, 제56조의8, 제56조의13소프트웨어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내용 신설 및 보완	2022.07.01	제공자에 대한 월평균 보수 산정방법을 정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인 개별실적요율의 적용대상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에 학생 연구자 수를 포함하고,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보)	· 대통령령 제32731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제3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제5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한 대상), 제11조(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제1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확대 및 지원금 확대	2021.09.07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수급자격의 인정기준인 가구 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로 받는 비과세급여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 관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75호)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기준인 가구 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가구의 재산 합계액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역 전이라도 취업지원이 가능한 사람에 대한 신속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개월 이내에 전역예정인 군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진로상담 등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및 종료(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1항)</p> <p>1)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출산예정일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하되,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p> <p>2)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에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도록함.</p>	2021.11.19	<p>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고용에서의 차별적 처우 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차별적 처우의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및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절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의 부</p>	·관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131호)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관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학생가.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조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재학생 제22조제1항제1호각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을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각목 외의 부분단서 중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목에 해당하는”으로, “달리”를 “별도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 중 “법제16조제3항, 법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을 “법제16조제3항·제19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2021.09.29	대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을 “대학졸업이 예정된 사람”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등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중 최소 훈련기간을 없애고 최소 훈련시간도 16시간 또는 8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상으로 줄이려는 것임. (관보)	·관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1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명칭 변경가. 제명 변경 및 적용 대상 등의 정비(제명, 제1조 등) 법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에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제6조, 현행 제7조제2항 삭제) 1)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2022.02.18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관보 대통령령 제32447호(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p>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등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대상에서 제외함.</p> <p>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제6조의2 신설) 난민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른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아니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p> <p>2)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p> <p>라.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1 제2호)</p> <p>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세부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1차위반시 시정명령,2차위반시 훈련정지 3개월,3차 이상 위반시 지정취소로 각각 정함.</p>		<p>대상 등을 정비하며,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관보)</p>	
근로기준법 시행령	<p>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제22조(보전 개상 서류 등), 제23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51조, 제59조: 탄력근무제에 관한 내용 추가</p>	2021.04.06	<p>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를 정하고,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p>	<p>·관보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84호)</p>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관보)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천재지변 등”을 “임금 감소 또는 재난”으로 한다. 5.사업주의 휴업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0.11.03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그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에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추가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에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관보)	·관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40호]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령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⑤기금법인이 제4항제3호에 해당 하나 복지기금협의회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이 있는 날(제2호의 경우에는 기준달의 말일로 하며, 제1호 각목 또는 제2호 각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직전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가 해당금액을 정한 후 5년 이내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그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없다.	2021.01.0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 근로자 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 및 해당 사업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거나 해당 사업주의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으로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등에	·관보 대통령령 제31364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p>1.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p> <p>1.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주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있는 지역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있는 경우</p> <p>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4조제1항및제4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p> <p>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p> <p>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p> <p>2.우리사주주식을 구입하는 경우</p> <p>2.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주가 다음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이하이호에서“기준달”이라 한다)말일의 해당사업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이하이호에서“직전연도”라한다)의 월평균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p> <p>나.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생산량,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의 같은달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p> <p>다.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의 월평균매출액,기준달 직전3개월의 월평균매출액 또는 직전</p>		<p>는 직전회계연도기준 기본재산총액의 100분의30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보)</p>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연도의 같은달 매출액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라. 기준달의 원자재가격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원자재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가격 또는 직전 연도의 같은달 원자재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 요건) 내용변경, 신설,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제25조(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제한), 제3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용어변경	2022. 8. 2	외국인 근로자를 산업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협약서를 제출해야만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사용자가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용자는 근로계약해지를 이유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보)	

〈부표 5〉 사회서비스 영역 법 개정(2020년 1월~2022년 8월)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 자격변경 “장기요양급여를받지못하게 된사람”을 “혼자서사회활동을하기어려운사람”으로 변경.	2021.1.1	활동지원급여의 대상자격 확대하여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함 (관보)	·관보(법률 제17793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단서삭제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활동지원급여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2021.1.1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 그 해당 월의 다음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제 12조 1항에 따르도록 함. (관보)	·국가법령정보(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활동지원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신청서작성,제출 등을 지원함	2022.1.1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대상자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다양화함 (관보)	·관보(법률 제18222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 자격신설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 대상자 추가	2023.1.1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함(관보)	·관보(법률 제18901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단서조항 세부내용 추가	2023.1.1	활동지원급여의 대상자격 확대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강화하려 함 (관보)	·관보(법률 제18901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부표 6〉 사회서비스 영역 시행령 개정(2020년 1월~2022년 8월)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내용 변경 장기요양보험료율의변경,1만분의 1,025	2020.1.1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에 필요 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요율 인상 (관보)	·관보(대통령령 제30289호(노 인장기요양보험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 터(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시행 령)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내용 변경 장기요양보험료율의변경,1만분의 1,152	2021.1.1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에 필요 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요율 인상 (관보)	·관보(대통령령 제31322호(노 인장기요양보험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 터(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시행 령)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내용 변경 장기요양보험료율의변경,1만분의 1,227	2022.1.1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에 필요 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요율 인상 (관보)	·관보(대통령령 제32236호(노 인장기요양보험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 터(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시행 령)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 상 및 기준 등)	2022.2.3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이나 격리조치 등(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발생으 로 양육수당지원신청 이 지연된 경우 소급 적용하도록 하여 양육 수당 지원 확대 (관보)	·관보 (대통령령 제32385호(영 유아보육법 시 행령 일부개정 령)) ·국가법령정보센 터(영유아보육 법 시행령)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긴급활동지원) 긴급활동 지원 상황 변경 화재>감염병 또는 화재	2021.1.1	긴급활동지원을 제공 할 수 있는 대상에 감 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도 포함됨 (관보)	·관보 (대통령령 제32298호(장 애인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 령)) ·국가법령정보센 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 률)

〈부표 7〉 보건 영역 법 개정(2020년 1월~2022년 8월)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청 공동소관)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신설.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020.9.5.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보)	·관보 법률 제 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청 공동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청 공동소관)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 등 감염병의 심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지만,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그러하지 않음	2020.8.12.	현행법은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에 대해서도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제한 없이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므로,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관보)	·관보 법률 제 1747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청 공동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청 공동소관)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감염병위기관리대책에 5의2.감염병 발생 및 전파상황에 따른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대응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 신설	2020.9.29.	실제 현장에서 감염병을 대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관보)	·관보 법률 제 1749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청 공동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청 공동소관)	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시도지사가 실시 및 위탁하는 심리지원경비 시,도가 부담	2020.9.29.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환자와 의료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리지원과 환자의 중증도 변화에 따라 적절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보)	·관보 법률 제 1749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청 공동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청)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국가가 실시 및 위탁하는 심리지원경비 국가가 부담	2020.9.29.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환자와 의료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리지원과 환자의 중	·관보 법률 제 1749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공동소관)			중도 변화에 따라 적절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보)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청 공동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청 공동소관)	제70조의5(손실보상금의 긴급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7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우선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환자와 의료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리지원과 환자의 중증도 변화에 따라 적절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보)	·관보 법률 제 1749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청 공동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청 공동소관)	제70조의6(심리지원)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그 가족,감염병의 심자,감염병 대응의료인,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에 따른 심리지원을 할 수 있다. 심리지원을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29.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환자와 의료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리지원과 환자의 중증도 변화에 따라 적절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보)	·관보 법률 제 1749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청 공동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청 공동소관)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 추가	2020.12.15.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관보)	·관보 법률 제 1764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청 공동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청 공동소관)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감염취약계층”이라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제2항에	2020.12.15.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관보)	·관보 법률 제 1764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p>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감염취약계층에 저소득층, 장애인 및 기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 추가 마스크지급에서 의료,방역물품으로 변경</p>			한 법률(질병청 공동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청 공동소관)	<p>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5의2.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전파상황 별 대응 방안</p>	2021.03.09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관보)	<p>·관보 법률 제 1792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청 공동소관))</p>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청 공동소관)	<p>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의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p>	2021.3.9.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관보)	<p>·관보 법률 제 1792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청 공동소관))</p>
검역법	<p>제4조의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신설 검역관리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 명시(보건복지부장관담당)</p>	2021. 3. 5.	검역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역체제를 개선하기 위함(관보)	<p>·관보 법률제17068호(검역법 일부개정법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의료법」, 2월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배포일 2020. 2. 26.</p>
검역법	<p>제13조(검역 전의 승선·탑승) 제2항 개정 검역감염병증상이 있거나 검역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경우</p>	2021. 3. 5.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 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	·관보 법률제 17068호(검역법 일부개정법률)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즉시 검역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추가		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관보)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제2항 개정 해당법률에 보건복지부령적용 입국장->입국장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장소 제15조(검역조치)제4항개정 법률담당자변경(해당검역소장->질병관리청장) 및 일부내용수정 (알리고검역소장이->알리고회향 또는) 제16조(검역감염병환자등의격리)제1항제1호개정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시설'->'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로 내용 개정 제27조(선박위생증명서의발급 등)제4항개정 적용법률추가 (면제증명서->면제증명서 및 제2항·제3항에 따른 선박위생관리증명서) 제29조(검역구역의보건위생관리)제2항개정 법률담당자변경(검역소장->질병관리청장) 제34조(수수료의징수)제1호개정 적용법률추가[제4호의2(검역관리기본계획의수립·시행등)]	2022. 6. 22.	코로나 19의 발생에 따른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입국자뿐만 아니라 출국자도 감염병에 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 가능 장소 범위를 확대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회향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화하는 등의 각종 내용을 보완함(관보)	·관보 법률제 18604호(검역법 일부 개정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공유재산무상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축조 가능하나, 기간 끝날 때 지자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함	2020.4.7.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는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 (관보)	·관보 법률제 17194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21.9.2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관보 법률 제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료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의2(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역할 명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보)	17965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다음 내용 포함되어야 함.아래 내용 신설 3.공공보건의료확충을 위한 인력,병상,시설 등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및 조달 방안 4.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구축·관리 방안 5.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계층·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6.공중보건위기상황시 대응방안 7.그밖에공공보건의료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2.2.18.	코로나 19 성공적인 방역에 비해 의료적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 확인. 공공병상 부족과 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반복. 입원 대기 중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진 바 있음. 그리고 의료 자원이 코로나 19 방역 및 진료에 집중됨에 따라 기존 필수 의료서비스에도 차질 발생. 이에공공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강화요구, 공공보건의료인프라의 확충 등 양적 확대, 민간영역에도 공공적 역할이 강조되는 기능, 역할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이 과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관보)	·관보 법률 제 18411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보건의료책임의료기관지정 조건 명시	2022.2.18.	현행법에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이 부진하다는 지적 (관보)	·관보 법률 제 18411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18조(의료취약지역의료기관등의지정취소) 제19조(청문)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2022.2.18.	협력 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의 범위를 넓히며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운영 근거를 마련 (관보)	·관보 법률 제 18411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터, 책임의료기관추가			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밖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수정	2022.2.18.	현행법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의 지원을 위해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내에 적절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위탁이 어려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위탁대상을 확대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관보)	·관보 법률 제 18411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1인1개설위반 및 면허대여의료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지급보류 및 부당이득환수조치 가능	2021.6.30.	보험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보)	·관보 법률 제 1777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지역별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6.30.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관보)	·관보 법률 제 1777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과징금) 아래 항목에 해당할 시 요양급여적용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가능 1.환자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것으로 예상되는 때:해당약제에 대한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0을 넘지아니하는 범위 2.국민건강에 심각한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60을 넘지아니하는 범위 약제요양급여과징금부과기준 또한 신설 과징금사용용도 추가	2021.12. 9.	의약품공급자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과징금 처분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관보)	·관보 법률 제 1821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평가원의요양급여적정성평가 실시 내용 신설	2022.12.1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관보)	·관보 법률 제 1889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건강도시)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조성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6.22.	최근 몇년 간 발생하고 있는 전 세계적 감염병 사태를 비롯한 신종 질병의 발생과 관련하여 환경적 건강의 중요성 또한 부각.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도시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관보)	·관보 법률 제 18606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시·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단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가능,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6.22.	최근 몇년 간 발생하고 있는 전 세계적 감염병 사태를 비롯한 신종 질병의 발생과 관련하여 환경적 건강의 중요성 또한 부각.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도시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관보)	·관보 법률 제 18606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2020.9.12.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관보)	·관보 법률 제 17472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2021.3.23.	보건의료정책에 이해관계인인 환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	·관보 (법률 제 17966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는 사람을 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체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균형있게 구성,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수 변경	터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제4항 신설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이 법률상시설, 인력 및 장비 등 지정기준을 예외적으로 준수하지 않을수 있도록 하는 법률 마련	2021.9.24.	코로나 19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들이 감염병 방지 및 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예: 선별진료소 설치 위해 응급전용 주차장 사용) 이에 따라 다수의 응급의료기관들이 불가피하게 응급의료법령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음. 이에 감염병유행,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상황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활용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법령 위반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관보 - 법률제 17968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급신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8.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제도 접근성 및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서 지원대상자의 재난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보)	·관보 법률 제 18223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법률)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제1항 개정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제1항제1호, 제2호 신설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제2항제2호개정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제3항개정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제4항개정(중전의3	2020.12.29.	최근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피해자나 가족의 경계를 넘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의 20%가 불안과 우울 증상을 보이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관보 법률제 17794호(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법률)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p>항에내용추가)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제5항신설(중전의4항에내용추가)</p> <p>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대상 확대 및 권역별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p>		<p>이에 국가트라우마 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재난·사고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재난·사고현장 대응업무 종사자로 확대함.</p> <p>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지원을 위해 권역별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트라우마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관보)</p>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p>제4조(설립 및 등기) 제1항 개정</p> <p>지방의료원설립기준 등과 관련된 내용 개정</p> <p>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p>	2021.9.24.	<p>코로나 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공공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공공의료 병상을 늘릴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게 함(관보)</p>	·관보 법률제 17970호(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지역보건법	<p>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제2항 개정(기존의 제2항을 없애고 신설)</p> <p>제21조(서비스제공의결정및실시)제3항신설(중전의2항)</p> <p>지역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신청자의 소득·재산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추가조사를 생략하고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판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p>	2022.1.1.	<p>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재산 등 조사를 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기항목 등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관보)</p>	·관보 법률제 18335호(지역보건법일부개정 법률)
지역보건법	<p>제10조(보건소의 설치) 제1항 개정 및 단서 신설</p> <p>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있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 등</p>	2022.8.18.	<p>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 및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보건소 추가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함(관보)</p>	·관보 법률제 18418호(지역보건법일부개정 법률)

〈부표 8〉 보건 영역 시행령 개정(2020년 1월~2022년 8월)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질병관리청 공동)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진료비신청기한 추가:예방접종 피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장애인지급기준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변경 사망한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신청기한 추가: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2020.6.4	관보에 개정이유가 안 적혀있음 (대통령령 3074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보 (대통령령 3074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질병관리청 공동)	제23조의3(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지원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한다. 유급휴가비용지급 관련 내용 상세신설	2020.10.13.	관보에 개정이유가 안 적혀있음 (대통령령 3111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보 대통령령 제3111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질병관리청 공동)	제28조의6(심리지원의 대상 등) 심리지원 받을 수 있는 현장대응인력의 범위 신설. 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방역관,역학조사관 등	2020.12.30.	관보에 개정이유가 안 적혀있음 (대통령령 3132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3132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대상 1세미만에서 2세로 변경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에서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에 드는 비용으로 변경하나 태아 임신,출산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 이상 태아 임신,출산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향 조정	2021.6.30.	임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및 이용권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이용 상한액을 늘림. (관보)	·대통령령 318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에 출연하는 금액의 상한은 전전년도 보험료수입액의 1천분의 1로 한다.신설	2021.10.14.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하는 금액의 상한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천분의 1로 하기 위하여(관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2021.10.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대통령령 제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험법 시행령	및 분할납부) 다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이상의 위기경보가발령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액을 10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액을 10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기 위하여(관보)	320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1만분의 686에서 699로 변경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201.5원에서 205.3원으로 변경	2021.12.9.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조정	·대통령령 제3219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제4항 신설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필요가 있을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인국가시험의공고기간단축이 가능하다는 조항 신설	2021.1.12.	의료현장에서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하기 위함(관보) 코로나 19사태 등 보건위기상황에서 의료인력의 수급 차질을 빚지않게 하기 위함(공공보건포털G-health 뉴스 참고)	·관보 대통령령 제31398호(의료법시행령일부개정령) ·공공보건포털 G-health, 보건위기 땐 의료인 국가고시 공고기간 단축... 추가시험 근거 마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원기준)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에서 100분의 80으로 변경. 또한 소득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에서 100분의70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신설	2021.11.1.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률적 지원에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제32098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이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혹은 보건관계기관에서 전공의가 근무하는 경우,예외적으로 겸직으로 보지않도록 관련 법률 추가	2021.3.2.	전공의는 원칙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음. 그러나 재난발생 시의료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겸직 근무로 보지않는 경우를 명시함	·관보 대통령령 제31512호(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보건소의 추가 설치) 제1항 및 제2항 개정	2022.8.18.	인구 고령화와 감염병 확산 등에 적절히 대	·관보 대통령령 제32864호(지

제도명	변경 내용	시행일	제도 변화 사유	출처
	보건소의 추가설치에 관한 규정 사항 개정		응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등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함(관보)	역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항 개정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확대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항 신설 질병관리청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및 적용 법률 명시 별표의 개정사항은 반영 X	2022.2.22.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등 관련 기관의 인력 증원 및 법률 신설(관보)	·관보 대통령령 제32488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제3항 개정 치매검진사업의 검진주기를 6개월→2년 이내로 변경	2021.6.30.	현재 치매검진이 1년 내지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치매검진사업 주기를 6개월에서 2년 이내로 연장(안 제8조) -출처: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mob/ogLmPp/62764	·국민참여입법센터,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mob/ogLmPp/62764